

碩士學位論文

日本の 軍事力 強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2007年

漢城大學校 國際大學院

地域情報學科

東亞細亞地域專攻

徐 廷 雄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柳 賢 相

日本の 軍事力 強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A Study concerning the influence to which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effects R.O.K security

2006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國 際 大 學 院

地域情報學科

東亞細亞地域專攻

徐 廷 雄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柳 賢 相

日本の 軍事力 強化가 韓國安保에
미치는 影響에 관한 研究

A Study concerning the influence to which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effects R.O.K security

위 論文을 國際地域情報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12月 日

漢 城 大 學 校 國 際 大 學 院

地域情報學科

亞細亞東地域專攻

徐 廷 雄

徐廷雄의 國際地域情報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6年 12月 日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目 次

제 I 장 序 論

제 1 절 연구목적	1
제 2 절 연구범위 및 목적	3

제 II 장 理論에 관한 一般的 考察

제 1 절 국가안보와 국방정책의 제 이론	
1. 안전보장과 국가안보	5
2. 국방정책	11
제 2 절 군사력에 관한 이론	
1. 군사력의 개념	13
2. 군사력의 구성요소	14
3.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	16
제 3 절 한·일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지정학 이론으로 본 한일관계	19
2. 유사동맹 모델로 본 한일관계	23
3.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일관계	26

제 III 장 日本의 安保戰略과 防衛政策

제 1 절 일본의 안보환경과 위협인식	
1. 국제정세 전반에 대한 인식	28
2. 일본주변에 대한 안보환경 인식	29
3. 일본 자체에 대한 안보환경 인식	30
제 2 절 일본의 안보전략	
1. 안보목표 및 안보전략	32
2. 대동북아 및 대한반도 전략	35
제 3 절 일본의 방위정책	
1. 방위정책의 기본원칙	37
2. 군사력건설 정책	43

제 IV 장 日本의 軍事力 增強實態 및 海外投射能力

제 1 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과정

1. 창군초기 (1950-1957) 46
2. 냉전기의 군사력 증강 (1958-1990) 47
3. 90년대 이후 탈냉전기 (1991-2000) 50

제 2 절 일본의 현 군사력실태 및 향후 전력증강 계획

1. 일본의 군사비 53
2. 자위대의 전력 55
3. 향후 군사력증강 계획 72

제 3 절 일본의 군사력 해외투사능력

1. 독자적인 전략적 감시 능력 80
2. 원양작전 및 해상수송 능력 84
3. 원거리 공중작전 및 항공수송 능력 91

제 V 장 日本의 軍事力 強化와 韓國安保

제 1 절 한·일간의 안보환경

1. 우호 및 협력요소 99
2. 대립 및 갈등요소 100

제 2 절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1. 지역 및 한반도 안정화에 기여 102
2. 군비경쟁 유발 및 한국의 안보부담 가중 104
3. 군사력에 의한 한·일 현안문제 해결 시도 106

제 3 절 한국의 대비방향

1. 자주적 국방역량 확충 107
2. 한·미동맹 강화 108
3. 한·일 안보협력체제 공고화 110
4. 지역 안보협력기구 구축 도모 112

제 VI 장 結 論 113

참고문헌 118

영문초록 123

표 목 차

<표 2- 1> 안보범위확장에 따른 안보요인의 변화	6
<표 4- 1> 주요국가 국방비 비교	53
<표 4- 2> 방위비 계산방식.	54
<표 4- 3> 일본 자위관 정원 및 현재원	61
<표 4- 4> 자위관 신분별 인원현황.	62
<표 4- 5> 육상자위대 주요장비 및 보유수	65
<표 4- 6> 주요국가의 보유 함정 현황	67
<표 4- 7> 해상자위대 주요 함정 현황	68
<표 4- 8> 해상자위대 항공기 현황	69
<표 4- 9> 항공자위대 항공기 현황	70
<표 4- 10> 일본 新舊 방위계획대강의 정비규모 비교	76
<표 4- 11> 신중기방(05-09)기간 중 방위력 정비계획	79
<표 4- 12> 군사정찰위성 주요 제원 및 성능	81
<표 4- 13> 일본 이지스함 ‘콩고’급의 주요 제원	85
<표 4- 14> 일본 ‘오스미’함의 주요 제원	89
<표 4- 15> E-767 과 E-2C의 성능비교	92
<표 4- 16> F-2 전투기의 주요제원 및 성능	94
<표 4- 17> 공중급유기 주요성능 및 제원	96
<표 4- 18> C-1 후속기와 기존 수송기의 비교	98

그 립 목 차

<그림 4- 1> 일본의 국방조직 및 지휘체계도	56
<그림 4- 2> 통합막료장과 육, 해, 공 막료장의 관계	59
<그림 4- 3> 일본군 신분별 구성 비율	63

제 I 장 序 論

제 1 절 研究目的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국제정치체제는 여전히 미국을 유일 초강대국으로 하여 러시아, 중국, EU, 일본 등 기존의 강대국들이 국제정세를 주도하여 왔다. 이와 같이 강대국이 주도해 오던 국제정세는 9.11테러 이후 급속히 국제테러조직과 같은 비 국가단체나 국제규정을 무시하는 소위 불량국가¹⁾가 위협의 주요 대상이 되면서 이들이 국제정세의 향방을 주도하는 현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은 역내 국가간 경제적인 상호 의존성 증대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적대감과 영토, 해양주권 문제 등 다양한 분쟁요인에 따른 국익 상충으로 갈등이 존재하는 가운데, 정보·지식 중심의 군사변혁을 통해 역내의 영향력 확대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다.²⁾ 특히 2003년 1월 북한의 NPT 탈퇴를 계기로 북한의 핵프로그램 종단을 위한 남·북한과 미, 일, 중, 러 간의 6자회담이 열리는 등 이 지역이 국제정세의 중요한 발원지가 되어 왔다. 6자회담이 시작된지 3년여의 기간이 지났지만 회담의 성과와 진전이 미미한 채 지내오던 중 급기야 2006년 10월 9일 북한은 핵실험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하여 국제정세의 초점은 급속하게 동북아 지역으로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이의 직접적인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대응책에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65년 수교 이래 지금까지 한·일간에는 경제, 문화, 과학기술 등 다방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중반기 이후에 들어서면서 20세기 초 일본의 한반도 강점을 중심으로 한 過去史 문제와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그리고 EEZ 문제, 동해 표기문제 등에서 양국간 국익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군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 긴장관계로 변모해 지고 있다.

1) 북한,이란,이라크,리비아,시리아,수단,쿠바 등의 소위 '깡패(불량)국가(Rogue state)'가 미 국무부의 '테러지원국'명단에 올리면서 붙여진 용어.

2) 국방정보본부, 『세계군사동향』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6), p.8.

이런 가운데 일본은 그동안 군사력을 착실히 증강해와 지금은 자국방위는 물론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능력³⁾을 넘어 세계를 지향하는 막강한 군대로 발전하였다. 일본은 2004년 12월 급기야 "2005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을 책정하면서 군사력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국제활동에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하기에 이르렀다.⁴⁾ 태평양전쟁 패전으로 군사력이 "제로"상태였던 일본은 전후 60년이 지나자 재군비를 완성하고 다시 세계무대로 나와 군사력을 앞세워 국제정치의 주도국 자격을 얻으려 하고 있다.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우리의 해양진출의 관문으로서 국제화 시대에 해외 무역을 통한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유대강화가 요망되는 나라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불과 100년 전에 36년간이라는 장구한 기간 동안 식민통치를 당했던 악연을 맺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력의 해외진출은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무력의 해외투사에 대하여 우려와 경계의 눈으로 바라만 볼 것인가?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가장 인접한 국가로서 앞으로 장구한 세월을 함께 살아가야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따라서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군사적 동향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문명의 시대에 문명인으로서 공존공영의 길은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군사력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한 국가의 최고의 가치는 국가의 생존이며, 군사력은 국가생존의 마지막 보루이다. 아울러 군사력은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담보력이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국가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이익 확장을 위한 압력용인지를 우리는 인접국가로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의 실체를 바로 알고 올바른 대응책을 강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국제화 시대에 평화와 안정 속에 국가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

3)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능력이란 일본 영해기선으로부터 미국령 남태평양의 괌에서 대만해협을 연하는 선까지 방위할 수 있는 해군력을 보유하겠다는 것임.(4장 3절 참조)

4)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pp.476-478.

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아래와 같이 4가지 문제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 어떤 함수관계를 갖는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안보와 국가전략, 국방정책 등에 관한 개념과 군사력의 정의 및 군사력은 국가이익과 국가안보에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주는가?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하여 관련 이론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정부의 안보관과 안보전략, 방위정책의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세계, 일본 주변지역, 일본 자체에 대한 일본인들의 안보정세에 대한 인식을 고찰한 후 일본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안보목표, 이의 추진전략, 방위관련 제 시책, 군사력 건설정책 등을 규명하고자 한다. 셋째, 일본의 재군비 과정과 현재의 군사력 수준, 그리고 향후 군사력건설 계획을 규명한 후, 이러한 군사력의 해외로의 투사능력을 심층 분석하여 위협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고자 한다. 넷째, 일본의 강력한 군사력 보유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영향과 대비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 2 절 研究範圍 및 方法

본 논문의 연구범위는 기간면에서 냉전종식 이후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축소시키고 있는 추세와는 달리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 실체를 2010년대 초반에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용면에서는 일본의 안보목표 및 전략, 방위정책, 그리고 현존전력 중심의 군사력의 실체를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각 장(章)별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제1장 서론에는 우리와 역사적 측면에서 일본이 안보면에서 어떠한 대상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인식을 제기하였다. 이어 제2장에서는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군사력 등 안전보장과 관련되

는 용어들의 개념해석과 몇몇 국제정치 이론으로 본 한·일관계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본 연구의 핵심이 일본의 군사력에 관한 것이므로 군사력 부분에서는 개념 정의와 구성요소,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 등 보다 구체적으로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일본이 국제 및 주변지역에 대한 안보환경, 그리고 일본 자체의 지정학적 안보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진단하였다. 그리고 일본의 안보전략과 방위정책을 분석하였는데 여기서는 일본 정부가 공표한 방위백서 등 공식문서를 근거로 2004년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일본의 군사력의 실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데, 2004년 이후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식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하였다. 한 국가의 군사력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해·공 병력과 이들의 보유 장비 등의 유형전력과 군사전략과 준비태세 등 무형요소까지 파악해야 하나 본 논문에서는 군사비, 육·해·공 자위대의 병력과 주요장비에 국한하여 분석하였고, 2015년까지의 중장기 전력증강계획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의 특징적인 부분인 일본의 군사력 해외투사능력을 집중 분석하였다. 특별히 군사력의 해외투사능력을 강조한 이유는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自衛”(자국방위)를 위한 전력인지, 아니면 외국을 침략할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 인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한·일간의 안보적 측면에서의 갈등요소와 협력요소에 대하여 파악해본 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내용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일본 정부 및 정부유관 부서에서 발간한 공적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그리고 객관성과 타당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 학계와 군사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발간한 연구논문, 학술지 및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다. 각종 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문헌조사에 의한 설명의 타당성 방법’에 의존하여 기술해가는 서술적 접근방법을 택하였다.

제Ⅱ장 理論에 관한 一般的 考察

제 1 절 국가안보와 국방정책 이론

1. 안전보장과 국가안보

국가안보란 한 나라의 안전보장에 관한 것으로 그 국가의 존망 등 생존에 관한 것이므로 국가가 다루어야 할 많은 것들 중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안보는 안전보장이라는 개념 중 적용범위 또는 수준에 따라 개인 또는 인간안보, 국가안보, 국제 및 지구적 안보 등으로 구분되는 것 중 하나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중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논하려 한다. 국가안보는 흔히 국가전략 또는 국가안보전략과 혼용되기도 하는데 이를 논하기 전에 우선 안전보장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안보 및 국가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가. 안전보장 개념

안전보장(Security)이라는 용어는 원래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se와 curitas의 합성어로서 “se”는 ‘분리한다’, ‘...로부터 자유롭다’는 뜻이다. 그리고 “curitas”는 ‘불안’, ‘근심’, ‘걱정’이라는 뜻으로 영어의 care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라틴어의 어원에서는 불안이나 근심, 걱정 등으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옥스퍼드 영어사전에는 security를 첫째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있거나 노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고, 둘째는 ‘의심으로부터 확신’이라고 하였으며, 셋째는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 안정감 혹은 위험으로부터 자유 또는 위험의 부재’ 등으로 설명하였다.

한편 영어의 security를 ‘안전보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일본인들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창설된 국제연맹 규약을 번역하면서 ‘안전보장’이라고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⁵⁾

이와 같은 사전적 의미를 갖는 안전보장의 개념은 연구자의 시각이나

5) 박정규, “한반도 해양전략발전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대학교, 2004). p.24.

안보환경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 및 정의 되고 있다. 월트(Walt)는 “안보란 군사력의 위협, 사용, 통제에 관한 것”으로 정의했고, 모간(Morgan)은 “국제적으로 교묘히 가해지는 물리적인 피해로부터의 안전”이라고 했다. 부잔(Buzan)은 “안보란 인간집단의 운명에 관한 것으로 위협으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며 안보의 최저 목표는 생존이다. 이러한 생존의 조건으로 다섯 가지 주요 분야(군사, 정치, 경제, 사회, 환경)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올퍼스(Arnold Wolfers)는 “객관적 의미로 안보란 획득한 가치들에 대한 위협이 없는 것을 의미하며 주관적으로는 이러한 가치들에 대한 박탈 우려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들 학자들의 안보개념을 종합하면 안전보장(security)란 어떤 개인, 단체, 국가 등의 운명이나 중요한 가치를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유지하거나 지켜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보의 주요 요소로는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 비군사 분야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표 2-1> 안보범위 확장에 따른 안보요인의 변화

안보요소	Pre- Grobalization	Grobalization
대상(Object)	국가(Nation-state)	국가+ 개인안보(Individual security)
범위(Scope)	군사(military)	군사+ 비군사(a lot of)
접근방법(Approach)	전통적(convantional)	포괄적(Comprehensive,Multilateral)
위협(Threat)	대외위협(state↔state) (intertate)	초국가적 위협(internal+ external) + transnational threat
행위자(Actor)	국가(State)	국가+ 비국가(state+ non state)

출처 : 이석수의, 『안보정책 수립 교육 모델』, (서울:국방대학원,1998)

이러한 안보의 개념은 종래에는 군사중심의 안보였으나 오늘날과 같은 세계화 시대에는 안보의 개념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 혼란을 가져오기 쉽다. 이를 정리하면 < 표2-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안보의 대상에 따라 국가안보, 개인안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안보요소의 적용범위에 따라 군사와 비군사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안보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 전통적 안보와 포괄적 안보로도 표현하기도 한다.⁶⁾

6) 이석수 외, 『안보정책 수립 교육 모델』 (서울: 국방대학원, 1998). p.5.

위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안보개념은 고정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적용대상과 환경변화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외부로부터의 국가안보 위협과 내부로부터의 도전을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졌다. 그리고 국제문제와 국내문제의 구별이 사라졌으며 국내정책과 외교정책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보문제에 대한 접근은 포괄적 방법으로서의 접근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전통적 개념의 안보문제 접근이 무용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아무리 세계화 시대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군사중심의 국가안보가 안보문제의 핵심 요소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안보문제의 핵심인 국가안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국가안보와 국가전략

(가) 국가안보

위에서 안전보장 개념을 확인하면서 알아본 바와 같이 국가안보는 안전보장의 대상이 국가나 개인이나에 의해 구분된 것으로서 안전보장의 대상이 국가인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보장을 논할 때 대체적으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안보를 지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도 국가안보=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국가안보에 대하여 학술적으로 그 정의를 처음 시도한 학자는 월터 리프만(Walter Lippmann)이라는 미국의 시사평론가이자 사회심리학자로서 그는 1943년 『미국의 외교정책』에서 “국가가 전쟁을 피하기 위하여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되고, 또 만일 도전을 받는 경우에는 전쟁으로 그 이익을 지켜낼 수 있을 때 그 나라는 안전보장이 이루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다.⁷⁾ 리프만의 정의는 몇 가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국가안보란 그 나라의 이익들을 보존할 수 있음을 뜻한다. 둘째 그런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뜻하며, 셋째 국가이익에 손상을 주는 경우 이를 확보·저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쟁을 상정하고

7) Walter Lippmann,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3). p.51.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안전보장이란 군사력을 통하여 확보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안전보장이란 그 국가가 설정하고 있는 제반 이익, 즉 국가 이익을 군사적으로 보존 및 확보하는 것임을 뜻한다.⁸⁾

리프만과 같이 안전보장은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관점을 가진 학자로는 하트랜드던버그(Penelope Hartland-Thunberg)가 있는데 그는 “국가안보는 세계의 어느 곳에서든지 자국이 설정한 이익들을 성공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그 국가의 능력(ability)”이라고 했다.⁹⁾ 그는 국가안보를 所在가 무한정한 국가이익을 보존하고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국가안보의 개념을 매우 적극적인 것으로 정의하였다.

한편, 이익 대신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중점을 둔 학자로는 울퍼스와 트레저 및 사이머니 등이 있는데 울퍼스(Anold Wolfers)는 “안전보장은 객관적 의미에서 획득한 제 가치에 대한 위협부재의 척도가 되며 주관적 의미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가치들이 공격을 받으리라는 공포심이 없음을 말하는 척도가 된다”라며, 이미 확보한 제 가치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안전보장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트레저와 사이머니(Frank N. Teager & F. N. Simonie)는 국가안보란 “현재 및 잠재적 적들에 대하여 국가의 치명적인 가치들을 보호하거나 확대하는데 유리한 국가 및 국제적인 정치적 조건들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정책의 일부”라며, 국가안보를 그 국가의 중요한 가치추구에 비중을 두었다.

이와 같이 국가안보란 국가이익 또는 국가가 중요시 하는 제 가치를 추구하거나 안전을 유지, 확보하는 능력 및 행위이며 때로는 이러한 이익과 가치가 외부로부터 도전을 받을 경우 전쟁도 불사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국내의 국방대학교에서도 국가안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가안보란 군사·비군사에 걸친 국외로부터 기인하는 각종각양

8) 정준호, “국가안보의 개념과 전개” 『안전보장 이론』 (서울: 국방대학교, 2002), pp.8-10.

9) Penelope Hartland-Thunberg, “National Economic Security : Interdependence and Vulnerability”, in Frans A. M. Alting von Geusau, Jacques Pelkmans (eds.), *National Economic Security* (Tilberg: John F. Kennedy Institute, 1982), p.50.

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추구하는 제가치를 보전·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외교·사회·문화·경제·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제정책체계를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기존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행한 불시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¹⁰⁾ 여기서 국가안보 적용 대상은 국가의 제가치로 간주했고, 위협의 종류와 대응 수단으로는 군사 외에도 비군사 분야에 이르는 포괄적인 것임을 제시하였으며, 위협의 發源은 전통적인 방법대로 국외로부터 기인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그리고 대응 방법은 제수단을 총동원한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것임을 제시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국가안보란 그 대상을 국가이익과 국가의 중요한 가치로 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 이익과 가치의 소재와 위협의 출처는 국내외를 망라하고, 위협의 양상과 대응 수단은 군사와 비군사 모두를 포함하며, 대응방법은 정책적 또는 전쟁까지도 포함됨을 알 수 있다. 이를 요약하면 “국가안보란 국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군사·비군사적 각양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이익과 제가치를 군사 및 비군사적인 제수단으로 보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¹⁾

(나) 국가전략

국가전략은 그 개념과약이 애매하다. 이 용어는 국가안보, 안보전략이라는 용어와 유사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가정책, 국가정책목표 등과도 혼용하여 쓰일 뿐만 아니라 이를 정의하는 학자나 연구기관 마다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에 대하여 한국의 국방대학교에서는 “전략이란 용어의 정의는 무수히 많다. 때와 장소에 따라 변하고 이론가의 강조점에 따라 상이하다”고 했다. 그리고 이 용어의 이론적 사용의 예를 보면 조잡한 표현도 발견된다며, “그 이유는 단순히 행위의 과정 또는 전술을 의미하기도 하고, 기획을 의미하기도 하며, 전체를 포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그리

10)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48.

11) 최경락 외, 『국가안전보장 서설』 (서울: 법문사, 1989), pp.25-26.

고 국가전략이라는 용어는 大戰略, 總體戰略(total strategy)과 동의어라고 하였다.¹²⁾ 그리고 전성훈도 “한국의 국가전략과 국가이익”이라는 논문에서 “국가전략은 각 국가의 대내외적 환경에 따라 대전략(Grand Strategy), 총체전략(Total Strategy),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정책(National Policy), 또는 국가발전전략(National Development Strategy) 등으로 사용된다”고 한 것처럼 국가전략이라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

이와 같이 전략이라는 용어가 시대와 상황 나라별로 적용하는 대상과 수단, 방법이 상이함에 따라 국가전략이라는 용어도 그 정의가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국가전략이라는 말의 개념과 의미를 알아보기로 한다.

국가전략을 한국의 국방대학에서는 “평·전시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및 군사적 제역량을 총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는 방책(術과 科學)이다”.¹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미국 합참에서는 국가전략을 “전평시 국가목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과 함께 국가의 정치, 경제, 그리고 심리적 힘을 함께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術과 學”으로 정의하고 있다.¹⁵⁾

또한 임동원씨도 “한국의 국가전략”이라는 논문에서 “국가전략은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력의 모든 수단을 통합·조정하여 개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¹⁶⁾

이와 같이 국가전략이란 전·평시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과 함께 정치, 경제 그리고 심리, 정신적 요소 등 무형적인 자산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국력수단을 통합사용하는 방책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

12) 국방대학교, 전게서. pp.115-115

13) 전성훈,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국가전략』 5권 2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9). pp.173-174.

14) 국방대학교, 상게서. PP.114-115

15) Joint Chief of Staff Pub. No.1,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Washington D.C: US Gov. Printing Office, 1972), p.202

16)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1권 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p.13.

2. 국방정책

국방정책에 관한 통일된 이론이나 정의는 극히 드물다. 이는 국방정책이란 것이 한 나라의 국가방위에 대한 것이므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과 국가이익과 목표 등이 상이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인 헌팅턴(Samuel Huntington)도 “국방정책은 국제정치 환경에서 형성되고 국내환경에서 인식되는 위협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스나이더(Glenn H. Snyder)도 “국방정책은 억제와 방위의 두 개념을 내포하고 있으며, 억제는 평시의 목표이며 방위는 전시의 가치이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전 안보문제연구소 부소장 최병갑은 한나라의 방위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처해있는 국제환경, 그 국가 고유의 국가목표, 국가전략, 군사교리, 그리고 그 국가의 국방정책 결정과정 및 그 국가의 군사력태세, 군사력사용, 군비관리, 군민관계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방정책의 구성요소를 알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¹⁷⁾

그리고 국방대학교 윤현근 교수는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에서 “국방정책이란 국방과 정책의 복합어이다”라며 국방의 개념과 정책의 개념을 설명한 후 “국방정책이란 한 국가가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자국을 방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 및 비군사 분야의 포괄적 국방력을 유지·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정부의 활동방침이다”라고 정의하였다.¹⁸⁾

또한 전 국방부 군비통제처장 김국헌은 『국방연구』에 기고한 “국방정책”이란 논문을 통해 “국방정책은 국내외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였다.¹⁹⁾

오늘날의 국방 개념은 전시(戰時)·평시(平時)를 통하여 국가의 모든 자원과 능력을 조직·동원하여 실시하는 국제 생존경쟁에 대한 보장이다. 최근 강대국들의 국방정책을 살펴보면, 적의 침략의도를 사전에 저지하는 것을 국방의 첫째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하여 강력한 군사력의

17) 최병갑, “비교국방정책론” 『국방연구』 제26권 1호(서울:안보문제연구소,1995). p.168.

18) 차영구 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오름,2002), p.30.

19) 김국헌, “국방정책” 『국방연구』 41권 1호(서울:국방대학원, 1998). p.38.

확보·유지와 함께 국가의 자원과 능력을 총동원하는 총력전적 국방개념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한 국가만의 국방보다는 집단방위에 의한 국방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국방대학교의 『안보관계용어집』에서도 광의의 국방은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경제·과학기술 등, 국가의 총력을 경주하여 무력침략에 대하여 국가를 방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⁰⁾

이와 같이 국방정책에 대한 개념은 학자와 연구자들마다 각각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는 용이하지 않다. 예를 들어 위협의 소재에 대해 국외에서 찾는 연구자가 있는가하면 국내의 모두에서 찾는 연구자도 있다. 그리고 위협의 종류도 군사적 위협만을 제시하는 가하면 군사·비군사 모두를 제시하기도 한다. 이것은 연구자의 관점이 전통적 관점 또는 협의의 관점, 즉 군사 중심적 관점이나 아니면 포괄적 관점 또는 광의의 관점, 즉 비군사 분야까지 포함하는가의 차이로 여겨진다.

최근의 국가안보의 개념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확대되는 경향이므로 협의의 관점 보다는 광의의 관점에서 정의하는 것이 보다 융통성 있는 정의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국가안보 또는 국가안보정책과 혼동될 수 있고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도 매우 광범위해지기 때문에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협의의 관점에서 국방정책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즉 국방정책이란 국가 외부로부터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에 대하여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분야를 중심으로 국방력을 유지·조성하고 운용하기 위한 정부의 행동방침을 말한다.

그러면 국방정책의 범주는 어디까지 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포함시킬 것인가는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요하다. 국방의 개념이 외부로부터의 무력에 의한 위협에의 대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군사중심일 수밖에 없지만 과학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군사뿐만 아니라 비군사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사정책의 영역 또한 군사중심의 정책이 위주이긴 하지만 비군사분야까지 포함

20)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1). p.49.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사정책의 범위와 여기에 포함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군의 정치적 통제와 군의 자율성 확보문제이다. 여기에는 통수권의 문제와 국회의 군통제기능 여부, 군인사권의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군사력 건설에 관한 사항이다. 여기에는 군구조 문제, 국방예산, 전력증강, 국방관리, 교육 등이 포함된다. 셋째, 군사력 운용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군의 운용과 전략지침에 관한 것과 작전태세, 훈련 등에 관한 것이 포함된다. 넷째, 동맹관리 문제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관계처럼 양자동맹을 포함하여 다자동맹 관계까지 망라하며 동맹관계의 유지·증진을 위한 각종의 조약, 협정과 협력, 훈련, 주둔군 문제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통합방위체제에 관한 것이다. 여기에는 민방위와 군사방위와의 결합, 비군사분야의 비상계획 등이 포함된다.²¹⁾

제 2 절 군사력에 관한 이론

1. 군사력의 개념

군사력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고 이를 바라보는 시대적 상황과 관점별로 상이하다. 군사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전쟁론의 저자 ‘클라우제비츠(Clausewitz)’는 “군사력은 정치적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고, “그 군사력의 목표는 적의 저항력을 꺾기 위한 무한계적 행사”라고 했다. 미국의 ‘클라우스 노어(Klaus Knorr)’는 “군사력이란 국가적 이익의 국제적인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했으며,²²⁾ ‘로버트 오스굿(Robert E. Osgood)’은 “한 국가의 정치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였다.²³⁾ 그리고 ‘줄리안 라이더(Julian Lider)’는 “군사력은 가상적국과의 관계에서 한 나라가 갖는 실질적인 군사적인 힘

21) 김국헌, “국방정책” 『국방연구』 41권 1호(서울: 국방대학원, 1998). pp.40-42.

22) Klaus Knorr, *The War Potential of Nati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p.3-10.

23) Robert E. Osgood, *Limited War*(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p.326.

이며 비상시 동원될 수 있는 잠재력 혹은 잠재 군사력으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국가에 의해서 추정된 군사력”이라며,²⁴⁾ 현존 군사력은 물론 잠재력도 군사력의 일부로 보았다.

한편 국내 학계에서는 군사력에 대하여 최종기 교수가 “군사력은 국력의 일부”라고 규정하고 “이는 군대의 질과 양, 기술, 지도력으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다.²⁵⁾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군사용어집’에는 “군사력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직접적이며 실질적인 국력의 일부로서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적인 능력과 역량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²⁶⁾.

이와 같은 각양의 정의들을 정리하여 볼 때 군사력의 개념은 정치적 목적을 완성하거나 국가이익의 국제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 현존 군사력과 동원 가능한 국가의 모든 잠재역량 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로서 다음과 같이 요약 정의할 수 있다. “군사력이란 국력의 일부이며 국가이익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한 국가의 현존 군사력과 동원 가능한 인적, 물적, 정신적인 모든 요소를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결합한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다.

2. 군사력의 구성요소

군사력 정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군사력은 현존 군사력만이 아니라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잠재역량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군사력의 구성요소 또한 다양하다. 이는 현대전이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며 물질문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동원 가능한 잠재역량 또한 무한으로 다양해졌기 때문이다.

군사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학자나 연구기관별로 다양한데 먼저 ‘퀸시 라이트’(Quincy Wright)의 견해를 보면 군사력의 구성요소를 “군비, 군사 잠재력, 국민사기, 국제적 성망”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를 세분화하여 군비는 현존무기, 무기의 저장요소, 기지(Base), 전략, 공군, 군비태세

24) Julian Lider, *Military Theory*, 국방대학 譯 『군사이론』 (서울:국방대학교, 1985), p.326.

25) 최종기, 『국제관계론』 (서울: 박영사, 1970), pp.50-51.

26) 국방대학교, 전제서, p.43.

등을 제시하였다. 군사잠재력으로 지세, 자연자원, 교육정도, 인구, 식량, 산업시설, 경제체제, 과학기술 등을 제시하였고, 국민사기에는 애국심과 국기번영제도, 그리고 국제적 성망은 동맹관계와 조약관계를 제시하였다.²⁷⁾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클라우스 노어(Klaus Knorr)’는 그의 저서 ‘군사력과 군사잠재력’에서 군사력 구성을 “육·해·공군의 동원된 군사력과 정치·경제·사상력의 잠재적 군사력”으로 구분하였다.²⁸⁾

또한 ‘스나이더’(Richard C. Snyder)와 퍼니스(Edgar S. Furniss)교수는 군사력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인 요소와 간접적인 요소로 대별하고 직접적인 요소에는 인원, 전차, 함정, 항공기, 기타 등이 포함되며 간접요소에는 생산능력, 동원능력이 포함되는 경제력, 과학기술, 전략적 위치 등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의 국방대학교 군사용어집에서는 군사력을 동원된 군사력과 잠재적 군사력으로 대별하였는데, 이중 동원된 군사력은 국가의 상비적인 직접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가의지를 구현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서 조직한 전투력”이라며 이것은 “敵戰力の 직접적인 파괴수단”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잠재적 군사력은 “武裝軍 자체를 제외한 군사력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종합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²⁹⁾

이상에서와 같이 군사력의 구성요소는 학자마다 그리고 분석기관별로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군사력의 구성요소는 총력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국력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존 군사력과 국가 잠재역량을 총망라한 것을 말한다. 현존 군사력은 육·해·공군의 병력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등의 유형요소와, 전략과 준비태세 등의 무형요소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 잠재력이란 국가의 인구, 자연자원, 지세, 경제체제와 국가의 제도, 자국민의 애국심, 동맹관계, 조약 등 정치·외교, 경제·사회, 과학기술, 환경 등 모든 분야의 유·무형의 국가 잠재역량을 총망라한 것을 말한다.

27) Quincy Wright,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55), pp.138-139.

28) Klaus Knorr,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국방대학원 역, (서울:국방대학원 1976), pp.15-19.

29) 국방대학교, 전게서, p.44.

이러한 군사력 구성요소에 대한 논리는 너무나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여 군사력 연구의 실제적 접근이 난해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군사력의 핵심요소이며 “敵戰力の 직접적인 파괴수단”³⁰⁾에 해당되는 이론상의 “동원된 군사력”에 해당하는 현존 군사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3.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로 아모스 조단(Amos A. Jordan)과 윌리엄 테일러 2세(William J. Taylor, Jr)가 있는데 이들은 군사력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7개의 범주로 구분하고 있다.³¹⁾ 첫째, 억제적 역할(deterrent role)을 수행한다. 둘째, 군사력은 이미 실행에 옮겨진 적국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중지시키는 강제의 역할(compelled role)을 수행한다. 셋째, 군사력은 획득의 역할(acquisitive role)을 수행한다. 국가들은 다른 국가의 영토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종종 군사력을 사용한다. 강대국들은 획득의 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대리국가의 재래식 군사력을 사용하기도 한다. 넷째, 군사력은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내정간섭은 반란에 대응하여 어느 특정한 정권을 안정시키거나 또는 적대적인 정권을 축출할 목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다섯째, 군사력은 대응간섭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군사력은 자신의 중요한 국가이익에 상반되는 타국의 간섭을 막기 위해 사용된다. 여섯째, 군사력은 집단적 행동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국제연합의 다국적군의 군사행동처럼 국제연합이나 지역 집단방위체제에 의해 부여된 권위하에서 몇몇 국가들의 공동행동으로 행사되기도 한다. 일곱째, 군사력은 항상 외교를 위한 막후 조종자 역할을 한다.

로버트 아트(Robert J. Art)는 군사력의 역할을 4개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그것은 군사력의 방위적, 억제적, 강제적, 시위적 역할이다. 즉 방위적 역할은 외부의 공격이나 침략이 있을 때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30) 국방대학교, 전게서, p.44. 재인용.

31) Amos A. Jordan & William J. Taylor, Jr, *American National Security : Policy and Process*.(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억제적 역할은 잠재적 적국에 대하여 그가 침략행위를 단행할 경우 침략으로 얻는 이익 이상의 불이익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침략행위가 모든 대안 중에서 가장 비경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토록 함으로서 현상유지를 꾀하는 평화전략의 하나임을 의미한다. 강제적 역할은 적으로 하여금 이미 진행 중인 행동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시위적 역할은 군사력의 평화적인 사용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군사훈련과 지역전개로서 나타낸다. 이러한 시위는 국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민의 국가적 자존심을 고양시키고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의 강력함을 인지토록 함으로서 분쟁을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³²⁾

파델도르프(Padeldorf)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군사력의 임무는 억제, 방위, 강압 및 협상을 위한 배경 등으로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위의 상징, 방비, 지도력과 국가발전에 기여 등을 군사력의 임무로서 제시하고 있다.³³⁾

한편 국내에서도 이민룡은 “한국의 국가 군사전략”에서 군사력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군사적, 경제적, 사회적 차원으로 대별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군사적 차원에서 군사력은 전쟁통제, 전쟁승리, 무력시위, 국시의 상징, 국제안보 등의 임무를 가지는데, 이러한 군사적 차원의 군사력의 기본적인 임무와 역할은 역시 국가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그 외에도 정치·외교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임무와 역할이 포함된다고 보았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군사력의 임무와 역할은 경제여건 보장, 전략자원 수급, 과학기술의 개발 등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셋째, 사회적 차원에서의 군사력의 임무와 역할은 국가체제의 보위, 국민의 생존권 보장, 사회체제의 유지, 환경보전 등을 들 수 있다고 하였다.³⁴⁾

32) Robert J. Art, “The Role of Military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 in Thomas Trout and James E. Harf(eds.) *National Security Affairs*(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s, 1982), pp.18-19.

33) Julian Lider, *Military Theory*,(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1983), p.64.

그리고 국방대학교의 안보관계용어집에서도 군사력은 “국제정치의 궁극적인 제재수단인 동시에 비군사적 수단의 효용을 높여주는 배경이기도 하다”고 했다. 또한 군사력은 “이를 직접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위협 못지않게 비군사적 수단인 정치, 경제, 사상 전력의 배경”으로서도 유효하다며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을 설명하고 있다.³⁵⁾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과 연구자들마다 군사력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여 이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이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군사력은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서 물리적 수단이다. 이러한 군사력은 평시에는 국가이익과 국가목표 달성, 국제평화 유지를 위한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의 제반 활동을 보장하고 전쟁을 예방하며, 나아가 타국의 영토나 자원을 획득하거나 내정간섭의 배경으로 삼는 것이다. 그리고 전시에는 국가이익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물리적 위협을 강압적으로 제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군사력은 유사시 무력의 실질적인 사용에 의하여 상대국에게 제재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적나라한 물리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평시에는 국가이익을 증진시키고 국가목표를 달성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외교적 도구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문명의 시대인 오늘날 비문명적인 “타국의 영토나 자원의 획득과 내정간섭의 배경”으로서 군사력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 도처에는 국가간의 영토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석유자원 등 에너지 자원을 둘러싼 국제분쟁은 날로 치열해 지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독도, 북방4도, 조어대(釣魚台, 일본명 尖閣列島)”등을 둘러싼 영토문제와 이라크를 중심으로 한 중동지역과 흑해 주변의 신생국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도 내면에는 석유자원을 둘러싼 분쟁이다.³⁶⁾ 따라서 군사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타국의 영토나 자원의 획득과 내정간

34) 이민룡, “한국의 국가군사전략”(서울: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7). p.37.

35) 국방대학교, 전게서, p.43.

36) 1991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점령하므로서 발생한 ‘걸프만 전쟁’과 2003년 미국중심의 다국적군이 이라크를 공격한 것, 그리고 흑해 연안의 타지키스탄과 카자흐스탄등에서의 내전은 모두 석유자원과 관련 있는 분쟁으로 간주되고 있다.

섭”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3 절 한·일관계의 이론적 고찰

일본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의 동쪽과 남쪽 해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로서 고대로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부터 인적, 물적, 문화적, 종교적 영향을 많이 받은 국가이다. 이로 인하여 한국과 일본은 인종적, 언어적, 문화적, 종교적 동질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다. 다양한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16세기에 우리나라를 두 차례에 걸쳐 무력침공을 하였고, 20세기에는 36년간 강점하여 식민통치를 했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이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통치를 했던 경험을 통하여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갖고 있으며, 한국은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일본에게 다양한 영향을 주었던 문화적 우월감에도 불구하고 식민통치를 당했던 적대감을 강하게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상대국에 대한 인식 차이로 인하여 현대에 이르러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방면에 걸쳐 선린우호 및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질서와 반목 및 경쟁과 대립의 갈등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한·일 양국관계를 국제정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지정학 이론과 유사동맹 모델, 그리고 구성주의 이론을 통하여 한·일관계를 고찰하기로 한다.

1. 지정학(地政學) 이론으로 본 한·일관계

한·일관계를 논함에 있어 지정학적 관점에서 양국관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인접국가로서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인적, 물적, 문화적으로 다방면에 걸쳐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기 때문이며, 이러한 관계는 향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이란 학문이 등장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성행하였다. 초기의 대표적인 지정학자인 독일의 칼하우즈호퍼(Karl, Haushofer)는 “지정학은 자연적 생활공간에 있어서 정치적 생명체를 지리적인 속성과 역사적 운동에 의한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학문이다”고 정의하였다. 일본의 국제관계 학자인 이시다 교수는 “지정학이란 지리학과 정치학을 합성한 용어로 그 내용은 지리와 정치를 활용하면서 과거 인류의 장대한 역사의 동태를 논하는 학문이다”고 하였다.³⁷⁾ 이와 같이 지정학은 지리적 관점, 역사적 관점, 정치적 관점들을 내포하고 있는 학문으로 이와 관련한 제 이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위치 이론

한 국가의 위치는 일국의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기본요소인 동시에 국방, 기후, 산업, 생활, 역사, 국제관계 등에 직·간접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국력의 강약과 산업 및 기술발달 등에 따라 그 의미·기능·가치가 크게 달라지는 까닭에 많은 학자들이 국가의 위치와 분류에 대해 연구하여 왔다. 국가의 위치와 분류에 대하여 대체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³⁸⁾

첫째, 수리적 위치(mathematical location)로 지구자체가 1개의 천체로서 천체운동 질서의 상대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그 위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위도와 경도로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자연지리적 위치(physical-geographical location)로 국가의 위치를 육지, 바다, 반도, 도서 등과 같이 자연지리적 위치와의 관계에서 나타낸 것이다. 이것은 해양적 위치, 대륙적 위치, 반도적 위치로 분류하고 국가의 주위가 바다와 어떻게 상접해 있느냐에 따라 도서국(島嶼國), 환해국(環海國), 내륙국(內陸國), 반도국(半島國), 주변국(周邊國)의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³⁹⁾

셋째, 관계적 위치(relative location)로 타 국가와 의 관계 또는 인접국

37) 石田貫太郎, 『國際關係論のフロンティア』(東京:ミネルヴァ書房, 2003), p. 63.

38) 권영식 외, 『국방지리』(서울:박영사, 1980), p.27.

39) 권영식 외, 전제서, pp.27-38.

가와의 관계된 위치를 말하는 것으로 말컨버크는 보다 가변적인 개념을 반영하여 ‘인접국가와의 관계되는 위치’로 정의하고 있다. 관계적 위치는 수리적 위치나 자연지리적 위치처럼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타 국가와의 관련된 위치의 중요성이나 가치도, 상호관계 등이 시대에 따라 상대적인 동시에 그 기능 자체도 가변적이므로 이와 같은 요소들을 ‘지정학적 위치’라고도 한다.⁴⁰⁾

국가위치 이론으로 본 한국과 일본은 수리적 위치면에서 같은 위도와 경도 지역에 위치하는 인접 국가로서 기후와 풍토가 유사하며 해양자원을 공유하고 있다. 자연적 위치면에서 볼 때 한국은 반도국이면서 해양과 대륙의 교합지역에 위치한 주변국으로 분류되고, 일본은 도서국으로 분류된다. 관계적 위치면에서 볼 때 한국은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일본과의 관계가 불가피하며, 일본은 대륙과의 관계에서 한국과의 접촉이 불가피한 위치에 있다.

나. 심장지역 및 주변지역 이론

1차 세계대전을 즈음하여 등장한 심장지역(心臟地域, heart land) 이론은 영국 옥스퍼드대학의 매킨더(H. J. Mackinder) 교수가 주장한 이론으로서 그는 지구표면을 심장지역과 초생달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심장지역은 유라시아와 동구권 국가들의 지역을 말하며, 초생달 지역은 심장지역을 둘러싼 지역을 말한다. 초생달 지역은 내측과 외측으로 분류하는데, 내측은 심장지역과 직접 접해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 터키, 인도, 중국, 한국 등 대륙세력이 이에 해당되고 외측은 미국, 남미제국, 아프리카, 호주 등 해양세력이 이 지역에 속한다.⁴¹⁾ 매킨더는 “동부 유럽을 지배하는 자는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는 세계도시를 지배하며, 세계도시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이론은 영국이 세계지배를 위해서는 대륙의 중심부를 지배해야 하며 이곳의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해양력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세계지배를 위한 강

40) 안병환, “21C 한반도 안보전략 방향에 관한 연구”(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PP. 11-12.

41) 상계서, p.13.

대국의 조건은 지구의 심장지역을 장악해야하고 이곳의 부존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영토확장의 명분을 제공한 이론이다. 그가 주장한 대륙 우세론은 역으로 당시 독일 학자와 정치가에게 크게 받아들여져서 세계지배의 전략적 이론으로까지 발전되기도 했다.⁴²⁾

한편 2차 세계대전을 즈음하여 등장한 주변지역(周邊地域, rimland) 이론은 미국 Yale 대학 교수인 스파이크맨(N. T. Spykman)이 주장한 이론이다. 그는 매킨더의 심장지역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주변지역을 지배하는 자는 유라시아를 지배하고, 유라시아를 지배하는 자는 세계운명을 지배한다”라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매킨더가 주장하는 심장지역은 기후가 불량하여 농사짓기가 부적절하고 천연자원의 부족과 교통의 불편 등으로 심장지역 자체가 중심적 위치라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⁴³⁾ 그는 강대국 성립을 위한 영토 확장은 심장지역이 아니라 주변지역 통제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주변지역을 통제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이 팽창하거나 위협적 세력이 될 수 없도록 만들면서 동시에 자국의 팽창은 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스파이크맨의 이러한 인식은 2차 대전후 봉쇄정책으로 나타난 미국의 외교정책과 일맥상통한 것이다.⁴⁴⁾

이와 같이 심장지역 이론이나 주변지역 이론 모두 세계 지배를 목표로 하는 이론으로서 그 시대의 국제정치 상황을 대변하고 있다. 지정학의 기본개념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간의 세계지배를 위한 논리이기 때문이다.⁴⁵⁾

다. 한일 양국의 지정학적 관계

한국의 수리적 위치는 북반구 온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지리적 위치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태평양을 향해 돌출되어 있는 전형적인 반도국가로 대륙에 속해있다. 그리고 관계적 위치로는 일본과 동해와 남해와 인접해 있다. 매킨더의 심장지역 이론을 적용할 경우 한국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대륙세력에 속해 있는 국가로서 초

42) 임덕순, 『정치지리학 원론』 (서울 : 일지사, 1978), pp. 64-69.

43) 임덕순, 상계서, pp. 68-70.

44) 박홍석, “일본과 한반도 안전보장의 지정학 담론”, 『국제정치논총』 39집1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p. 60.

45) 石田貫太郎, 전계서, p.66.

생달 내측의 국가로 분류된다. 스파이크맨의 주변지역 이론을 적용할 경우에도 대륙과 해양세력의 중심지대에 속해 있는 국가로 주변지역 국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한반도는 심장지역이론과 주변지역 이론 중 어떤 이론을 적용하더라도 한반도 자체는 물론 인접국가들에게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역으로 분류되며 그렇게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해양으로 진출하려는 대륙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해양세력에 의하여 여러 차례 세력 다툼의 표적이 되어 왔다.⁴⁶⁾ 특히 일본이 국력을 대륙으로 팽창하려 했을 경우는 어김없이 한반도를 침공했다.

일본은 수리적 위치면에서 한국과 같이 북반구의 온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지리적으로는 북태평양 서쪽 끝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서국가이다. 그리고 관계적 위치로는 한국과 동해와 남해를 사이로 인접해 있다. 심장지역 이론으로 본 일본은 해양세력으로 초생달 내측에 속해 있으며, 주변지역 이론으로 볼 때는 해양세력으로 주변지역 국가에 속한다. 일본은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던 근세까지는 고립적인 생활환경으로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받지 않고 독자적인 단위 국가를 형성하여 왔다. 그리고 대륙의 문화와 부족자원을 한반도를 통하여 보충하여 왔다. 근세 이후에는 교통수단의 발달과 서구문명의 동진으로 인한 유럽국가의 아시아 대륙진출을 기회로 해양세력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륙 진출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지정학 이론으로 볼 때 한국은 해양국가와 접촉을 위해 일본의 협력과 협조가 불가피하며, 일본은 대륙국가와 접촉을 위해 한국의 협력과 협조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한일 양국은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는 위치에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는 충돌이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2. 유사동맹 모델과 한일관계

재미동포 학자인 빅터 차는 그의 저서 『적대적 제휴』에서 한일관계의 딜레마를 이론·지역연구·정책대안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고 있

46) 안병한, 전게서, p.14.

다. 그 중에서도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양국관계를 풀기위해 ‘유사동맹’이란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유사동맹이란 두 국가가 서로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제3국을 공동의 동맹국으로 지니고 있는 관계를 뜻한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각각 동맹을 맺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모델이 한일관계를 설명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모델은 갈등과 협력이 되풀이되고 있는 두 국가의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 **가설 A** : 쌍무적 관계에서 두 나라가 느끼는 방기(放棄,abandonment)와⁴⁷⁾ 연루(連累,entrapment)의⁴⁸⁾ 불안감에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양국 사이에는 갈등이 벌어질 것이다.

· **가설 B** : 삼자 내지는 다자관계에서 두 나라가 서로에 대해서나 제3국에 대해서 느끼는 방기와 연루의 불안감의 정도가 비슷할 때, 양국은 서로 협조할 것이다.

쌍무적 수준에서 두 나라가 보여주는 기본적인 모습은 갈등이다. 그러나 때로는 두 나라가 이로부터 벗어나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협조는 제3국의 방위공약에 대해,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는 방기의 두려움과 깊은 관계가 있다. 한일 양국은 공동 동맹국인 미국의 방위공약에 따라, 방기와 연루의 불안을 느끼는 정도가 달랐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한일관계의 협력과 갈등의 순환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유사동맹 모델은 이러한 한미일 삼각 상호작용을 역사적인 맥락에서 검토하며, 이를 통해 동북아의 안보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고자 했다.

유사동맹 모델은 한·미·일 삼각관계라는 입체적 틀을 제공함으로써, 현대사의 결정적 순간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 실제 한국의 베트남 전 참전 결정과 한일협정 비준은 같은 해에 있었으면서도 전혀 다른 맥락의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저자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47) 빅터차, 『적대적 제휴』 (서울: 문학과 지성, 2004), p.72. 방기는 동맹국이 동맹을 이탈하거나 동맹 의무를 수행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불안이며, 동맹국이 자국의 명백한 공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이 기대되는 위급상황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48) 상게서, p.73. 연루는 자국의 능력 이상으로 동맹국에 대한 지원 공약을 수행하는 것으로 동맹 공약이 자국의 이익에 해롭게 작용될 경우 발생한다.

하에서 이루어진 한·일간의 대표적 협력사례로 설명한다.⁴⁹⁾ 이처럼 적대적 제휴는 실증적 검증을 통해 1969 ~1988년이라는 냉전기의 한·일관계의 모습을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모델은 과연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이 글의 저자는 탈 냉전기에도 유사동맹 모델은 여전히 한일 또는 한·미·일 관계를 설명하는데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냉전은 끝났지만 동북아의 전략적 환경은 여전히 냉전시대의 과제를 넘겨받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변수가 그 첫째이고, 중국의 위협이 그 두 번째이다. 이에 저자는 유사동맹 모델을 근거로 미국의 갑작스러운 철수나 불개입은 한·일 양국에게 오히려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양국은 갑작스러운 방기에 대한 반응으로 재무장과 핵무기 보유계획과 같은 ‘내부적 균형 강화정책’을 취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은 미국이 동북아 지역의 점진적인 철수를 통해 한일 더 나아가 한·미·일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은 오늘날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유사동맹 모델은 ‘냉전이 끝난 동아시아’ 속의 한·일관계의 특징을 완벽히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한·일 양국이 공유하는 현실적인 위협이 희미해진 시점에서 한·일관계에는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다양한 요소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⁵⁰⁾ 오늘날의 한·일관계는 서로에 대한 ‘전략적 필요’보다 ‘감정적인 갈등’에 의해 변화되는 경향이 커진 듯하다. 유사동맹 모델은 최근 한·일관계에서 표출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을 설명하기에는 지나치게 힘과 동맹의 관점에 치우쳐있는 듯하다.

49) 홍규덕,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서울: 동아일보, 2004.10.08)

50) 손열, “역사 속에서의 21세기 일본 : 미국의 패권과 한일관계”, 『日本研究論叢』 14권, (서울:현대일본학회, 2001), p. 10. 실제로 1945년부터 1990년까지의 한일관계는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이나 미국의 중재로 갈등이 확산되지 않았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일 간의 감정적 마찰은 줄곧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구성주의 관점에서의 한일관계

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은 안보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군사적 이해 뿐 아니라 국내정치적 요소나 여론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국제정치 이론들이 경시한 변수들, 즉 국민 정체성과 문화 등이 국제관계에 적극 반영되기 시작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한일관계에도 유사동맹 모델과 같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나아가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도 국방대학교 교수 전재성의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논문을 참고하여 국가가 가지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일관계에 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먼저 자기정체성이란 한·일관계에 있어 양국이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대체로 자신들이 과거사 문제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이와 별개로 자신들의 국제 사회적 위치를 보다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 정치지도자들은 의식적으로 과거사에 얽힌 양국관계의 딜레마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자국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이나 경제교류 등에 관심을 보인다. 일본은 한국에 비해 거시적 측면에서만 양국관계를 바라보려 하는 것 같다.

반면 상대정체성이란 말 그대로 양국이 상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의 가해자로서 일본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여기에 최근에는 영유권 분쟁 문제마저 불거지면서 더욱더 對日 적개심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이전의 침묵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우리는 도대체 몇 번이나 사과해야 하느냐’라는 적극적인 방어 자세로 변화되었다. 현재의 戰後 세대들은 일본이 언제까지 과거사와 배상요구에 끌려 다녀야 하느냐고 말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⁵¹⁾ 결국 이러한 자기정체성과 상대정체성의 차이는 두 국가의 협력을 가로막는 감정적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냉전적 정체성이다. 이것은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공유한 두 국가로서, 서로 같은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인식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51) 진창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통권 107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5) p. 2.

이것이 높을수록, 두 나라는 전략적 이해를 고려해 협력을 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냉전 시대에는 이러한 정체성이 크게 작용할 수 있었다. 양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의 유지를 위해 비교적 순조롭게 협력을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많은 요소들이 변하게 되었다. 그 중 큰 것은 직접적인 북방 3각과의 대치가 사라졌다는 것, 일본의 국제적 역량이 강화되었다는 것과 외교에 있어 여론 등의 국내적 변수가 작용하기 시작하였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탈냉전 정체성이란 양국이 역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가져온, 서로에 대한 이전부터의 적대적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즉 이제껏 냉전의 위협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내면적인 정체성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 보통의 경우 가치를 공유하는 두 국가는 시기를 불문하고 협력을 공고히 하지만, 양국 간에는 역사적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에 대한 설움과 분노 등은 탈냉전과 더불어 분출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당연히 양국의 감정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⁵²⁾

이처럼 한·일관계에 대한 구성주의적 접근은 오늘날 확대되고 있는 양국간의 감정적 갈등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준다. 뿐만 아니라 정체성의 점진적인 변화를 통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더해주기도 한다. 그렇지만 역시 하나의 관점으로 복잡한 국가간의 관계를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다. 한·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정학 및 유사동맹 모델과 구성주의는 물론 보다 다양한 이론적 틀이 조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52)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교수논총』 24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2), pp. 313-340.

제 III 장 日本의 安保戰略과 防衛政策

제 1절 安保環境에 對한 認識

1. 國際情勢 全般에 對한 認識

일본정부는 2004년 12월 10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평성 17년(2005년)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에 대하여”(이하 “04방위대강”)를 승인하였다. 이 문서에 일본정부의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과 이에 따른 안보정책, 그리고 군사력 건설 방향등이 수록되었는데 여기에 수록된 안보환경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일본의 국제정세에 대한 시각을 고찰하고자 한다.

일본정부는 국제정세 전반에 대하여 “오늘날의 안보환경은 미국의 9.11 테러가 보여준 바와 같이 종래와 같은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문제뿐만 아니라 테러조직 등의 비국가적 주체가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종래의 국가간의 군사적 대립에 추가하여 비국가적 주체를 위협의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리고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과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과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태에의 대응은 국제사회에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위협의 양상을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라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국제테러조직 등에 대하여는 기존의 역지가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졌음에 유의해야 한다”며 국제테러조직의 위협에 국가안보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냉전종식 후 10여년이 경과한 현재 “미·러간 새로운 신뢰관계가 구축되는 등 주요국간 상호협력과 신뢰관계가 일층 진전되고 있다”며 강대국간의 대규모 분쟁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군사력의 역할이 다양화하고 있는데 무력분쟁의 역지와 대처에 추가하여 분쟁의 예방으로부터 전후복구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군사력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하였다.⁵³⁾ 이것은 일본도

53)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정보본부, 2005), pp. 476-484.

군사력의 해외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표현한 것으로 평가된다.

2. 日本周邊에 對한 安保環境의 認識

‘04 방위대강에서 이 지역의 안보정세에 대한 총평은 “국가간의 상호의존이 심화됨에 따라 양개 국가간 및 다국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고 유연하게 평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종결 후 극동러시아의 군사력은 대폭 삭감되었지만 아직도 핵전력을 포함한 대규모 군사력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와 대만해협을 둘러싼 문제 등으로 불투명·불확실한 요소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배치, 확산등과 대규모 특수부대는 이지역의 안보에 중대한 불안요인이며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중국에 대하여는 핵·미사일 전력과 해·공군력의 현대화, 해양활동범위의 확대 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계감을 표시하였다.⁵⁴⁾

또한 2006년도 방위백서에서도 동북아 안보정세를 개관하면서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배치·확산 등의 군사적인 움직임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고, 동아시아 전역의 안전보장에도 중대한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방비가 18년 연속으로 두 자리 수의 신장율을 기록하여 앞으로도 군사력의 현대화가 추진되어 갈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그 동향에 대해서는 계속 주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특히 북한과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하여 민감한 입장을 시사했다.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독도(일본명 竹島)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예년의 주장을 되풀이하였다. 또한 “2006년 4월 한·일 양국이 공히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임을 주장하는 해역에서 해상보안청이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려하자 한국측이 강력히 반발하였으며, 동년 7월에는 한국의 해양조사선이 동 해역

54)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정보본부, 2005), pp. 476-484.

에서 해양조사를 개시하여 일본이 즉시 중지를 요구”했다며⁵⁵⁾ 독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음을 국방차원에서 우려하고 있음을 표출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의 공식문서에서 특정국가를 거명하면서 안보차원에서 마찰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과거에는 한국에 대한 평가는 독도부분을 제외하고는 안보적으로 대결의 양상을 제시하지 않았었다. 지금까지 러시아와는 북방영토 문제를 거론해 왔고, 중국과는 조어대라는 영토문제가 있음에도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군사력 현대화를 경계하는 정도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하여는 핵·미사일을 포함한 전반적인 군사도발 가능성에 대해 경계감을 표시하여 왔었다. 즉 러시아, 중국, 북한이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과도 영토문제 뿐만 아니라 해양주권에 관한 마찰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 대하여 군사적 관점에서 종래의 우호적 관계가 변화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日本自體의 安保環境에 對한 認識

일본 그 자체의 안보환경에 대하여 일본이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내륙으로의 이동이 곤란하고, 장대한 해안선과 많은 도서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인구밀도가 높은 데다 도시부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되어 있고 연안부에 중요시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안보상의 취약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풍수해와 지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자연조건을 갖고 있고, 나아가 국가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해상교통의 안전확보가 불가결하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다.⁵⁶⁾

일본을 가리켜 “열도”라고들 하는데 이는 많은 섬들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혼슈(本州), 시코쿠(四國), 규슈(九州) 등 네 개의 큰 섬과 오키나와를 비롯하여 3~4 천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이다.⁵⁷⁾ 북해도에서 오키나와까지의 남북간의

55)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에서 발췌.

56) 상계 자료, 재인용

길이만도 2,000Km 이상에 이른다. 그리고 태평양에서 매년 발생하는 30여 개의 태풍 중 상당수가 일본을 경유하며, 환태평양 지진대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과 화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태풍으로 인한 풍수해와 지진, 화산 등의 자연에 의한 재난이 국가안보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나라이다.

또한 일본은 西高東低形의 南北細長形 국가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70% 이상이 산록지대이며, 내륙지역은 대부분 산악지대이고 동부의 일부지역만이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다.⁵⁸⁾ 내륙 산악지역은 3,000m가 넘는 높은 산들로 지세가 험하여 주민들의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남북으로 산맥이 형성되어 있어 동서간의 이동이 곤란하다. 따라서 1억 2,800여만 명의 인구는 동경에서부터 오사카에 이르는 동부 평야지대에 밀집하여 살고 있어 높은 인구밀도와 산업시설의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지세의 특성에 따른 주민과 산업의 집중, 그리고 교통로의 제한 등도 일본이 안고 있는 안보상의 부담사항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빈국이자 경제대국인 일본은 자원의 공급과 교역을 위해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중요자원인 석유는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며 이중 70%정도가 중동의 원거리 해상교통로를 이용해야 한다.⁵⁹⁾ 공급원인 중동지역의 안정과 해로인 인도양, 말라카 해협, 동지나해, 대만 근해를 잇는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지역의 정세에 대해서도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유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섬나라로서의 안보상 이점도 많이 가지고 있다. 동으로는 태평양, 서로는 대륙과의 사이에 중소국가인 한반도와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연적인 장애물과 완충지대가 형성됨으로서 국가안보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영토의 연장선에 있는 바다는 미래의 보고이다. 국제화시대에 세계무

57) 외무성, 『일본개황』, (외무성, 2004), p.7.

58)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平成17年度の国土交通白書”에서 발췌.

59) 이서향, 『일본의 방위태세강화와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03). p.18.

대로 열려 있는 海路와 空路는 천혜의 자원이다. 사면이 바다인 일본은 미래의 시대에 매우 소중한 자원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자연자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적 차원에서의 더욱 치열하게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상기와 같은 국제적, 지역적, 국내적인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일본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본격적인 침략사태의 발생가능성은 낮아졌지만 지역 안보문제에 추가하여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자신의 안보환경을 평가하고 있다.

제 2 절 日本의 安保戰略

1. 安保目標 및 安保戰略

가. 일본의 안보목표

일본정부가 '04방위대강'과 그 후 매년 발간하는 방위백서를 통하여 밝힌 일본의 안보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일본에 위협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 위협이 미쳤을 경우 이를 배제하며, 동시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목표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방위계획대강을 공표하면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첫 번째인 국가방위라는 목표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어느 나라건 국가의 생존에 관한 것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며 최고의 목표가 되는 데에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 목표에 대하여는 신중한 분석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 공영권⁶¹⁾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아시아 제패라는 국가

60)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정보본부, 2005), pp. 476-484.

61) 대동아 공영권이란 1940년 8월 1일 마쓰오카 요스케(松岡洋右, 1880~1946, '40년 외상,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막강한 제국군대를 건설하였고, 이러한 군사력으로 동아시아 전역을 물리적으로 침략한 비문명적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일본이 “국제적인 안보환경을 개선하여 일본에 위협이 미치지 않도록”하겠다고 하는 안보목표를 가지고 있는 한, 앞 장에서 밝혔듯이 「국가전략은 전·평시 국가이익을 실현하고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군사력과 함께 정치, 경제, 심리, 정신적 요소 등 무형적인 자산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국력수단을 통합사용하는 정책을 말한다」고 정의되는 것처럼 일본은 군사력을 포함한 모든 국력수단을 결집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두고 이것이 일본의 안보환경에 위협이 된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군사력 사용도 불가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된 안보목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물론 군사행동은 국내적인 법률적용 문제에서부터 국제적인 협력에 이르기 까지 넘어야 할 제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기우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이 처음으로 이를 안보목표라고 특정용어를 사용한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보다는 일본의 안보목표 수위가 상당히 상향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 장에서 밝혔듯이 일본정부의 주변국가에 대한 안보정세 평가는 매우 엄격하다. 국가명을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주요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한국과는 독도라는 영토문제에 추가하여 주변해역과 해저에 대한 조사활동에 대한 문제까지 군사적 관점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과는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로 정치·외교적으로 냉랭한 상태이며, 동중국해에서 중국의 가스전 개발로 민감한 해역에 중국군함의 출동과 중·러간의 대규모 공동훈련 등으로 군사적으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또한 북한과도 2006년 7월 북한의 미사일 실험발사로 인하여 고이즈미

A급전범으로 재판중 '46년 獄死) 일본 외상이 담화를 통해 처음으로 주창한 용어로서 그 요지는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대동아공영권을 결성하여 아시아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허울일 뿐 1941.12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동아시아 침략의 명분으로 사용하였고, 피점령국의 주요 자원과 노동력을 수탈하는데 사용했을 뿐이다.

와 김정일간의 평양선언도⁶²⁾ 자동폐기된 상태에서 10월의 핵실험으로 군사적 경계감이 고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의 남북한과 중국 모두를 군사적 관점에서 경계시하고 있음은 이들 국가가 일본의 안보환경 개선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나. 安保目標 達成 戰略

일본 정부는 상기의 두 가지 안보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 내정의 안정에 의해 안보기반을 확립하고, 효율적으로 군사력을 건설하는 등 일본 자신의 노력, 둘째 미·일 안보체제를 기조로 미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일층 충실히 하는 동맹국과의 협력, 셋째 유엔활동을 지지하고 諸外國과의 양호한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등의 외교노력을 통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보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 위협에 대하여는 미국의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것이다.⁶³⁾

여기서 일본 자신의 노력에 관한 부분 중 “안보기반 확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사시 국가 총동원을 가능하게 하는 각종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과거 1970년대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유사관련 법이 모두 정비되었다.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헌법개정이다. 일본은 지금까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기이익에 부합되게 군사력을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헌법해석간의 논란을 잠재우고 군사력의 운용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의미가 스며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세 번째의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다. 어느 나라이건 안전보장과 관련한 국가전략에서 동맹관계나 국제협력 없이는 국제화 시대에 살아갈 수 없다. 이런 활동을 정치·외교·경제·문화·과학

62)외교통상부, 『일본개황』(서울: 외교통상부, 2004), p.218, 2002. 9. 17 평양에서 북-일간의 정상회담 후 미사일 시험발사 동결연장 약속을 포함한 평양선언에 합의한 바 있음.

63)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정보본부, 2005), pp. 476-484.

기술 등 비군사 분야에서 접근하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 분야에서의 접근은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제2장에서 언급했듯이 군사력의 여러 기능과 역할 중에는 내정간섭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고 하였다.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국제활동은 때로는 정치·외교·경제 등 비군사 분야에 대한 내정간섭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력한 군사력을 소유한 국가가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할 때는 그 배경에 대하여 예의 주시하게 되는 것이다.

2. 對東北亞 및 對韓半島 戰略

가. 대동북아 전략

일본정부의 동북아에 대한 군사정세 평가는 매우 엄격해 지고 있다. 일본의 동북아에 대한 정세인식은 핵보유국인 러시아와 중국의 존재와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지속으로 이 지역에 대한 안보위협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중국의 고도 경제성장에 수반한 군현대화와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로 이 지역에서의 군사정세는 오히려 경각심을 높여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세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동북아지역에 대한 안보목표는 자국의 사활적인 이해에 대한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시나리오로서 중국과는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조어대에 대한 무력공격 등 국지적인 충돌이나 동지나해의 대륙붕 개발을 둘러싼 분쟁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에 대하여는 가능성은 낮지만 적대적인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만근해와 남지나해 등에서의 해상교통로에 대한 위협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해상교통로에 대한 것이며, 영토문제도 국지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반향이 큰 것이므로 간과 할 수 없는 사안이다.

상정한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으로는 일차적으로 자신의 힘을 기르는 것이지만 여기에는 한계가 있다. 달성 가능한 방법은 미국과의 공동대응이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를 냉전 이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냉전시에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안보의 담보력을 제공해 주었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국익에 따라 안보담보력이 유동화되고 있음은 이라크 사태에서 명백히 들어났던 것이다. 즉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따라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하고 국제사회에 동참을 요구했지만 맹방인 프랑스와 독일이 거부하였다. 그러자 미국은 다국적군을 구성하게 되었고 일본은 여기에 법률적 제약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참여함으로써 최소의 참여로 최대의 찬사를 받는 국익을 거둔 경험을 얻게 된 것이다. 즉 동북아에서 일본이 사활적 국가이익에 공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이며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은 단독의 대응보다는 미·일공동의 대응전략을 구사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장차 독자적인 대응능력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대한반도 전략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목표는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방지,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수립 저지,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보를 통해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⁶⁴⁾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해 왔고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강조하여 왔다. 한반도의 남북관계에서 균형정책을 추진한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즉 '90년대 초 공산권 몰락으로 북한정권이 위기에 봉착한 기회를 틈타서 일본은 부수상 가네마루신(金丸 信)을 필두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⁶⁵⁾ '90년대 중반 김일성 사망 후 북한의 김정일 체제가 위기에 처해있을 때도 연립여당 대표가 방북하여 관계개선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2001년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하여 한·미·일 삼각공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온 것도

64)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 p.56.

65) 외교통상부, 전제서. p.216.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로 남·북한 간 군사적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고 일본에 위협이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행보는 한반도의 현상유지와 안정의 확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측면도 강하게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한국의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햇볕정책의 계승자라며 친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과의 관계강화를 추진한 반면, 대일청산법 제정 등 일본에는 비우호적인 관계를 추진한바 있다. 그러자 일본은 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여 일북관계 개선을 시도하였고, 2004년 초에는 독도의 날을 지정하여 한국정부와 불편한 관계를 조성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참여정부의 친북정책과 친중국 정책을 견제하여 한국을 일본의 영향력 내에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이후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대유엔 활동과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Weapons of Mass Destruction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군사적인 참여 등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압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간섭과 참여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 3 절 日本의 防衛政策

1. 방위정책의 기본원칙

방위란 안전보장 속에 포괄적으로 함축될 수 있는 용어로서 안전보장의 군사적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⁶⁶⁾ 이러한 맥락에서 방위정책이란 안보목표와 안보전략을 군사적 측면에서 달성하기 위한 제반 정책과 방침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04방위계획대강에서 밝힌 일본의 안전보장 기본방침에 의하면 일본은 “일본 헌법에 따라 전수방위에 철저를 기하며, 타국에 위협을

66) 민병천, 『한국방위론』 (서울: 고려원, 1986). p.278.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르고, 문민통제를 확보함과 동시에 비핵3원칙⁶⁷⁾을 준수하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한다는 기본방침을 계속 견지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표현은 1995년 12월 내각결정으로 채택했던 「'96년 이후의 방위계획대강에 관하여」에서도 동일한 문구를 사용했던⁶⁸⁾ 점을 고려할 때 '05년 이후에도 기본적인 일본의 방위정책은 종래대로 유지될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2006년도 일본 방위백서도 일본이 헌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방위정책은, '57년에 국방회의 및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 「국방의 기본방침」은 우선 국제협조 등 평화를 위한 노력의 추진과 민생안정 등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을,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위력의 정비와 일·미 안보 체제를 기조로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서 내걸고 있다고 하였다.⁶⁹⁾ 그리고 「기타의 기본정책」으로는 “전수방위에 일관하고,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이념에 따르며, 일·미 안보 체제를 견지하는 것과 아울러 문민통제를 확보하고, 비핵 3원칙을 지키면서, 절도 있는 방위력을 자주적으로 정비해 오고 있다.”며 일본의 방위관련 제반 시책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 두 문건을 비교해 볼 때, '04방위대강에서 설명하는 안보목표 달성 전략과 '06방위백서의 국방의 기본방침은 근본적으로 내용이 같은 것이며 '04방위대강의 안보기본방침과 '06방위백서의 그 밖의 기본정책도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방위정책은 '06년 방위백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57년의 「국방의 기본방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가. 국방의 기본방침

일본은 방위백서 등 공적인 문서를 통하여 방위정책을 공표하고 있는

67) 핵무기의 불 제조, 불 보유, 불 반입을 의미함(3장 3절 1의 나 항 “비핵3원칙” 참조)

68)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01), p.384.

69)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에서 발췌 인용.

데, '06년 방위백서를 통해 밝힌 국방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일본이 “헌법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는 방위정책은, '57년에 국방회의 및 내각회의에서 결정된 「국방의 기본방침」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 「국방의 기본방침」은 우선 국제협조 등 평화에의 노력의 추진과 민생안정 등에 의한 안전보장 기반의 확립을, 그 다음에 효율적인 방위력의 정비와 일·미 안보 체제를 기조로 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서 내걸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풀이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헌법정신을 준수하는 것으로 헌법 9조에 명기된 전쟁포기, 군사력 불 보유, 교전권 부인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다음은 위에서 언급한 안보목표 달성전략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첫째 외교와 내정을 통한 안보기반 확립, 둘째는 효율적인 군사력 건설, 셋째는 미·일 안보체제 긴밀화이다.

그런데 50년전에 결정한 이 방침이 정책으로서 아직도 기능하리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러도 불변하는 것이 있기는 있다. 국가이익이나 인간의 소중한 가치 등일 것이다. 국가이익이 변하지 않는 한 이를 유지·확보하기 위한 국방정책 중 ‘기본방침’은 50년이 지났지만 그 맥을 이어온 것이라 여겨진다. 50년간 그 정통성을 이어온 일본의 국방의 기본방침은 그 의미가 약화되기 보다는 더욱 발전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진다. 단적인 예가 자의적으로 헌법해석을 통하여 군사력을 키워온 것에서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

또한 내치면에서 민생안정을 통한 안보기반 확립은 일본사회가 더욱 보수화로 기울면서 '50.'60년대의 사회혼란 등은 찾아보기 어려워 졌고, 외교역량도 강화되어 1994년 유엔헌장의 구적국조항 삭제⁷⁰⁾에 이어 상임이사

70)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 p.52.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진출하지 못한 이유는 유엔헌장의 <舊敵國條項>(제 52조와 107조) 때문이다. 구적국조항은 2차세계대전 때 연합국의 적국이었던 국가들이 다시 침략전쟁으로 간주되는 행동을 할 때는 연합국이었던 유엔 가맹국이 안보리 결의 없이 그 국가를 공격할 수 있다고 돼 있다는 것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구적국의 구체적인 국명은 헌장에 표기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일본,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핀란드 등 7개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이 시대에 뒤떨어진 조항이므로 삭제하자는 주장을 1970년 이후 여러 차례 제기하

국으로의 진출까지 넘보게 되었다. 군사력 분야에서는 50년이 지난 지금은 세계경찰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려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04방위대강에 언급된 '중앙즉응집단' 창설이다. 국제적인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 있도록 상설 전담부대를 보유한다는 것이다. 유엔의 즉각 출동부대의 성격을 띤 부대를 확보하여 지구 곳곳으로 군사력을 파견하여 과거처럼 경제협력이나 ODA등 외교적 방법이 아닌 군사적 방법으로 국제사회에 공헌하겠다는 것이다.

미·일 안보체제는 국방의 기본정책으로서 언제까지 이어 갈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두 나라의 국익이 언제까지 서로를 필요로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50년 동안 국가전략의 최상위 수준에서 기능해 왔고, 지금도 일본의 안보전략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도 동아시아 안보전략에서 일본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볼 때 미·일 안보체제는 상당기간 일본의 기본 국방정책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기타 주요 방위정책

「국방의 기본방침」과 함께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관련 주요정책에는 전수방위전략 견지, 비군사대국화, 문민통제의 확립, 비핵3원칙 준수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제 원칙들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1) 전수 방위

전수 방위란 일본이 상대방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하고, 방위력행사의 양상도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도로 한정된다. 그리고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하여 필요최소한의 것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수동적인 방위전략의 자세를 취한다는 것이다.⁷¹⁾ 전수방위를 위한 자위권행사의 지리적 범위도 일본의 영토에 한정된다. 따라서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한 무장부대의 해외파견

있고, 1994년 12월 유엔총회에서 “구적국조항”을 삭제하는 헌장개정안이 통과되었다.

71)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117.

은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원칙론에 불과할 뿐 최근에는 지리적 범위도 적국의 미사일 발사기지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⁷²⁾ 상황도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의 개념을 확대하여 “무력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선제공격까지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아 전수 방위란 형해화 된 채 실상은 적극적 “진진방위” 또는 “공세적 방위”전략으로 전환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비군사대국화

비군사대국은, 명확히 정의된 개념은 없으나,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일본이 타국에 위협을 주는 군사대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이 자위를 위한 필요최소한도를 초과하여 타국에 위협을 주는 강대한 군사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일은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⁷³⁾.

이러한 내용을 일본 스스로 공적인 문서를 통하여 선전할 사항인지 의아스럽다. 군사비 세계 3위권, 이지스함 세계 2번째 보유, 공중급유기 확보 예정, 대형 수송함 및 수송기 보유, 군사정찰 위성 확보 등을 화보하고 이R다. 과연 이러한 군사력 보유가 인접국인 한국에게 위협적이지 않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아마도 위에서 언급한 ‘타국에게’라는 의미는 중국이나 러시아를 의미할 뿐 한국, 북한, 대만 등 동북아의 일본보다 국력이 작은 국가에게는 동 조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다.

(3) 비핵3원칙

비핵3원칙이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도 않으며,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을 일본은 국시로 하여 견지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무기의 제조, 보유는 원자력 기본법의 규정상 에서도 금지하고 있으며 ‘76년 비준된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72)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6年版,(東京: 朝雲新聞社, 2004), P.579.

73)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년), p.74.

의하여 일본은 비핵국가로서 핵무기의 제조나 획득을 하지 않을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원칙도 사실상 폐기된 원칙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핵잠함 등이 일본에 기항했던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특히, 일본이 보유한 다량의 플루토늄과 핵 재처리시설, 핵탄두 제조기술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 원칙은 있으나 마나한 원칙임을 알 수 있다. 이 원칙은 1986년 6월 미국이 '포괄사전동의방식'에 의한 재처리를 허락하는 순간부터 일본은 정식으로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았다고 볼 수 있어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⁷⁴⁾ 특히 금년 10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자 아소(麻生太郎) 외상이 일본도 핵무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사실로 보아 비핵3원칙은 사문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4) 문민통제의 확보

문민통제는, 과거 군국주의 시대와 같이 군사력 건설 및 운용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을 군인이 직접 하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일본은 이를 “Civilian Control” 이라하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사에 대한 정치우선 또는 군사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정치통제를 말한다.”며 군사력 증강에 대한 제동장치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패전까지의 경위에 대한 반성도 있고 자위대가 국민의 의사에 의해 정비, 운용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현법 체제와는 다르게 엄격한 문민통제의 제반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구체적 예로서 국회가 자위관의 정원, 군조직등을 법률과 예산으로 의결하고 작전출동의 승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군을 문민이 통제하는 것을 들고 있다. 그리고 군통수권자인 총리와 군령과 군정을 집행하는 방위청장관은 헌법상 문민이 아니면 못하게 되어 있다며 문민통제 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74)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서울: 중앙대행정대학원, 2006), p.49. 1986년 허락된 ‘포괄사전동의 방식’은 그 동안 매건수 마다 미국의회의 동의를 받던 방식에서 30년간 플루토늄 사용계획을 토대로 플루토늄확보를 승인받은 셈이다. 이는 미국이 일본을 사실상 핵 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군국주의 시대와 국가운영체제가 달라서 그런 것으로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 사정일 뿐 문민통제 때문에 군사력 건설 및 운용이 주변국에게 불안요인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보인다. 특히 최근의 일 국회구성은 80% 이상이 보수 성향이므로 통제기능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총리나 방위청장관 역시 우익의 선두에 있어 문민통제의 진정한 의미를 달성할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상기의 제 원칙은 상당기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주변국에게 긍정적으로 비추어 졌었다. 그러나 일본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방위정책에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친 방위력정비계획, 방위계획대강, 중기업무건적,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에 따라 방위력을 점진적으로 증강시켜옴으로서 오늘날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나아가 최근에는 주변사태법('99.5)⁷⁵⁾, 테러지원특별법('01.11), 유사관련법('03.6)⁷⁶⁾, 이라크부흥지원특별법('03.7) 등이 제정됨으로써 일본은 지역안보문제에는 물론 지구적 안보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이 주창하고 있는 제 방위정책들은 결국은 헌법으로 금지한 군사력 확충을 국민과 주변국들에게 숨기기 위한 것들임에 지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2. 軍事力 建設 政策

가. 군사력의 역할

일본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군사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 대응, 둘째 본격적 침략사태에 대비, 셋째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주체적, 적극적 참여를 들고 있다.⁷⁷⁾

75) 일본 주변에서 발생한 사태로 일본의 안전에 위협이 될 경우 이에 대처하기 위한 법으로 주로 미군의 후방지원을 위한 것이며, 일부는 일본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임.

76) 일본 유사시 군사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필요한 명령을 방령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의 계엄법과 유사한 것임.

77) 국방정보본부, 『일본방위백서』(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년), p. 135.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 대응에는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게리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등에의 대응, 도서부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및 영공침범 대처와 무장공작선에의 대응, 대규모. 특수재해 등에의 대응을 제시했다.

그리고 본격적 침략사태에의 대비는 일본에 대한 본격적인 침략가능성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인원. 장비를 근본적으로 수정, 감축하지만 군사력의 본래의 역할이 본격적 침략사태에의 대처하는 것이라며 여전히 대규모전의 대비태세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주체적 적극적 참여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하기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한 군사력 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이 천명하고 있는 전수방위 원칙으로 보면 자위대의 역할을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제무대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장하겠다는 정책의 변화 또는 국가전략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나. 군사력 건설 방향

군사력은 위협이 닥쳤을 경우 이를 배제하는 국가의 의사와 능력을 나타내는 안보의 최종적 담보이다.⁷⁸⁾ 지금까지 일본은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 입각하여 군사력 건설을 진척시켜 왔으며 이것과 미일안보체제와 더불어 침략의 사전방지에 기여해 왔다고 일본 스스로가 평가하고 있다.⁷⁹⁾ 앞으로의 군사력건설은 종래의 “기반적 방위력 구상”의 유효한 부분은 계승하면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종래와는 다른 군사력 건설을 시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말한 “기반적 방위력 구상”이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 직접대항하기보다도 일본 스스로가 힘의 공백이 되어 일본 주변지역의 불안요인이 되

78)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년), 476-484.

79) 상계서, 재인용

지 않도록 독립국으로서의 필요최소한의 기반적인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⁸⁰⁾.

즉 50여년간 견지해 왔던 “기반적 방위력 구상”에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력 건설 방향이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서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란 앞서 언급했듯이 탄도미사일 공격에의 대응, 게릴라 및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 등에의 대응, 도서부에 대한 침략에의 대응을 말한다. 그리고 주변 해.공역 경계감시 및 영공침범 대처와 무장공작전에의 대응, 대규모. 특수재해에의 대응 등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일본이 군사력을 건설하면서 구체적 군사행동의 사태별로 적시한 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공표되지는 않았지만 계획수립과정에서 검토했을 사태별 대상이 누구였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아마도 탄도미사일 공격 대상은 중국일 것이고, 게릴라 및 특수부대는 북한일 것이며, 도서부 침략은 독도를 포함했을 수 있어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와 같이 대응양상은 주로 국내적 역할의 요소가 대부분이지만, 대량과 괴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의 진전, 국제테러조직의 활동,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전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일본의 군사력 건설 중점은 자국방위는 물론 세계경찰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를 확실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국제안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제평화협력활동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군사력을 건설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군사력은 “即應性, 高機動性, 柔軟性, 多目的性을 구비하고 아울러 첨단과학기술력과 정보력을 가진 多技能이며 彈力的이고 實效性 있는 것으로 한다”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군대, 유사시를 대비한 억지력으로서의 군대가 아니라 평시부터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군대를 만들겠다는 군사력건설 정책으로 분석된다.

80)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년), pp.476-484.

제 IV 장 日本의 軍事力 強化實態 및 海外投射能力

제1절 일본의 군사력 증강 과정

1. 창군초기 (1950 ~ 1957년)

가. 자위대의 탄생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과 함께 일본은 점령군의 비군사화정책에 따라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1940년대 후기에 나타난 미·소의 냉전, 1949년 중국대륙의 공산화, 그리고 일본내의 공산주의 세력의 대두 등으로 점령군은 비군사화 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되자 주일미군은 유엔군으로 급거에 한국으로 출동하게 되었고, 일본내에서는 공산당을 비롯한 적색분자들의 소요 등으로 치안확보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일본내 치안유지를 위하여 7월 8일 점령군사령관 맥아더는 서한을 통하여 요시다 시게루 수상에게 육상경비를 담당할 기관으로서 경찰예비대 창설 준비를 지시하였다.⁸¹⁾ 이어서 8월10일 GHQ⁸²⁾의 지령에 근거하는 포츠담 정령에 의해 75,000명 규모의 경찰예비대가 총리부 산하에 조직됨으로서 일본은 패전 후 5년만에 재군비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1952년 4월 26일에는 해상경비를 전담할 기관으로 해상보안청 산하에 해상경비대가 3,000명 규모로 발족되었으며, 동년 8월 1일에는 국방을 전담할 기관으로서 보안청이 총리부 산하에 발족되었다⁸³⁾. 보안청의 발족과 더불어 해상보안청 산하기관인 해상경비대가 경비대로 개명하여 보안청에 이관되었으며, 경찰예비대도 동일부로 보안청에 편입되었는데 2개월 뒤 10월 1일부로 경찰예비대는 보안대로 개명하였다.

81) 防衛年鑑刊行會, 『防衛年鑑』 (東京: 株)防衛年鑑刊行會, 1982), p.402

82) GHQ(General Headquarters):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과 함께 동경에 설치된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지칭함. 1954.4.28일 샌프란시스코 조약체결과 동시에 폐쇄됨.

83) 인터넷.<http://ja.wikipedia.org/wiki/검색어> “警備隊”에서 발췌.

1954년 7월 1일 방위청 설치법과 자위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안청은 방위청으로, 보안대는 육상자위대로, 경비대는 해상자위대로 이름을 바꾸어 재창설 되었으며, 공군력인 항공자위대가 이날부로 창설되었고, 육,해,공 통합작전을 위한 통합막료회의가 동일부로 창설되었다. 이로써 일본은 패전 9년만에 국방을 전담하는 행정기관으로서 방위청과 육,해,공 무장세력으로서 육상, 해상, 항공자위대가 설치되었으며 통합작전을 위한 통합막료회의가 설치됨으로서 완벽하게 재무장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다.

나. 기초적인 군사력 확보

자위를 위한 군사력 보유는 합헌⁸⁴⁾이라는 헌법해석의 교묘한 방법으로 헌법 9조의 육·해·공 전력 불보유 조항⁸⁵⁾을 무시하고 육·해·공 군사력 확보의 길로 들어선 일본은 재무장에 대한 주변국가와 국내의 우려를 고려하여 자위권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군사력 확보를 목표로 하였다.

창군초기의 군사비 1천억엔 대의 적은 규모였고, 그마저 주일미군 지원비용이 30~40%에 달하여 실질적 군사력 증강은 제한되었다. 장비는 대부분 미군이 철군하면서 남기고 간 장비를 수리하여 사용하거나 대여받아 사용하였으며, 해군의 경우는 예외로 일부 함정을 해상보안청으로부터 관리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설도 상당수가 점령군이 사용하던 것을 인수하여 사용함으로서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2. 냉전기의 군사력 증강 (1958 ~ 1990)

1956년에는 국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으로서 「국방회의」를 신설하였으며, 1957년에는 「국방의 기본방침」을 국방회의에서 확정하였다. 일본은 이 때 설정한 국방의 기본방침에 따라 1958년부터 1976년 사이에 3년 또는 5년간의 방위력정비

84) 1953년 12월 당시 ‘하토야마’ 내각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오무라’방위청장관의 답변을 통하여 ‘헌법은 자위권을 부정하지 않는다’며 자위를 위한 군사력의 보유를 합헌화 하였음.

85) 일본의 헌법 9조 2항에 “----- 육·해·공 및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음.

획을 4차에 걸쳐 추진하였다. 제4차 방위력정비계획이 완료된 1976년 이후에는 「방위계획의 대강」에 의하여 「53, 56, 59」 중기업무계획⁸⁶⁾을 추진하여 군사강국을 지향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에는 5년 단위의 방위력정비계획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하여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호력 구축을 목표로 군사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가. 60 ~ 70년대 방위력 증강

이 기간 중의 주요정세로는 '62년의 쿠바미사일 위기, 64년 톤킹만 사건을 계기로 월남전의 본격화, '64년 동경올림픽, '65년 한일수교, '67년 3차중동전, '69년 닉슨독트린 발표 등 안보정세가 매우 복잡한 시기였다. 이런 와중에 한국전에 이은 월남전으로 제2의 전쟁특수로 경제발전의 기틀을 구축한 일본은 제1차로부터 제4차에 걸쳐 방위력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이 시기까지 건설한 주요 군사력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는 전차 790대, 장갑차 640대, 자주포 80문, 작전용 항공기 330대 등으로 목표의 95%이상을 달성하였다. 해상자위대는 호위함 49척, 잠수함 14척, 대잠항공기 190대 등으로 목표의 94% 이상을 달성하였다. 항공자위대는 작전기 840대로 목표(770대)를 초과하여 보유하였으며 방공장비 나이키는 6개군 계획에 5개군을 확보하였다.⁸⁷⁾

나. 70년대 후반 ~ 80년대 전반의 방위력 증강(1977 ~ 1990)

이 시기는 1969년의 닉슨 독트린에 이은 1972년 2월 28일 미·중간의 수교발표로 인하여 대미 의존 일변도의 일본 안보정책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과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의 공산화, 1976년 8월 18일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인한 공산주의 세력 팽창의 위협이 증가한 시기였다. 이러한 안보환경의 변화에 즉응하여 1976년 10월 29일 국방회의 및 내각 결정으로 장기 군사력 증강 기획문서인 방위계획 대강을 결정하였다.

86) 「53, 56, 59」 중기업무계획이란 일본의 천황 연호인 昭和53年(1958년), 56년(1961년), 59년(1964년)도에 작성한 중기 방위력증강계획을 의미함.

87)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6年版, (東京: 朝雲新聞社, 2004), P.76

이것은 방위력 증강에 대한 최종 목표를 미리 결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의 정원은 18만명으로 하고, 주요부대는 13개 사단(1개는 기갑사단), 2개 혼성단 체제를 유지하며, 전차는 1,100대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해상자위대는 기동함대로 4개 호위대군, 연안경비함대로 10개 부대, 잠수함 6개 부대, 대잠기부대 16개 부대 편성을 목표로 하였다. 주요장비는 호위함 60척, 잠수함 16척, 작전기 220대를 구비하는 것이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부대 13, 정찰기부대 1, 수송기부대 3, 경계기부대 1개 비행대 등을 편성하고 작전기 430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전력은 대부분 1980년대 중반까지는 완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기간의 처음 3년은 短年度 계획에 의거 시행하였고, 1980 ~ 1985년에는 5개년계획을 매 3년마다 재계획하는 53 및 56 중기업무계획의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이 기간에 달성하고자 했던 주요 목표전력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는 병력과 부대편성은 대부분 목표달성을 하기로 하였으나 주요장비인 전차는 850대를 확보하고, 야포 468문을 확보키로 하는데 그쳐 최종 확보목표를 크게 밀돌았다. 해상자위대는 1,000 해리 해상교통로 방위 달성을 목표로 호위함 60척, 잠수함 15척, 작전기 185대 확보를 계획하여 함정은 목표에 근접하였으나 항공기는 목표에 크게 부족하였다. 항공자위대는 작전기 403대 확보를 계획하여 목표의 94%에 머물렀다.⁸⁸⁾

다. 80년대 후반(1986 ~ 1990년)

일본 정부는 1984년 5월 「56중업」 목표가 1987년에 달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동년 5월 8일 국방회의에서 방위청으로 하여금 1986 - 1990년 기간의 신 방위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결정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대국화 구상을 결정한 “최고국방회의”(1985. 8)는 1986년도부터 시작하는 방위청의 “5개년 주요 장비조달 계획”을 정부의 “신중기방위력정비 5개년계획”으로 격상시켰다. 제4차방 이후 신방위 계획인 “53중업”, “56중업”은 단지 예산편성을 위한 방위청의 내부적인

88)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6年版, (東京 : 朝雲新聞社, 2004), PP. 90-92.

자료라는 성격을 갖는 반면, 이 계획은 각의의 의결을 거친 정부수준의 계획이 된 것이다. 이러한 점은 방위력정비계획과 상응한다.

이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주목을 끄는 이유는 1976년 “방위계획의 대강” 결정시 정책지침으로 결정된 GNP 1% 내에서의 방위비 책정이라는 문제가 다시 큰 논란의 대상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이 신 계획에서 1%의 돌파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인하여 일본 국내외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다. 왜냐하면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이로 인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변화는 1960년대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역할이 축소되는 구조적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항상 관계국 및 주변국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⁸⁹⁾

이 기간 중의 방위력 정비방침은 본토 방위능력, 해상교통의 안전확보 능력, 전방 방위력의 구현, 방위력정비 및 운용의 합리화·효율화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신대강”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다만 해상교통의 안전확보가 비중 있게 다루어져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주요 정비내용 및 규모는 해·공군력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F-15, P-3C의 도입량과 신예 유도미사일인 “패트리어트”의 도입이 이를 말해 준다. 그러나 이들은 신 계획 이전에 도입이 결정된 만큼 새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으나 신계획시 도입이 검토되거나 혹은 3년 후 예정된 신 계획 수정시 도입이 검토될 예상 장비도 큰 논란거리가 되었다.

3. 90년대 이후 탈냉전기 (1991 ~ 2000년)

공산권의 몰락으로 제1의 가상적이었던 소련의 군사위협이 낮아짐에 따라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방향이 달라졌다. 냉전이 종식된 90년대 초반은 80년대 후반의 냉전기 계획을 조정하는 수준였으나, 90년대 후반은 자국방위 중심에서 지역 및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명분으로 전반적인 방향 수정하에 군사력증강을 시도한 시기였다.

89) 국방관리 연구소, 『일본의 신방위계획』, (서울 : 국방관리연구소, 1986), 제 86 - 125호

가. 90년대 전반의 군사력 증강 (1991 ~ 1995)

이 기간 중의 방위력증강계획은 추진방침 상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는데, 이의 하나는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과학기술을 배경으로 질(質)에 중점을 두고 최신무기 체계로 무장된 군사력을 육성한 것이다. 즉 현대 무기체계는 화력의 위력 및 사거리 증대, 정확도, C³ I 체계의 자동화 추세, 축성 및 장갑 방호능력 향상 등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는 환경요인과 이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방위력 증강 5개년 계획에 적극 반영한 것이다.

이러한 방침하에서 육상 자위대는 현재의 획일적 사단 편성을 기계화, 장갑기동화, 공중기동화 등 다양한 사단 편성을 구상하고 독자적으로 지대함 미사일을 1991년부터 실전배치 하는 등 육상무기체계의 Hi-Tech화 및 다양한 지상 C³ I 자동화 체계의 확립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해도 및 동북부 지역에 중점 배치된 사단을 중·서부로 무게중심을 전환하고 기동화 경량화를 통하여 유사시 사태발생 지역으로 신속한 증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해상 자위대는 이지스(AEGIS)함 도입과 과학화된 대잠작전 센터를 설치하고 기동함대 편성을 강화하며 기간중 경향모로 개조가 가능한 대형 수송함(8,900톤)의 보유를 계획하였다. 기동함대와 이지스함 그리고 대형수송함 보유에 의해 현재 러시아 극동공군의 해상공격에 대한 생존율을 80%로 향상시킨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93년과 '95년에 2척의 이지스형 호위함을 작전배치 하였다. 항공자위대는 공중 조기경보관제기(AWACS) 보유를 적극 검토하고 현재의 최신헌공기의 F-15기, 패트리엇(Patriot) 미사일, 방공 C³ I 자동화체계, E-2C 와 AWACS에 의한 최신 무기체계로 편성된 방공망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나. 90년대 후반의 군사력 증강 (1996 ~ 2000)

1995년 11월 일본 정부는 군사력증강에 관한 장기 기획문서인 “1996년 이후의 방위계획 대강”(이하 “신대강”)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이문서는 1976년 10월 작성된 이래 20년간 냉전시대에 군사력증강 목표의 지침으로 사용하여 오던 것을 새롭게 변경한 것이다. 냉전종식으로 인한 안보환경의 변화와 군사력에 의한 국제공헌의 필요성 대두 및 일본이 지역의 안보역할을 강

화하도록 미국의 요구⁹⁰⁾ 등에 기인한 것이었다.

신대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는 우선 정원을 18만명에서 16만으로 축소하며, 지상 배치부대를 12개사단, 2개혼성단 체제에서 8개사단, 6개여단 체제로 조정하기로 했다. 장비는 세계적인 재래식 장비의 감축추세에 따라 전차는 1,200대에서 900대로, 야포는 1,000문에서 900문으로 축소되 전차는 90식 신형전차로, 야포는 자주포로 대체하는 등 기동화, 첨단화하기로 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연안경비부대 10개부대중 3개 부대와 대잠초계기부대16개중 3개 부대를 줄이기로 하고, 이에 따른 함정과 작전기를 줄여 호위함은 10척이 준 50척, 작전기는 50대가 준 170대로 전력목표를 수정하였다. 그러나 수량을 줄이는 대신 7,500톤급 이지스형 호위함과 8,900톤급 수송함의 도입을 결정하는 등 대형화, 첨단화를 통하여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항공자위대는 전투기부대 1개를 감축하고 이에 따른 작전기 30대를 줄여 400대를 보유하기로 하면서 대형수송기와 AWACS 도입을 계획하는 등 대형화, 첨단화를 도모하였다.

이러한 신대강의 방위력 증강의 개념 하에 실시된 1차 5개년 계획인 “신중기방”의 정비계획을 보면, 육상방위력은 5개 사단을 여단화 하되 경량화, 기동화에 중점을 두고 개편하며 90식 최신형 전차 96대, 자주포 45문, 대전차헬기 4대 등을 전력화하기로 하였다. 해상방위력은 호위함 8척, 잠수함 5척 등 작전함 31척, 10만톤을 건조하고, 초계헬기 37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6, ‘98년도에 이지스형 호위함 3, 4번함이 작전배치 되었고, ‘98년도에 8,900톤급 대형수송함 ‘오스미’함이 작전배치 되었다. 항공방위력은 ‘98, ‘99년도에 AWACS 각 2대씩 총 4대를 도입하였으며, 일본기술로 제작된 전전후 전투기 F-2가 양산체제로 돌입하였다. 또한 정보·지휘·통신능력의 획기적인 향상을 도모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98년의 정보본부 창설과 ‘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미사일 발사로 그해 11월 군사정찰위성 도입을 결정한 것이다.

90) 1993.3.12 북한의 IAEA 탈퇴로 촉발된 극동지역 유사시에 대비한 일본의 지역안보역할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1996.4.17 동경에서 하시모토-클린턴간 “미·일 공동선언”을 통하여 미국은 일본에게 지역안보역할 강화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1997. 9. 23 워싱턴에서 신미·일방위협력지침(일명 뉴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법적으로 빛받침하기 위한 주변사태법이 1999.5.24 제정됨으로서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지역안보문제에 군사력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제 2 절 일본의 군사력 수준 및 전력증강 계획

1. 일본의 군사비

2006년도 일본의 군사비는 4조 8,135억 엔으로⁹¹⁾ 이를 당시 미불 환율(1\$=110엔, 2006.1)로 환산시 약 437억불이나 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군사비는 규모면에서 미. 중. 러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한국의 국방비에 비해 3배가 넘는 큰 규모이다.

<표4-1> 주요 국가의 국방비 비교

2003년기준

국 가	GDP (억US\$)	국방비 (억US\$)	GDP대 국방비(%)	병력 (천명)	1인당군사 비 (US\$)
미 국	104,460	3,485	3.3	1,427	1,138
일 본	40,000	395	1.0	240	290
독 일	22,000	333	1.5	285	383
프랑스	16,000	402	2.5	259	636
영 국	15,640	373	2.4	213	590
중 국	12,370	510	4.1	2,250	37
러시아	10,690	508	4.8	961	333
한 국	4,760	131	2.8	681	266

출처: 국방백서 2004, ‘부록 27’, (서울: 국방부, 2004)

일본의 방위비에 대한 개념은 각국의 방위비에 대한 개념과 매우 다르다. 예를 들면 <표4-1>의 2003년도 일본의 방위비 395억 달러는 Military Balance 2003-2004에 게재된 것이다. 같은 해 일본 방위청이 방위백서를 통해 발표한 실제 방위비는 4조9,530억 엔으로 이는 책정당시의 실제 환율(1US\$=105엔, 2003.1)을 적용할 경우 약 471억 달러로서 위 표의 395억 달러보다 약 19%가 증가한 무려 76억 달러나 더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일본이 방위백서에 공표하는 가시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한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많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방위비는 最狹義의 방위비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91)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 자료 21에서 발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일본 방위비를 우선 NATO방식으로 환산하는 것과 환율 변화에 따른 상대적인 증가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방대학교에서 이에 대하여 연구한 내용에 의하면 일본의 방위비 개념을 올바르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내용은 NATO방식에 의한 방위비 산출시 일본 방위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것이다. 먼저, 일본의 방위비를 NATO 방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아래 <표 4-2>와 같이 일본 방위비의 포함요소를 NATO 국가, 미국, 한국의 그것과 상호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일본 방위비의 문제점을 도출해 낼 수 있다.

< 표 4-2 >防衛費 計上方式 ○: 포함, ×: 미포함, -: 해당무

구 분	일 본	한 국	미 국	N A T O
準軍隊所要經費 (해안경찰경비등)	×	○	×	×
핵무기관련경비	-	-	○	○
군인연금	×	○	×	○
군사원조	-	-	×	○
外國軍駐屯經費	○	○	-	○
군용지 매입	×	○	○	○

출처 : 장문석, ‘현대일본 군사론’, (서울: 국방대학원, 1997), P.130.

첫째로 군인연금 지급에 필요한 경비의 경우, NATO 국가와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만 일본의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다. 실례로 2005년에 일본정부가 지급한 은급비는 1조 693억엔⁹²⁾으로 이는 당해년도 방위비 4조 8,563억 엔의 약 1/4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만약 이 은급비만 포함하더라도 일본 방위비는 5조 9,256억엔이 되어 2005년도 공식 발표치 보다 무려 22%정도 늘어난다.

둘째로 자위대가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계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즉, 경찰예비대가 발족하고 나서 자위대의 토지와 건물은 약 1,000배 정도의 수준으로 증대되었지만⁹³⁾ 일본의 방위비에는 일체 언급이 없다.

92) 일 재무성, 『평성18년도 예산 및 재정투융자 계획설명』, 제164회 국회보고(동경: 재무성, 2006), P.31.

셋째로 일본은 해상보안청 등 準軍隊에 所要되는 경비의 경우 한국은 이를 戰.海警費로 하여 방위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일본은 이를 계상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방위비는 이 외에도 군사경찰 위성을 위성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한사항으로 인하여 소요경비를 방위비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기초연구 등에 관한 예산도 상당부분 문부과학성의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방위비를 곳곳에 숨겨 놓고는 방위비가 GDP의 1% 미만이라고 선전하면서 경쟁 상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는 발표내용에 신뢰성이 적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이 군사비 규모를 실제보다 축소시키려는 이유는 주변국에게 군비경쟁을 잠재워 상대적으로 자국이 우월한 군사력을 보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G-8 국가들이 지난 10년간 국방비를 대폭 줄이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군사비를 증가시키고 있는 점을 보아도 일본의 군사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자위대의 전력

가. 지휘체계 및 편성

(1) 개요

일본의 군사조직인 방위청과 자위대의 지휘체계는 그림<4-1>에 보는 바와 같이 내각총리대신인 수상이 자위대의 최고통수권자이며 그의 명령은 방위청장관을 통하여 집행된다. 방위청장관은 주로 문민으로 구성된 내무부국의 보좌와 통합막료감부의 막료장(이하 ‘통막장’이라함)의 부대운용에 관한 보좌를 받아 자위대 각부대에 명령을 발하며, 이 명령은 통막장을 통하여 집행된다.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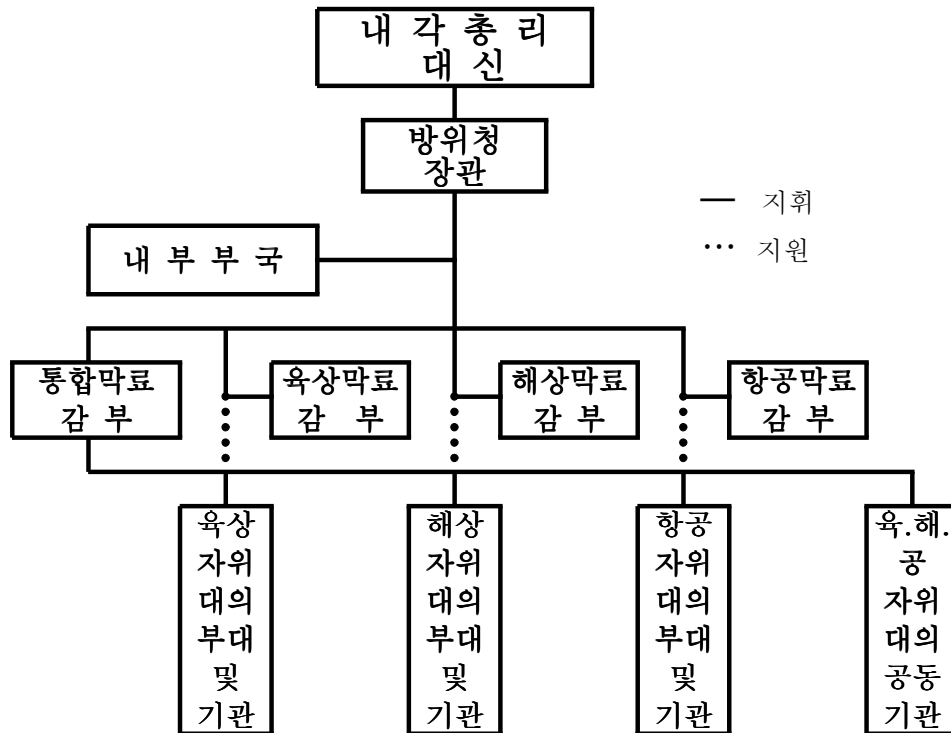
이러한 지휘체계는 2006년 3월부터 출범한 통합막료감부가 육·해·공

93) 驚見友好, 『日本の 軍事費 』(東京: 學習の 友社, 1984), P.38.

94) 일 통합막료감부 홈페이지(<http://www.jda.go.jp/join/>), “統合幕僚長の職務”에서 발췌

3자위대의 실질적인 상급제대로서의 기능을 부여받음으로서 가능하게 된 것인데 이는 미국의 통합군체제를 모델로 지휘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그림 4-1 > 일본의 국방조직 및 지휘체계



상기와 같은 일본의 부대운용에 관한 지휘체계와 군사조직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먼저 법률주의로서, 이는 국가방위에 관계되는 핵심내용을 헌법(9조)에 구체적으로 못 박아 두고 있다. 그리고 방위청의 직무, 권한, 조직, 자위대의 행동 등도 법률로 정해두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문민우위(Civilian Control)의 원칙으로서 자위대 최고사령관은 내각 총리대신이며 방위청장관이 부대를 직접 지휘·감독한다. 세 번째는 3군 통합운용체제로서 육·해·공 3자위대의 운용에 관하여 통합마료감부(이하 통합마료감부는 ‘통막’으로 함)의 통막장이 일원적으로 장관을 보좌한다.

상기의 특징 중 법률주의와 문민우위 원칙은 태평양 전쟁의 원인을 군

벌의 독주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⁹⁵⁾에서 기인한 것으로서 문민인 방위청 장관이 실질적으로 자위대를 지휘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군벌억제를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06년 3월 27일을 기하여 <그림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육·해·공 각 자위대를 통합운용 할 수 있도록 지휘체제를 변경한 것은 상기의 군벌억제의 특징과는 상반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2) 指揮體系 變更 背景 및 經過

1954년 육·해·공 3자위대 창설과 함께 통합막료회의가 발족하였는데, 발족 당시 이 기구는 3자위대에 각각 발령되는 장관의 명령을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 그 구성도 3자위대의 막료장과 통합막료회의의장으로 구성됨으로서 의결기구일 뿐 집행기능이 없는 기구에 불과했었다. 그 후 2개 자위대 이상으로 구성되는 통합부대에 대한 장관의 명령을 집행하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부분적으로 권한이 증대되었다.⁹⁶⁾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의 발사⁹⁷⁾와 주변사태법의 제정⁹⁸⁾ 등을 계기로 군사력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3자위대의 통합운용 필요성이 급부상하였다. 특히 자위대의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에의 참전⁹⁹⁾과 미국과의 TMD 공동 연구와 개발이 본격화되고 북한의 핵개발의혹이 심각화하면서¹⁰⁰⁾ 통합운용의 필요성이 높아 졌다. 결국 2002년에 “각자위대별 운용을 기본”으로 하던 부대운용 태세로부터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태세로의 전환방침을 방위청 차원에서 결정하였다. 그 후 2004년 12월 내각결정으로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채택하면서 “각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운용하고 자

95) 태평양 전쟁시에는 군통수권자가 천황이었으므로 군운용에 관하여는 육·해군장관이 내각의 견제나 통제 없이 직접 천황의 지휘를 받음으로서 무한질주 하였다는 견해.

96) 1961년 통합부대에 대한 명령집행 등의 권한이 추가됨.

97) 1998.8.31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하였는데 미사일 몸체 일부가 일본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에 추락함으로서 북한의 미사일 성능이 일본 전역을 커버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본을 경악하게 한 사건임.

98)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p, 487-516. “방위연표”에서 발췌. 1999.6 “주변사태안전확보법”중의원 통과.

99) 상계서, 재인용. 2001.11.25 해자대함정 3척이 아프카니스탄 전쟁지원을 위해 인도양으로 출항했으며 2004.1.16에는 육자대의 이라크 파견 선발대가 출발하였음.

100) 상계서, 재인용. 북한은 2002.12.12 핵개발시설 재가동과 건설재개를 발표한데이어 2003.1.10 NPT 탈퇴선언을 하는 등 1990년대 전반에 있었던 핵개발 파동에 이어 2차 핵개발 파동을 벌임.

위대의 임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위대는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며 이를 위한 체제를 강화한다”며 자위대의 통합운용체제로의 제도적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2006년 3월 27일부로 장관보좌를 위한 의결기구로서의 통막이 자위대를 직접운용하는 집행기구로서의 통막으로 권한이 대폭 강화된 것이다.

(3) 統合運用體制 強化 内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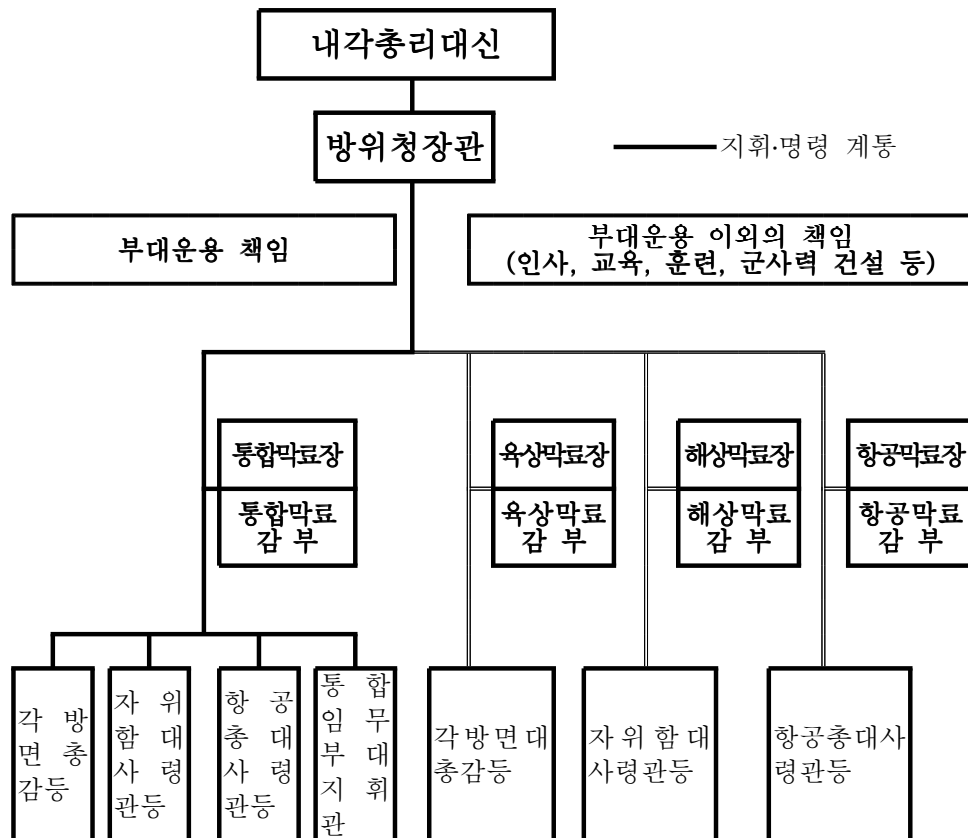
일본 자위대의 부대운용체제는 종래에는 기본적으로 육·해·공 각자위대별로 운용하는 것으로서 각막료장이 각자위대의 운용에 관하여 제각각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체제이다. 각자위대에 대한 장관의 지휘와 명령은 해당 막료장을 통하여 실시하고 집행하는 것이었다. 금년 봄에 변경한 통합운용체제는 <그림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통막장이 자위대 운용에 관하여 일원적으로 장관을 보좌하는 체제다. 즉 자위대에 대한 장관의 지휘는 통막장을 통하여 실시되고, 자위대에 대한 장관의 명령은 통막장이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를 위하여 종래의 통합막료회의는 통합막료감부로 명칭이 바뀌었고 지휘관의 호칭도 의장(Chairman)에서 막료장(Chief of Staff)으로 변경되었다.

한편 육·해·공 3자위대의 막료장은 각자위대 부대의 운용에 관한 사항 즉 작전권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만 종래와 같이 장관의 지휘를 받아 장관의 명령을 집행한다. 즉 각자위대 막료장은 작전을 제외한 인사, 교육, 훈련(통합부대의 통합훈련은 통막이 담당), 보급, 군사력 건설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통막에 대하여 작전에 필요한 부대의 제공과 작전간의 후방보급 지원 등으로 통막을 밀접하게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작전운용의 통합은 운용의 효율성 등 군사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작전까지도 문민우위 원칙에 의거 제복조들의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작전에 관한 사항은 제복조가 직접 장관의 조언자로서, 명령 집행자로서 입지가 강화됨에 따라 군의 정치적 입지가 보다 향상되었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 군사조직의 지휘체계는 문민 우위의 체제로서 통수권은 총리에게 있고, 군정권은 장관 - 각자위대 막료장 - 3군자위대 부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군령권은 장관 - 통합막료장 - 3군 각자위대 부대장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림 4-2> 통합막료장과 육해공막료장의 관계



이러한 지휘체계의 조정으로 작전과 작전 이외의 사항으로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종래의 군령과 군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장관의 지휘부담을 경감시켰다. 그리고 전투력의 해외로의 긴급전개, 적국의 미사일 기지 공격 등의 상황발생시 신속한 작전태세를 확립하게 되었고 육·해·공 부대의 작전운용에 대하여 통합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게 되었다. 또한 방위청 내국이 방위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주도하고 있어 군사력건설 및

군 운용에 있어 아직은 자위대 및 제복조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그러나 최근의 경향을 보면 자위대의 활동영역과 역할이 세계화 되면서 제복조들의 입지가 향상되고 있어 문민우위의 원칙은 머지않아 형해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4) 陸・海・空 自衛隊의 編成

편성면에서 육상자위대는 최상위 작전제대인 방면대로부터 사단, 연대, 대대, 중대, 소대, 분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면대는 모두 5개(북부, 동북부, 동부, 중부, 서부)가 있으며, 방면대 바로 하부 제대가 사단, 여단, 혼성단 인데 사단 10개, 여단 3개, 혼성단 2개 등 15개부대로서 모두 지역방위책임 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육상방위의 핵심 부대이다.

각 방면대는 방면총감부와 2-4개의 사·여단, 포병단 1개, 고사포병군 1개, 시설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사단은 통상 3-4개 보병연대, 포병연대1, 전차대대1, 시설대대, 통신대대 등으로 편성된 작전기본부대로서 약 7,000명 내외로 편성되어 있다. 여단은 기본적으로 사단과 유사한 편성이나 보병연대 중 1개연대가 즉응예비자위관으로 편성되어 있고, 포병과 전차는 대대로 편성되며, 병력규모도 약 4,000명 내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혼성단은 기본적으로 보병연대의 편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포병과 공병 등의 전투지원부대 규모가 보병연대보다 증강됨으로서 결국은 증강된 보병연대 규모의 부대이다.

이러한 부대들은 지상군 재편성 계획에 의거 사단이 여단으로 바뀌고 있으며 오키나와와 시코쿠에 각각 배치된 제1.2혼성단은 여단으로 승격될 계획이다. 재편성이 완료되면 9개사단, 6개여단 체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지역방위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상자위대는 원해에서 기동작전을 수행하는 자위함대와 연근해의 방호작전을 수행하는 지방대로 크게 구분되며 이외에 교육항공집단, 훈련함대, 기타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자위함대는 사령부와 호위함대1, 항공집단1, 잠수함대1, 소해대2, 기타부대로 편성되어 있다. 지방대는 모두 5개(요코스카, 구레, 사세보, 마이즈루, 오오미나토)로서 각각 지방 총감부, 호위대, 소해대, 어뢰정대, 기지대, 항공대, 통신대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원해작전

의 주력인 호위함대에는 일명 88함대라고 불리어지고 있는 호위대군이 4개 편성되어 있는데 각 호위대군에는 꿈의 구축함이라는 이지스함 1척을 포함하여 8척의 호위함과 8대의 작전헬기로 편성되어 있다.

항공자위대는 항공총대, 항공지원집단, 항공교육집단, 항공개발실험집단, 기타부대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총대는 방공의 임무를 맡고 있는 전투부대로서 항공총대사령부와 항공방면대 3(북부, 중부, 서부), 남서항공혼성단 1, 기타부대로 편성되며, 항공지원집단은 항공지원집단사령부와 항공구난단 1, 수송항공대 3, 항공보안관제군1, 항공기상관제군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나. 兵力 規模 및 構造

일본 자위대의 총병력은 2006년 3월31일 현재 정원 25만 1,582명에 현재원 24만 812명으로 정원 충족률 95.7%에 해당한다.

<표 4-3>일본 자위관 정원 및 현재원 (2006.3.31현재, () : '00.3월)

구분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통합막료감부등	합계
정원	156,122	45,806	47,332	2,322	251,581
현재원	148,302	44,528	45,913	2,069	240,812
비율	61.5 (62.7)	18.5 (18.0)	19.1 (18.7)	0.9 (0.6)	100
충족율 (%)	95.0 (86.7)	97.2 (93.2)	97.0 (93.6)	89.1 (94.3)	95.7 (89.1)

출처 : 일방위청, 『일본의 방위』 “자료55”, (동경: 방위청, 2006)

이와 같은 정원 충족률이 '00년(89.1%)에 비하여 높아진 것은 <표 4-3>과 같이 육상자위대(86.7% → 95.0%)와 <표4-4>에서와 같이 병의 충족율(65.5% → 91.3%)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¹⁰¹⁾

이러한 현상은 2000.3월과 2006.3월 기준으로 볼 때 初募兵 自衛官의 채용을 획기적으로 증가(3,969명→11,004명: +177.2%)시킨데 기인한 것으로

101)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0), p. 368.

보인다. 그리고 兵지원자가 1999년도에 평균 5.4 : 1에서 3.4 : 1로 낮아진 것은 지원자 수의 증가(21,350명→31,680명: +48.3%)보다 채용인원의 증가(3,969명→11,004명: +177.2%)가 많음으로서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쟁률 저하는 初募兵 自衛官의 자질저하로 연결되어 기술집약형의 작지만 강한군대로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어 주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자위대가 우수한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표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부중심의 군대라는 점이다.

<표 4-4> 자위관 신분별 인원현황

(2006.3.31현재)

구분		비임기제 자위관				임기제자위관
		장교	준위	하사관	병	병
정원		44,533	5,215	138,649	63,185	
현재원	인원	41,311	4,945	136,873	18,533	39,150
	비율 (‘00.3)	17.2 (18.1)	2.1 (2.2)	56.8 (58.0)	23.9 (21.7)	
충족율 (‘00.3)		92.8 (98.2)	94.8 (96.8)	98.7 (98.4)	91.3 (65.5)	

출처: 일방위청, 『일본의 방위』 “자료56”,(동경: 방위청,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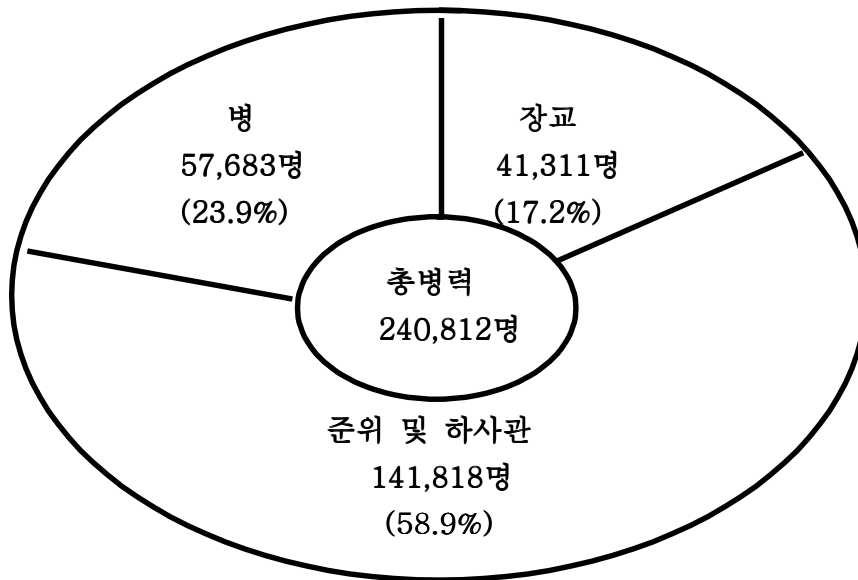
일본은 지원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로서 신분별 구성은 <그림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이 장교와 준사관 및 하사관으로 구성된 간부이며 병은 23.9%에 불과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장교가 17.2%, 준위 및 하사관이 58.9%로 총 병력 대비 부사관 이상의 간부(183,129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76.1%로서 세계에서 가장 간부비율이 높은 병력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¹⁰²⁾ 한편 병의 정원 대비 충족율이 91.3%로서 신분별 충족율이

102) 일본은 우리의 장교에 해당하는 말을 ‘간부’라 함. 본문에서 말한 ‘간부’라 함은 한국의 표현으로 부사관 이상의 직급자를 의미함.

가장 낮고 총 병력중 점유비율도 23.9%로 저조하며, 기술병인 해·공군보다 주로 육군병사가 부족하다.¹⁰³⁾ 이는 유사시 부족한원 및 확장할 부대의 소요병력을 긴급소집하더라도 단기간내에 부대기능 발휘가 용이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 그림4-3 > 일본군 신분별 구성 비율 (2006.3.31기준)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군의 幹部 對 兵의 比率(약 23.3%)과 일본군의 병의 비율이 비슷한 점을 고려하여 일본군의 병력규모를 재구성할시 일본군은 유사시 수주내에 70만명 이상의 정예강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병력구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일부에서처럼 일본의 군사력을 병력 수만 보고 폄하하여 평가하는 틀을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103)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자료55에서 발췌.

다. 自衛隊의 主要 武器体系

일본 자위대는 육·해·공군의 균형적인 전력증강을 취하면서, 지상군은 경량화, 고기동화에 역점을 두고 있고, 해·공군은 대형화, 첨단화를 통한 해외투사력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무기체계의 증강추이는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위주의 전력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자위대의 국제공헌강화를 명분으로 해상전력의 대형화, 첨단화와 항공전력의 체공능력 향상, 대형화가 급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각 자위대별 현보유 무기체계는 다음과 같다.

(1) 陸上自衛隊

육상자위대 병력은 148,302명으로 정원의 95%가 보충되어 있으며 이는 육·해·공 자위대 총병력의 61.5%로 일본군도 육군위주의 병력분포를 갖고 있으나 한국 육군의 80.8% 보다는 상대적으로 육군의 규모가 적다고 할 수 있겠다.

육상자위대의 주요 전투장비는 <표4-5>와 같이 이른바 ‘보통국가’의 군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무기 및 장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즉, 기동장비로서 전차, 장갑차등이 있고, 화력장비는 야포, 다련장포, 대공포 등이 있으며, 대지, 대공, 대전차 등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AH-1S, UH-1H, CH-47 등 공중공격 및 공중기동장비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¹⁰⁴⁾

이중 지상군 무기의 대표격인 전차를 보면 무기체계의 현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상자위대의 전차의 경우는 1995년에 61식, 74식, 그리고 최신형인 90식 전차가 각각 140대, 873대, 116대로 양적인 면에서 74식이 주력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61식 전차는 육상자위대의 전력으로서는 중지부를 찍고¹⁰⁵⁾, 대신 74식 전차가 주력을 이루는 가운데, 90식 전차가 전체 전차의 약 20%인 206대로 증가하여 주요부대의 주력을 이루게 된다. 이 90식 전차는 승무원이 3명으로 120미

104)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자료17 및 19에서 발췌.

105) 朝雲新聞社, 『自衛隊裝備年鑑』, 2002-2003, (東京: 朝雲新聞社, 2002), p.58.

리 전차포와 원거리 레이저 관측기, 적외선 투시기를 장착한 세계 최고수준의 전차이다. 그리고 '04- '09 기간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하 '신중기방'이라 약칭)에 의거,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는 74식 전차 대체용으로 C4I 기능이 추가되고 소형의 경량화된 신형전차를 자체 개발하여 기간중에 49대를 배치할 예정이다.¹⁰⁶⁾

<표4-5> 일본 육상자위대의 주요장비 보유수 (2006.3.31 현재)

구분	종류/용도	수량	비고
기동장비	전차	950	90식전차, 74식전차
	장갑차	950	
화력장비	야포	720	155밀리자주포, 205밀리 자주포
	박격포	2,000	
	고사포	110	
항공기	전투	86	AH-1S(84), AH-60D(2)
	연락/정찰	162	OH-6D(140), OH-1(22)
	다용도	184	UH-1H/J(158), UH-60J(26)
	수송	53	CH-47J/JA(53)

출처: 일방위청, 『일본의 방위』 “자료19” 발췌, (동경: 방위청, 2006)

또한 보병부대의 기동력의 향상을 위한 각종의 장갑차가 있는데, 여기에는 정찰경계차, 지휘통신차, 장갑전투차, 장갑차 등이 있으며 중대장급 이상 모든 지휘차에는 GPS 시스템을 장착하여 전장상황을 전자화할 계획이다.

화력에서는 155밀리 자주포로 교체하여 기동성과 장거리 사격능력을 갖추고, 다련장 로켓 시스템을 다량 구비하고 있다.

또한 육상자위대가 고도의 기동력과 타격력을 자랑하는 항공전력으로 <표4-5>와 같이, AH-1S 대전차 헬기, OH-6J/D 연락 및 관측 헬기, UH-1H 및 CH-47J 수송 헬기 등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보유, 즉응성 높은 방위임무는 물론 대테러, 긴급재난 구호 등에 이르기까지 뛰어난 기동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06)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501.

지상군의 방공작전은 해상 및 항공작전과 통합되어 운용되며, 여기에는 OTH 초수평선 레이더, 패트리엇등이 있다. 육상자위대에 편제된 미사일에는 대항공기용, 대함정용, 대상륙주정 및 대전차용 등 매우 다양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대항공기용에는 개량 호크, 스팅거 휴대용 SAM, 단거리 지대공 유도탄 SAM-1과 SAM-1C, 휴대용 지대공 유도탄 SAM-2, 근거리지대공 유도탄 SAM-3 등이 있다. 이중 SAM-1은 미국산 스팅거와 호크의 갭을 보완하기 위해 일본이 자체 개발한 저고도 고성능 항공기 방어용 미사일로서 사정거리는 0.5 - 7Km, 속도는 마하 2.4이다. 그 후 사정거리 연신, 명중률과 ECCM 능력도 향상시킨 개량형 유도탄인 SAM-1C가 1994년 개발되었는데 커다란 특징은 호크와 스팅거의 유도방식이 레이더나 적외선 호밍으로 1개 방식인데 비해 SAM-1C는 화상+적외선 또는 화상+레이더 호밍 방식을 채택한 우수한 미사일이다.

(2) 海上自衛隊

해상자위대 병력은 2006.3.31 기준, 44,528명으로 이는 정원의 97.2%가 충족된 것이며, 자위대원 전체의 18.5%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 해군의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군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해상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무기체계는 주력 전투함인 DD, DDH, DDG 등의 호위함을 비롯하여 잠수함, 소해함정, 수송함정, 미사일함정 등 다양한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 전력으로는 P-3C 대잠초계기를 비롯하여 대잠헬기, 구난헬기 등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을 제외 하면 미국과 유사한 무기체계로 무장되어 있다.¹⁰⁷⁾

<표4-6>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6년 3월 말 기준 호위함을 포함한 각종 함정의 수는 150척에 톤수로는 42만8천톤으로, 이는 톤수 기준으로 미, 러, 중, 영국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함정수는 150

107) 朝雲新聞社, 『自衛隊裝備年鑑』, 2002-2003, (東京: 朝雲新聞社, 2002), PP. 298-299.

척으로 세계 11위인데 비해 톤수(428,000톤)로는 세계 5위라는 점을 볼 때, 일본의 함정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대형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상함중 전투함인 호위함은 <표4-7>과 같이 53척에, 총톤수는 205,000톤으로 1척당 평균 3,868 톤으로 한국의 1,500톤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대형 함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호위함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꿈의 구축함이라 불리우는 ‘이지스급 호위함’(이하 ‘이지스함’)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7,250톤급)을 4척이나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에 이어 세계 2번째로 보유한 것이다. 이지스함은 적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수상전투단의 방공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서 154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고, 동시 목표 처리 능력도 12개나 된다고 한다.

<표 4-6> 주요 국가의 보유함정 현황

(단위: 척, 만톤)

국 가	함정수(순위)	톤수(순위)	국 가	함정수(순위)	톤수(순위)
미 국	1,120(1)	571.1(1)	일 본	150(11)	42.8(5)
러시아	870(2)	211.0(2)	독 일	140(13)	20.0(11)
중 국	780(3)	107.5(3)	이태리	170(10)	18.4(12)
영 국	240(6)	88.0(4)	한 국	180(8)	13.5(16)
프랑스	250(5)	39.3(6)	북 한	640(?)	10.5(?)

출처: 일방위청, 『日本の 防衛』 “資料5” 발췌, (동경: 방위청, 2006)

잠수함은 모두 16척으로 2,200톤 - 2,750톤급이다. 잠수함 역시 대형화 추세에 있으며 技術面에서 潛航能力 향상에 注力하고 있다. 최근에 就役한 2,750톤급 ‘오야시오’함은 수중속력 20Kt로 승무원 70명이 탑승할 수 있다.¹⁰⁸⁾

수송함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13척 중 8척은 모두 2,000톤 이하였으나 PKO 활동 등 해외로 인원과 물자를 수송하는데 보다 원활을 기한다는 명

108) 朝雲新聞社, 『自衛隊裝備年鑑』, 2002-2003, (東京: 朝雲新聞社, 2002), P.253

분하에 8,900톤급(만재배수량 13,000톤) 대형 수송함 “오오스미”함을 1998년 5월에 취역한 이래 현재는 모두 3척을 보유하고 있다. 동 수송함은 길이 178m, 폭 25.8m로 90식 전차 10대와 완전무장 병력 330명을 수송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대형 수송함이며,¹⁰⁹⁾ 유사시 48시간 이내에 經航母로의 개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초계함정은 3척에서 9척으로 비교적 많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북한의 공작선 침투 등에 대비하여 연안작전 능력을 보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4-7> 일본 해상자위대 주요함정 현황

(2006.3.31 현재)

구 분	수 량(척)		기준배수량(천톤)	
	‘00.3	‘06.3	‘00.3	‘06.3
호 위 함	55	53	192	205
잠 수 함	16	16	39	42
기뢰함정	32	31	27	27
초 계 함 정	3	9	-	1
수 송 함 정	9	13	18	29
보 조 함 정	29	29	98	123
계	144	151	374	428

출처: 일방위청, 『日本の 防衛』 “資料20” 발췌,(동경: 방위청,2006)

이와 같이 일본 해양세력의 특징은 함정의 대형화로서 호위함을 포함한 각종함정의 대형화 추세는 <표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3월을 기준으로 6년 사이에 호위함의 경우를 보면 척수는 2척 줄었지만 톤수로는 13,000톤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수송함정의 경우에도 6년 전인 2000년 3월 1척당 평균 기준배수량은 2,000톤이었던 것이 2006년 3월에는 1척당 평균 기준배수량이 2,230톤으로 대형화하였다. 보조함정의 경우는 1척당 평균 3,379톤에서 4,241톤으로 급속하게 대형화 하였다. 함정의 대형화 의미는 나름대로의 흥미로운

109) 인터넷,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어:おおすみ型輸送艦의 개요에서 발췌

분석들이 있겠지만 원양작전, 대양해군을 지향한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여겨진다. 즉 군사력의 해외투사능력을 확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해상자위대의 航空戰力으로는 <표 4-8>에서 보는바와 같이 對潛哨戒機인 P-3C와 對潛 및 海上 哨戒를 담당하는 SH-60J, SH-60K와 같은 헬기 등 203대의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P-3C는 總 96대로서 항속거리 8,950Km, 행동반경 3,835Km, 최대속도 732Km/H, 상승한도는 8,780m이며, 무장은 기뢰, 어뢰 등을 포함하여 9.1톤을 탑재할 수 있고, 최대 滯空時間도 2개 엔진으로 17시간, 4개 엔진으로 12시간 연속운항이 가능하다.

<표 4-8> 해상자위대 항공기 현황

(2006.3.31 현재)

형식	기종	용도	보유수	형식	기종	용도	보유수
고정익	P-3C	초 계	96	회전익	SH-60K	초 계	8
					SH-60J	초 계	89
					MH-53E	소 해 수 송	10

출처: 일방위청, 『日本の 防衛』“資料19” 발췌,(동경: 방위청,2006)

이상과 같은 海上自衛隊 戰力으로 볼 때 현재도 專守防衛 能力을 넘어선 遠洋 作戰能力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앞으로 더욱 대형화, 첨단화 추세가 가속화 되어감을 볼 때 머지않아 大洋海軍으로의 발전이 예상되는바, 專守防衛를 넘는 海外投射能力에 대해서는 다음 節에서 상세히 분석하기로 하겠다.

(3) 航空自衛隊

항공자위대 병력은 45,913명(2006.3.31 기준)으로 이는 정원의 97.0%가 보충되어 있는 것이며 자위대원 전체의 19.1%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국 공군의 9.4%에 비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공군의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항공자위대의 주요 장비로는 <표 4-9>와 같이 F-15기를 주력기로 하는 전투기와 AWACS와 같은 조기경보기, C-130H와 같은 수송기, 그리고 CH-47J 헬기등 작전용 항공기를 총 472대를 보유하고 있다.

<표 4-9> 항공자위대의 항공기 현황

(2006.3.31현재)

형식	기종	용도	보유수 (대)	최대속도 (노트)	승무원	전장	전폭	비고
고정익	F-15J/DJ	전투	203	2.5마하	1/2	19	13	
	F-4EJ	전투	91	2.2마하	2	19	12	
	F-1	전투	7	1.6마하	1	18	8	도태중
	F-2A/B	전투	68	2.0마하	1/2	16	11	
	RF-4E/EJ	정찰	27	2.2마하/ 1.8마하	2	19	12	
	C-1	수송	26	440	5(60)	29	31	
	C-130H	수송	16	340	5(92)	30	40	
	E-2C	조기경보	13	330	5	18	25	
	E-767	조기경보 관제	4	0.8마하	20	49	48	
회전익	CH-47J	수송	17	150	3(55)	16	4	

출처: 일방위청, 『日本の防衛』“資料20” 발췌,(동경: 방위청,2006)

전투기는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F-15J가 203대, F-4EJ/개량형이 91대이며 일본이 자체개발한 F-1후속기로서 2000년도부터 작전배치한 F-2가 68대등 4개 기종 합계 369대를 보유하고 있다.¹¹⁰⁾ F-15J는 미국이 주력기로 사용하는 전투기로서 일본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을 확보하고 있으며 작전반경 500km, 항속거리가 4,600km로서 MIG-29의 2,100km에 비해 2배 이상 길다. 전투행동 반경도 1,270km로서 MIG-29의 645km에 비해 약 2배정도 길며, 또한 실용상승고도에 있어서도 20,400m로 MIG-29 18,000m보다 약간 높아 러시아 및 중국 등 주변국의 주력기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진 전투기이다.

특히 일본이 1988년부터 미일 공동 개발하여 2000년부터 작전배치하기 시작한 F-2는 F-15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용도도 요격과 대지, 대함 공격

110) 일 방위청 홈페이지 (<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자료19에서 발췌.

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이다. 그리고 공중급유가 가능토록 空中給油口를 장착하여 향후 공중급유기 도입시 동북아 전 지역을 작전권역으로 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항공기이다. F-2는 '06년 3월 현재 68대로 향후 F-1전투기와 T-2 고등훈련기 등을 모두 대체하여 2011년도까지 총 100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 경보 및 관제기로는 E-2C 13대, E-767AWACS 4대를 보유하고 있다. 2000년 3월부터 작전 운용중에 있는 E-767AWACS는 작전반경이 1,850km로서 기존의 E-2C에 비해 350km정도 넓고 항속거리 9,260Km, 최대속도 830km/h이며 재급유 없이 12시간 항속이 가능하여 기존의 E-2C에 비해 2배 이상의 작전성능을 구비하였다. 이와 같은 최신에 E-767AWACS와 E-2C로 일본은 저공침투의 조기발견 및 대처의 신속화, 전투기에 의한 공중초계의 생략, 육.해군 부대와의 작전연계의 용이화, 수색구난 지휘의 신속원활화, 육상레이더 사이트 기능의 대체, 통신중계 등 항공작전능력을 세계최고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해상에서의 대형수송함 건조와 함께 공중에서의 장거리 대량수송능력 확보계획도 착실히 추진중에 있다. 현재 수송기로는 C-1 26대, C-130H 16대, 그리고 CH-47J 수송헬기 17대로 구성되어 있다. 장거리 수송은 C-130H가 주로 운용되는데 C-130H는 항속거리 4,000Km, 최대적재량 19톤이다. 그러나 일본방위청은 이 정도의 성능으로는 1992년 캄보디아 PKO 공수 지원시에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경유하여 가야만 하는 등 항속력과 탑재력에 문제가 있다는 명분하에 C-1후속기 C-X기를 개발중에 있다. C-X기는 최대적재량 37톤으로 항속거리 6,500km, 12톤으로 8,900km 항속이 가능한 대형수송기로서 2008년부터 작전배치할 계획에 있다.¹¹¹⁾ 한편 전수방위의 부적합한 장비라고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오던 공중급유기도 2014년까지는 4대를 구입하기로 확정하였다.

또한 항공자위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방공무기로는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와 단 SAM등이 있다. 패트리어트는 미국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일본이 자체적으로 성능을 개발하여 생산, 배치하고 있으며 전국에 약

111) 인터넷 검색,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어: C-X輸送機에서 발췌

26개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패트리엇은 대항공기는 물론 대 미사일용 미사일로서 패트리엇을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일본 2개국 뿐이다.

이상과 같이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전력은 F-2 신형 전투기와 C-1후속기인 C-X 대형수송기, E-767 AWACS기, KC-767 공중급유기로 이어져 21세기에는 명실공히 세계최고 수준의 항공전력을 확보하는 나라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자위대의 역할이 국제화로 확대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항공세력의 발전방향은 대형화, 원거리화, 체공시간 강화로 집약되는 바 해양세력과 함께 군사력의 해외투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3. 향후 군사력 증강계획

가. 신 방위계획대강의 전력증강 목표

일본 정부는 2004년 12월 10일 각의결정을 통하여 새로운 방위계획대강(이하 ‘04방위계획대강’이라 함)을 채택하였다. 방위계획대강은 군사력 건설을 위한 중장기 기획문서의 성격으로 군사력 건설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는 문서이다. 이 문서는 1976년 최초로 각의 결정으로 채택하여 냉전기의 일본 군사력 건설의 근거로 삼아오다 냉전이 종식된 후 1995년 11월에 개정했었다.¹¹²⁾ 일본이 군사력 건설의 헌법처럼 여겨왔던 이 문서를 1차 개정 이후 10년도 안되어 재개정을 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9.11테러 이후 국제테러조직 및 비국가주체가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했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확산, 국제테러조직 활동 등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며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재개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또 직접적인 이유로 “「탄도미사일방위시스템 정비에 대해」(‘03.12.19)의 각의결정에 따라 종래의 방위력 정비구상 및 장비체계의 근본

112)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p.120-121.

적인 수정과 적절한 규모로의 축소가 불가피 하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군사력의 역할 다양화에 따른 적극적 활용 및 해상교통로의 안전확보가 불가피하는 등 방위력 건설관련 전반적 수정이 필요해 짐으로서 이를 위한 새로운 지침이 필요”하여 재개정하게 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다.¹¹³⁾ 이렇게 ‘국제안보환경의 변화’를 거론하고 있지만 실제적 이유는 각의 결정문에서 언급했듯이 일본이 미국과 TMD 공동연구에 이어 공동개발 및 배치를 염두에 둠으로서 여기에 투입할 예산 문제가 결정적인 이유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에 매년 1,000억엔 이상의 예산을 10년 이상 투입해야 하는데 현재의 방위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하게 종래의 재래식 전력의 축소를 단행해야 하기 때문에 군사력 건설의 기초문서인 방위계획대강을 서둘러 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축소하더라도 미국과 TMD 체제를 공유하겠다는 국가안보전략에 기초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04방위계획대강의 특징 중 하나는 최초로 계획의 적용기간이 10년으로 명시되었다는 점이다. 중·장기 기획문서는 통상 그 적용기간을 명시하지 않는데 이렇게 기간을 명시한 것은 상기의 TMD 계획의 적용기간이 대략 10년 정도이기 때문에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으로 보인다. 즉 ‘04방위계획대강은 한시적인 군사력건설 기획문서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다.

‘04방위계획대강의 군사력 건설의 중점은 통합작전능력 강화를 위하여 통합막료회의를 통합막료감부로 개편하며, 정보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보본부를 비롯한 각자위대의 정보부문의 체제를 정비하여 장관직속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운용 진전에 따른 확실한 지휘명령, 신속한 정보공유 및 운용의 효율화 도모와 사이버공격 대처를 위한 고도의 지휘통신시스템 및 정보통신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과학기술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또한 자위대 임무의 다양화·국제화, 장비의 고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양성을 도모하고, 안전보장문제 관련 연구·교육 추진으로 인적기반을 강화하는 등 인적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들

113) 防衛廳, 『日本の 防衛』, (東京: 防衛廳, 2006), “資料11, 平成17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에서 발췌

고 있다

‘04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한 군사력 건설의 주요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육상자위대는 대기갑전 중시구상에서 기동력 향상을 통한 즉응태세 유지 및 전차, 화포 등 일부장비를 축소한다는 방침하에 편성병력 총 규모는 16만명에서 15만 5천명으로 축소 조정한다. 총 규모 축소에 대신하여 즉응 예비자위관을 1만5천명에서 7천명으로 조정함으로서 현역병력규모는 14만 5천명에서 14만 8천명으로 오히려 3천명 증가하는 실익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편성면에서는 종래부터 시행해 오던 9개사단 6개여단 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기동운용부대로 사용하던 공정단과 헬기단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즉응집단을 창설하여 국제활동이나 국내긴급사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하였다.¹¹⁴⁾ 장비면에서는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차와 야포를 각각 900대/문에서 각각 600대/문씩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육상자위대는 병력과 편성분야에서는 구대강과 큰 차이가 없으나 장비면에서 목표연도인 2015년경에는 현재의 60% 수준으로 대폭 감축이 예상되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해상자위대는 편성면에서 기동함대인 호위함대의 경우 기존의 4개 호위함대군을 중심으로 호위함 8척 체제로 운용되던 것을 4개 호위함대군 예하에 호위대를 8개로 재편성하여 각 호위대에 4척씩 배치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지방대 예하의 호위함 부대는 총 7개대에서 5개대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또한 잠수함대는 척수 감축 없이 6개대에서 4개대로 조정하고, 초계기부대도 항공기 감축으로 13개대에서 9개대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장비면에서는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위함은 50척에서 47척으로 감축하며 잠수함은 16척 체제를 유지하고 P-3C 등 작전용 항공기는 170대에서 150대로 축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해상자위대는 원해에서의 기동작전부대인 호위함대와 잠수함대는 현상을 유지한 채 운용체제를 약간 조정하는 선에 그친 반면 연근해 작전부대인 지방대와 초계기 부대는 약간의 감축을 하였다. 그러나 함정의 척수와 항공기의 대수는 감소하지만 함정의 총배수톤

114)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143.

수는 증가하며¹¹⁵⁾ 항공기는 항속거리와 탑재능력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함정과 항공기의 대형화, 장거리화 하고 있어 양적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이 해군세력은 질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된다.

항공자위대는 대공침범 중시구상에서 탄도미사일 대응체제 위주로 정비중점을 전환하였다. 우선 편성면에서는 육자대나 해자대와 달리 조직 축소 없이 AWACS를 운용하는 경계항공대의 1개 항공대와 장차도입하기로 한 공중급유기를 운용할 1개 비행대를 증설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장비면에서는 <표4-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전용 항공기 400대 체제에서 50대를 감축한 350대 체제를 유지하되 이중 전투기는 300대에서 40대가 감축된 260대를 운용하기로 하였다. 항자대의 경우도 작전기의 대수는 감소하지만 노후기종의 신예기화¹¹⁶⁾와 체공능력의 향상 등을 통하여 양적 감축에도 불구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위를 위하여 해자대의 이지스함 4척과 항자대의 항공경계관제부대 7개경계군과 4개경계대, 그리고 지대공유도탄부대 이하 3개 고사군에 각각 대탄도미사일 방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04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한 향후 10년 동안의 군사력 건설 방향과 목표는 방위비 규모의 현상유지를 전제로 TMD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다만 TMD 시스템 도입으로 발생하는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재래전력 일부를 감축하되 감축이 가져오는 군사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전의 통합화와 정보능력 향상등 비무기체계의 개선을 도모하였다. 동시에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대형화, 그리고 장거리화 등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군사력 건설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외견상으로는 줄이면서 내용상으로는 강화시키는 2중적인 국방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115) 동 계획의 1차5개년 계획인 04-09중기방에 의하면 함정 20척 건조에 59,000톤으로 척당 평균 2,950톤인데 이는 00.3 척당 2,597톤, 06.3 척당 2,834톤에 비해 대형화 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임.(자료4-12참조)

116) 기간중 F-1은 모두 도태시키고 F-2로 대체하며, F-4기종의 개선을 통하여 새로운 후계기를 기간중 도입하기로 하였음.

<표 4-10> 일 신구 방위계획대강의 정비규모 비교

자위대	내 용		구대강('95)	신대강('04)
육자대	편성정수		16만명	15만5천명*
	상비자위관정수		14만5천명	14만8천명
	즉응예비자위관원수		1만5천명	7천명
	기간부대	평시 지역배비부대	사단8, 여단6	사단8, 여단6
		기동운용부대	기갑사단1 특과단1, 공정단1, 교도단1, 헬기단1	기갑사단1 중앙즉응집단
		지대공유도탄부대	고사특과군8	고사특과군8
	주요장비	전차	약 900대	약 600대
		주요특과장비	약 900문/대	약 600문/대
해자대	기간부대	호위함부대(기동운영)	호위대군4	호위대군4(8개대)
		호위함부대(지역배비)	7개대	5개대
		잠수함부대	6개대	4개대
		소해부대	1개소해대군	1개 소해대군
		초계기부대	13개대	9개대
	주요장비	호위함/잠수함	50척/16척	47척/16척
		작전용항공기	약170기	약 150기
공자대	기간부대	항공경계관제부대	경계군8, 경계대20 경계항공대1	경계군8, 경계대20 경계항공대1(비행대2)
		전투기/정찰부대	비행대12/1	비행대12/1
		항공공수부대	비행대 3	비행대 3
		공중급유·수송부대		비행대 1
		지대공유도탄부대	고사군 6	고사군 6
	주요장비	작전용항공기	약 400기	약 350기
		전투기	약 300기	약 260기
탄도미사일방위	이지스체계탐재호위함			4척
	항공경계관제부대			경계군7/경계대4
	지대공유도탄부대			고사군3

* '탄도미사일 방위'에 포함된 함정과 부대는 해자대 장비, 항자대 기간부대의 내수임

나. 신중기 방위력정비계획('05-'09)의 주요 전력증강 내용

일본 防衛廳은 '04년 12월 10일 육상자위대를 기동화하고, 각종 수상함을 대형화 하며, 항공기의 체공능력과 공중 장거리 수송능력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中期 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 이하 新中期防)을 내각결정으로 확정하였다.

新中期防에서 방위력 건설의 대전제로 제시한 기본방침은 '04방위계획대강에서 제시한 '본격적 침략사태 대비를 위한 기반확보'와 더불어 '다기능적이고 탄력적이며 실효성이 있는 방위력정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국제정세가 국가간의 대규모적인 국제분쟁 가능성이 희박해진 상황이므로 이와 같은 '본격적인 침략사태'에 대비한 방위력은 꼭 필요한 정도로 제한하고, 대신에 테러나 종교나, 종족분쟁 등 저장도 국제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즉응성, 기동성, 유연성 및 다목적성을 고루 갖춘 방위력을 구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방위청 내국을 포함한 통막과 3자위대의 조직개편, 새로운 위협이나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무기 도입, 그리고 미일안보체제의 공고화 및 소요예산 증가 억제 등을 방침으로 내걸었다.

이러한 방침에 입각한 각 부문별 구체적 방위력 정비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직개편은 방위청 내국은 국제정세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임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조직을 재검토하여 조치하며, 통합막료회의는 육.해.공군 3자위대의 통합작전이 가능하도록 통합막료감부로 개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통합막료회의 예하 조직이었던 정보본부는 방위청 장관 직할 기관으로 위상을 격상하기로 하였다.

육상자위대는 전차와 야포의 수량을 감축하는 대신 즉응력과 기동력을 향상시키기로 하였으며, 종래부터 13개 사단과 2개 혼성단으로 편성된 지상배치 부대를 9개 사단, 6개 여단체제로 재편 중에 있는데 아직 재편이 안 된 1개 사단과 2개 혼성단을 기간 중 여단화로 재편성을 완료하기로 하였다.

해상자위대는 전투함대인 4개의 호위대군을(각 호위대군에는 호위함 8척씩 보유) 8개로 개편하되 각 호위대군의 호위함은 4척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잠수함대는 2개의 잠수함대 예하의 잠수대군 6개를 5개로 집약화하기로 하였다. 이러

한 해군의 부대개편 특징은 작전단위부대의 규모를 소형화하여 부대의 수를 늘림으로서 운용의 융통성을 향상시키고 즉응성과 유연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항공자위대는 AWACS를 운용하는 경계항공대를 2개비행대로 증편하며 공중급유기 도입에 대비하여 공중급유부대를 신설한다.

새로운 위협과 다양한 사태에 실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위력정비내용으로는 우선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지스함에 해상용 SM3를 장비하고 지상용으로 PAC-3 시스템을 구축하며, 자동경계관제 시스템을 개량함과 아울러 해상배치형 상층시스템의 미.일 공동기술연구를 계속하고 개발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게릴라 및 특수부대등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장갑차, 다용도 헬기, 전투헬기(AH-64D)를 구비하고 CBS 공격의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도서침략에의 대응을 위해서 수송헬기(CH-47JA/J)와 F-2전투기 그리고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C-1 수송기의 후계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공역경계감시 및 영공침범과 무장공작선 침투에 대응하기 위해서 DDH, DD, 대잠헬기, 소해헬기 등을 도입하고 E-767과 E-2C의 성능 개선과 P-3 후속기의 도입을 추진하며 주력전투기인 F-15의 성능향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기간중 구체적인 방위력 정비 규모는 <표 4-11 >과 같다.

그리고 일본 방위의 핵심중의 하나인 미.일 안보체제의 공고화를 위하여는 국제정세에 관한 정보교환과 안보관련 정책 협의를 강화하고 작전의 협력과 공동연습 및 훈련을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TMD에 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장비와 기술의 교류를 충실히 하기로 하였으며 주일미군의 주둔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아가 지구적 안보문제에 관하여 미일간의 연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신중기방 기간 중 5년 동안 투입하기로 한 방위비 규모는 총 24조 2,400억 엔으로 연평균 4조 8,480억 엔이다. 이는 01~05년에 투입된 연평균 방위비가 4조 9,022억 엔인 점을 고려할 때 연평균 방위비는 약간 밑도는 규모이다. 그러나 여기에 PKO 활동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가로 1,000억 엔까지 추가할 수 있어 총 규모면에서 투입예산은 과거와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표4-11> 신중기방(05-09) 기간중 방위력정비 규모

구 분	종 류	정비규모
육 상 자위대	전 차	49대
	대포(박격포 제외)	38문
	장갑차	104대
	전투 헬리콥터(AH-64D)	7기
	수송 헬리콥터(CH-47JA)	11기
	중거리지 대공 유도탄	8개중대
해 상 자위대	이지스함 능력 향상	3척
	호위함	5척
	잠수함	4척
	그 외	11척
	자위함 건조계(톤수)	20척(5.9만톤)
	신고정익 초계기(P-3C후계기)	4기
	초계 헬리콥터(SH-60K)	23기
	소해·수송 헬리콥터(MCH-101)	3기
항 공 자위대	패트리엇 미사일 능력 향상	2개군
	전투기(F-15) 근대화 개량	26기
	전투기(F-2)	22기
	신전투기(F-4 후계기)	7기
	신수송기(C-1 후계기)	8기
	수송 헬리콥터(CH-47J)	4기
	공중 급유·수송기(KC-767)	1기

출처 : 일방위청, 『日本の 防衛』“資料12” 발췌,(동경: 방위청,2006)

제 3 절 일본의 군사력 해외투사능력(海外投射能力)

1. 독자적인 전략적 감시능력

일본은 냉전 종식과 더불어 구 소련이 소멸되고 러시아의 군사력과 군사태세가 현격히 저하되었으므로 대규모의 직접침략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¹¹⁷⁾. 그러나 1998년 8월 31일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은 직접적인 침략위협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였다. 특히 03년 1월 10일 북한이 NPT 탈퇴를 선언하고 핵개발을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안보위협이 현실화 하였다. 핵탄두를 장착한 장거리 미사일이 일본을 겨냥한다면 일본은 궤멸적 피해를 입을 것이므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적국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법 해석을 내어 놓기까지 하였다¹¹⁸⁾.

이를 위해서는 첫째 표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요구되며 둘째 원거리 목표에 대한 타격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하에 독자적인 전략표적에 대한 감시를 위해 군사 정찰위성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본부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으며, 타격 수단으로 공중급유가 가능한 전폭기와 공중급유기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해외로의 전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략정보 수집, 분석능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분석능력 즉 인적요소 등 소프트웨어는 이미 1998년에 정보본부를 창설하여 충분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수집자산 즉 하드웨어에 해당되는 정찰위성은 2002년에 일본의 독자적 기술에 의한 로켓으로 정찰위성 2기를 발사한 이래 2006년에도 추가로 1기의 정찰위성을 발사하여 현재 총 3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2007년 초에 추가로 1기를 발사하여 총 4기로 일본 주변국의 군사활동을 전천후로 정밀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할 계획이다.

117)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 국방정보본부, 2005), p.3.

118)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6年版, (東京 : 朝雲新聞社, 2004), p. 106

가. 軍事偵察衛星

일본이 운용하고 있는 군사정찰위성은 현재 3기로서 2기는 광학 정찰위성으로 해상도 1m 이내의 고해상도 위성이다. 나머지 1기는 열상 정찰위성으로서 해상도 1~3m의 전천후 정찰위성이다. 이에 추가하여 성능향상과 기존위성의 감시시간 연장을 위하여 2007년 초에 열상위성 1기를 추가 발사하여 총 4기를 운용할 계획이다.¹¹⁹⁾

<표 4-12> 일본의 군사정찰위성 주요제원 및 성능

- 위성종류 : 광학위성 2기, 전천후 레이더 위성 1기
- 해상도 : 1m (레이더; 1~ 3m)
- 운용고도 : 지상 500Km 저고도
- 운용시기 : 2002년도
- 소요예산 : 총 2,569 억엔 (약 24.5 억불)
 - 개발비(발사, 지상관제 및 수신 설비) : 1,965억엔
 - 설계비 : 17 억엔('98년 예산)
 - 조사연구비 : 113 억엔('99년)
 - 위성정보센터 설립 및 관련요원 교육 : 630억엔('00년)
- 발사실적
 - 1차 발사(광학, 레이더 각 1기) : 2003.3.28
 - 2차 발사(상 동) : 2003.11.29 (실패)
 - 3차 발사(광학 1기) : 2006.9.11
 - 4차 발사(레이더 1기) : 2007. 초 예정
- 2세대 위성 발사계획
 - 예비기 2기(광학, 레이더 위성 각1기) : 2009(미확정)
 - 후계기 2기(광학, 레이더 위성 각1기) : 2010(미확정)

1기의 위성이 동일지점을 통과하는 횟수는 하루에 2~3회 이므로 4기를 운용하게 되면 매일 동일지점을 10회 통과하게 되는데 이는 2시간 만 마다 동일 지역 감시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군사정찰위성은 총리부 직속인 위성정보센터의 조정, 통제하에

119) 인터넷 검색,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어: “情報収集衛星”에서 발췌

운용되고 있다. 정찰위성으로부터 영상을 수신하는 지상수신소는 홋카이도, 큐슈, 오키나와 등 세 곳에 설치되어 있고, 이곳으로부터 방위청에 설치된 수신소로 영상을 송신하게 된다. 이 영상은 방위청 청사지역에 위치한 위성정보센터로 보내어져 여기서 1차적으로 이를 판독 및 해석하여 정보를 생산, 상부보고와 소요부서에 전파를 한다.

위성정보센터의 운용요원은 방위청 요원을 비롯하여 정부각 부처에서 파견되는 인원으로 구성되며 전체 인력은 영상해석요원 100여명을 포함 약 320여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는 ‘위성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제한으로 방위청의 조직으로 정찰위성을 직접 운용할 수 없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위성정보센터를 포함하여 방위청 산하 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情報本部 機能 強化

그동안 일본의 군사정보 활동은 육상, 해상, 항공 자위대와 방위청 내국, 통합막료회의 등에 분산돼 있었다. 이를 방위청 統合幕僚會議 내의 정보기구로 통합되어 1998년 1월 20일 정보본부(DIH)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 그 후 2006년 3월 조직과 기능이 보강되어 장관직할 기구로 위상이 강화되면서 명실상부한 국가최고의 군사정보 전문기관으로서 성장하였다.

전문 인력만 1천6백여 명인 이 거대한 군사정보기구는 앞으로 한반도를 비롯하여 중국, 대만, 러시아에 이르는 아태지역의 주요 국가안보전략 및 군사정보를 광범하게 수집 분석한다. 지금까지 일본은 주요 군사정보를 미국에 의존해왔으나 이제 이 지역 군사강국으로서 명실상부한 독자적 정보능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정보본부에는 총무부, 계획부, 분석부, 통합정보부, 화상·지리부, 전파부 등 6개 부서와 지방의 각 통신소가 있는데, 이중 통합정보부는 통합막료감부의 정보관련 부서의 역할을 하는 부서로서 통합막료감부 및 각자위대에 필요한 작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전투 및 전술정보부서이다.¹²⁰⁾ 그

120) 일 정보본부 홈페이지, (<http://www.jda.go.jp/join/dih/>), 검색어; “情報本部の組織”에서 발췌

리고 화상·지리부는 정찰위성으로부터 획득한 위성사진 또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일본주변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 자주적인 군사정책과 전력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 된다.

또 온갖 통신들을 감청 해독하는 전문부서인 전파부에는 지난 1983년 소련의 극동군사령부가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시켰을 당시 소련 전투기와 관제탑간의 교신내용을 잡아내 세계적 명성을 떨쳤던 육상자위대의 「조사부 조사2과 별실」 팀이 투입된 것이다. 또한 분석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반도와 중국, 러시아등 일본의 안보와 직결되는 주변국에 대한 정세를 종합 분석하여 정책자료로 제공된다.

평화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변국가들은 물론 자국의 국민들로부터도 경계의 대상이 되어 정책추진이 어려운 것이다. 이를 피하여 군사력 강화의 내실을 기하는 방법은 정보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능력의 급격한 강화는 멀지 않은 장래에 안보상의 대사건에 직면해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이 군사정찰위성 운용, 정보본부 운용 강화 등은 이 지역의 안보정세의 변화를 예고한 것일 수 있어 주목된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이 제일 먼저 결단을 내린 것은 1942년 6월 종합정보기관인 OSS(전략지원국)를 창설하는 일이었다. 루스벨트는 영국의 대외첩보기관 MI-6에 전문가를 파견, 견학시킨 뒤 영국의 지원을 받아 OSS를 조직했다. 이 정보기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의 전략 수행에 큰 도움이 됐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또 1947년 소련의 공산주의 팽창전략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한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먼저 내린 결정도 CIA(중앙정보국)의 창설이었다. CIA 또한 냉전시대 세계 도처에서 미국이 힘을 행사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맡았던 것이다.

일본의 방위청 정보본부도 미국 정보기관들처럼 일본 군사력의 효율을 훨씬 높여줄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의 정보능력 강화가 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遠洋作戰 및 海上輸送能力

일본의 해상 및 수중전력은 질적 측면에서 미·리에 이어 세계3위의 수준이다. 특히 이지스형 구축함(이하 이지스함)과 소해능력은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70년대부터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¹²¹⁾를 위해 원양작전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왔다. 그 결과 7,250톤급 이지스함이 4척, 그리고 8,900톤급 대형 수송함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장차 경항모로 불리는 13,500톤급(만재톤수 18,000톤급) 호위함 2척과 7,700톤급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따라서 2010년대 초에는 경항모와 이지스함 등으로 구성되는 막강한 원양기동함대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 遠洋作戰能力

일본의 해상전력 운용은 연·근해 작전을 담당하는 지방대와 원양작전을 담당하는 자위함대로 구분되어 있다. 이중 원양작전을 담당하는 자위함대를 88함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1개함대가 이지스함을 포함한 구축함 8척과 이들 구축함에 탑재된 HEL기 8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서 연루된 용어이다. 일본은 이와 같은 88함대가 현재 4개가 있는데 각 함대는 지휘함(DDH) 1척, 미사일 구축함(DDG) 2척, 구축함(DD) 5척 등 총 8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함대를 2009년까지 DDH와 DDG 각 1척과 DD 2척 등 4척으로 재편하여 총 8개 함대를 보유할 예정이다. 현재는 DDG 2척 중 1척이 이지스함인데 2009년까지 2척을 추가 확보하여 총 6척의 이지스함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지스함에는 TMD 체계가 구축되는데 우선 2009년까지 SM-3 를 장착하고 장래에는 미일 공동개발중인 TMD 체계를 장착할 계

121) 이서향, 『일본의 방위태세강화와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외교안보연구원, 2003), p.18,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는 '82.5 방미중인 스즈키 수상이 레이건 대통령과 회담후 내쇼날프레스 클럽에서의 기자회견에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가 일본 방위정책의 일부분이 될 것임을 밝히면서 최초 사용되어진 말임. 그 후 나카소네 수상이 '83.1 미국을 방문시 워싱턴 포스트지와 회견에서 "해양에 관한 한 일본의 방위영역은 수백해리가 더 확대되어야 하며 괌과 타이완 해협을 연결하는 선 범위까지 해상교통로를 방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으로서 일본의 공식적인 방위정책이 되었다.

획이다. 동 시스템으로 완비시 일본의 기동함대는 해상방위는 물론 일본 전지역에 대해 전략미사일 공격까지도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된다. 동시에 대형 보급함과 수송함 그리고 잠수함, 소해함, 대잠기P-3C 등과 혼합 편성시 비약적인 해외 전력투사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88함대의 핵심인 이지스형 호위함은 1993년에 1번함이 취역한 이래 매 2년 단위로 취역하여 현재 4척이 작전배치 되어 있으며, 장차 8개의 기동함대 체제로 재편이 완료되면 총 8척을 보유할 것으로 전망된다.¹²²⁾

<표 4-13 > 일본 이지스함 ‘콩고’급의 주요제원

구 분	장 비	구 분	장 비
기 관	COGAS,개스터빈,102/106pH	대 잠	어뢰: 324mm 6기
레이다	대공: SPY-1D 대함: JRC OPS 28C/D 항해: JRC OPS 20	유도탄	함대함: 하푼 8기 함대공: SR-2MR 함대잠: ASROC
음탐기	NEC OQS102 (선체) OKI OQR 2(예인)	함 포	127mm 1문 20mm Phalanx 12문
유도탄 대항책	SR BOC×4, SLQ-25	지휘통제 체제	AEGIS NTDS,Link 11,14 SAT COM OE-82C
사 격 통 제	MK 99 Mod 1×13 Type 2-21, MK116 Mod 7	헬 기	SH-60J Seahawk

이지스(AEGIS)란 적 유도탄의 동시다발 공격으로부터 항모공격단 및 수상전투단(SAG)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종합방어체계를 말한다. 일본은 이지스 1번함인 ‘콩고’를 1990년 5월에 기공하여 1993년 3월 준공한 이래 1995년 3월 제2번함 ‘하루나’를 취역시켰고 이어 1997년, 1999년에 각각 3,4번함을 취역시켜 현재 4척의 이지스형 호위함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이 보유한 이지스형 호위함의 기준 배수량은 7,250톤이고, 만재 배수량은 9,485톤이며, 최대 속력은 35Kt이다. 이는 배수량 면에서 미국의 이지

122) 신방위계획대강에서 4개 호위대군 체제에서 호위함 4척씩의 8개 호위대체제로 변경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각 호위대별로 1척의 이지스형 호위함을 구비하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보여짐.

스함 ‘알레이 벌크’(Arleigh Burke)급의 만재 배수량 8,350톤에 비해 1,170톤이나 크다. 또한 이것은 1995년에 중국이 취역시킨 최신예 구축함인 루후(LUHU)급 기준배수량 4,200톤보다 3,050톤이 더 큰 것이며 한국의 최신예 프리깃함인 광개토대왕함의 3,500톤보다 약 4,000톤이 더 큰 함이다.

항속거리 면에서도 중도에 재급유 없이 2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한다면 4,500해리(5,175마일)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¹²³⁾ 4,500해리 순항능력이라면 1,000해리 해상교통로 보호수역인 東京 - 靑島 - 필리핀 北端 - 大阪을 잇는 海上交通路를 약 한 바퀴 반 정도 순회할 수 있는 거리이다. 또한 일본열도는 2회 이상 순항할 수 있고 하와이 및 호주까지도 중도에 재급유 없이 왕복이 가능한 거리로서 일본의 원양작전 능력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이지스함의 최대 강점의 하나는 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방공능력으로서 이지스 시스템의 다수 무기체계 가운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다기능 위상제어 방식인 SPY-1D라는 대공수색 3차원 레이더를 장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SPY-1D는 4.4m × 3.8m의 8각형 고정 안테나 4기가 선체의 좌우 사방에 장착되어 있는데 각각의 고정안테나는 4,000개 이상의 방사소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많은 방사소자에 의한 세밀한 탐색전과로 표적을 정밀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전파방해를 거의 받지 않아 강도 높은 전자전하에서도 표적의 추적이 가능하다. 이 레이더는 또한 컴퓨터빔을 투사하여 수평선으로부터 90도 상공까지 커버하며, 154개의 목표를 동시에 탐지, 식별, 추적할 수 있고 동시 목표처리 능력은 최대 12개나 된다.

또한 사격지휘 레이더에 필적하는 위치정밀도(3차원 공간에서 1피트 이내)를 가지고 있어 수백 야드의 오차를 내는 보통의 재래식 탐색 레이더보다 정확하여 사격지휘장치와 같은 임무, 즉 미사일 레이더를 직접 관제한다. 이러한 레이더에 대한 지휘관제 기능으로 전투부대의 지휘관은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의 요격만을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우군의 전투기에도 대단히 정밀한 요격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다. 그리고 생존성이 뛰어나 안테나 일부에 손상을 받아도 다른 소자가 그 기능을 보상해 주며 안테나 1기

123) 日本防衛年鑑刊行會, 『防衛年鑑』(東京: 防衛年鑑刊行會, 1994), P.286.

가 파괴되어도 다른 3기에 의해 운용이 가능하며 1기의 안테나는 100도 이상을 커버할 수 있다.¹²⁴⁾

대공사격체계는 수직발사 시스템인 MK41과 대공미사일인 SM-2MR을 장비하고 있다. MK41은 수직기의 각종 미사일을 수직으로 격납하고 필요에 따라 단발에서 동시 연속 발사가 가능하며 최대발사속도는 10초에 12기나 된다. SM-2MR은 기존의 스탠다드 미사일인 SM-1MR에 비해 속도가 마하2에서 마하 2.5로 증가되었고 사정거리도 38Km에서 74Km로 약 2배정도 향상되었으며, 90발을 적재할 수 있다.¹²⁵⁾ SM-2MR은 2010년까지 TMD 체계인 SM-3(사거리 약 240Km) 계열로 모두 교체할 계획에 있어 대공능력은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88함대의 지휘함인 DDH는 '70년대 준공한 5,000톤급의 “하루나”형 2척과 '80년대 준공한 5,200톤급의 “시라네”형 2척 등 모두 4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하루나”형 2척은 2009년과 2011년에 헬기항모인 13,500톤급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새로 건조되는 13,500톤급 DDH는 만재톤수 18,000톤급으로 영국의 경항모 인빈서블(invincible, 만재톤수 약 21,000톤)과 동급으로 헬기 6대의 격납이 가능하고 갑판에서 동시에 4대의 헬기 이착륙이 가능하다.

수상함의 능력 향상과 더불어 잠수함 분야에서도 일본은 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매년 1척씩의 잠수함을 퇴역과 취역을 시키는 나라이다. 일본은 현재 잠수함 16척을 보유하고 있는 데 모두 2,200톤급에서부터 2,750톤에 이르는 잠수함이다. 이러한 수준은 최근 한국이 독일과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건조한 209형 잠수함 1,280톤에 비하면 2배 이상의 대형 잠수함이다. 그럼에도 일본은 매년 잠수함을 취역시키면서 점차 대형화, 고도화 시키고 있다. 보유 잠수함 16척중 2,200톤, 2,250톤, 2,300톤급이 8척이고, 2,450톤, 2,500톤급이 7척이며 최근에 취역한 ‘오야시오’함은 2,750톤이다.

성능면에서도 최근 취역한 잠수함은 스웨덴제 엔진 스테어링을 채택하여 수중항해 능력을 향상시켰다. 이것은 ‘스노켈’¹²⁶⁾항해를 하지 않으면서 보

124) 박광실 외, 『이지스함의 기술현황』, pp.76-77.

125) 박광실 외, 상계서, PP.74-75.

126) 예관수 편, 『군사학대사전』 (서울: 세문사, 1964), 스노켈(Snokel)이란 잠수함이 함체

다 오래 수중에 체재할 수 있는 “무급기 추진(Air Independent System : AIP)시스템¹²⁷⁾을 채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스테링 엔진을 사용하므로써 기존의 잠수함 보다 수중체제 능력이 5-7배정도 증대됨으로서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잠수함의 대형화와 함께 수중체제시간의 대폭적인 연장으로 원양 작전 능력이 일층 증대되었다.

또한 원양작전 능력 향상에 필수적인 대잠초계능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일본의 대잠초계기로는 P-3C 가 주력기이다. P-3C는 미국 록히드사의 민간 여객기를 모체로 하여 개발되었으나 그후 출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전자장비와 대잠기능을 강화시켜 최첨단의 대잠초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P-3C의 항속거리는 8,950Km, 행동반경은 3,835Km, 최대속도 732Km/H, 상승고도 8,780m이며, 무장은 기뢰, 어뢰 등을 포함하여 9.1톤을 탑재할 수 있다. 최대 체공시간은 2개의 엔진으로 운항시에는 17시간, 4개의 엔진으로 운항시에는 12시간이나 된다.

이러한 작전능력은 P-3C 1기가 서울에서 발진하여 임무 수행시 한반도 全海·空域은 물론 주변 공해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인 것이다. 일본은 이러한 P-3C를 96대나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현 P-3C의 작전능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P-3C 후계기인 P-X기의 자체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더욱 대형화 되고 첨단화된 장비로 더 멀리, 더 빨리, 더 오래 대잠초계가 가능한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하에 이미 2001년부터 자체 기술로 개발에 착수하여 2007년 초에는 초호기가 시험비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 작은 부분만 해상에 내 놓고 기관에 의하여 잠항할 때 사용되는 공기 흡입장치 즉, 잠수함에서 2개의 直立한 파이프를 해상면에 올려 일반 통풍과 기관의 배기를 뽑아내서 장시간 수중항행을 가능하게 한 장치이다. 제 2차대전시 독일이 발명한 것으로 이와 같은 수중항행을 스노켈링(Snokeling)한다고 한다.

127) 현대 AIP의 기본개념은 종래의 추진방식에 복합형화(Hybrid)를 도모하는 것으로 즉, 초계해역으로의 이동 및 수중고속을 필요로 하는 공격 회피에는 스노클 및 전지항해를 하고, 장시간에 걸친 수중 저속초계에는 AIP를 사용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구상이다. 대표적인 AIP에는 ①스테링 기관, ②연료 전지(Fuel Cell), ③ 폐회로 디젤 기관, ④소형 원자력 기관 등이 있다.

나. 海上輸送能力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해외 자국민의 구출, PKO 참여와 같은 소극적 국제공헌에서 국제안보환경의 안정화를 위한 자주적이고 주도적 참여로 매우 적극적인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하여 대규모 전력의 해외수송에 필요한 대형수송함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자 일본정부는 이제까지의 작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전력의 확충 개념에서 질적으로도 우수하고 대형화된 전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미 8,900톤급 대형 수송함(오오스미형)을 3척이나 보유하고 있다.

<표 4-14>일본 “오스미” 수송함 주요제원

길이 : 178m	폭 : 25.8m
기준배수량 : 8,900 톤	최대속력 : 22 노트
주요장비 : 수송용 공기부양정 2척, 고성능 20mm 기관포 2문	
수송능력 : 전차 10대, 병력 1,000명, 화물 1,400톤	
기타 : 스키 갑판 및 대형화물 적재용 승강기 부착으로 경향모 개조가능	

<표 4-14>에서 보는바와 같이 8,900톤급인 오스미함급 만으로도 1,000여명의 병력수송이 가능하며 유사시 경향모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이륙이 가능한 스키 갑판과 갑판의 항공기를 갑판아래 격납고로 옮기기 용이하게 승강기를 채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제원에서 제시된 성능으로만 보아도 평화헌법하의 전수방위를 주창하는 일본에게 필요한 함선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데 이에 추가하여 오스미함의 숨어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공격용 상륙함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 까지도 오스미함이 이같이 많은 병력과 전차를 수송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습·양륙능력 까지도 구비하고 있어 공격용으로 사용 가능한 함정을 대형 수송함으로 부르고 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도 이 대형 수송함에 대해 “세계의 상식으로도 ‘강습양륙함’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강습’이라는 말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양륙함’ 이라고 호칭해야 며 애

매한 호칭은 오히려 장래화근을 불러일으킬 뿐이다.”¹²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구조로 보아 포클랜드전에 참전했던 영국의 인빈시블 항모와 유사한 형태로 함교, 레이더, 마스트 등이 갑판 한쪽으로 치우친 항모형태를 띠고 있어 일본 국내에서도 장차 항모 건조를 목표로 한 중간단계라고 평가하는 전문가도 있는가 하면 전수방위 전략의 확대라고 평가하는 평론가도 있는 등 국내외에서 항모로의 전용 가능성이 많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 후 이러한 의혹은 동 수송함에 영국제 SCAD(Ship Container Air Defense System)¹²⁹⁾를 사용하여 48시간 이내에 경사 비행갑판(Ski Ramp)을 장착하여 경항모로 개조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용어와 용도를 두고 말 많은 이 오스미함이 그 위력을 본격적으로 선 보인 것이 바로 1999년 터키의 대지진 참사시 이재민에 제공된 가설주택 수송작전 이었다. 본 작전은 1999년 8월 17일 터키 북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지진이 발생,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국제긴급원조대법에 의거 500호의 가설주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수송하기 위해 해자대의 수송함 ‘오스미’(8,900톤), 보급함 ‘토기와’(8,100톤), 소해모함 ‘분고’(5,100톤) 등 3척의 함선으로 구성된 “해상수송 부대”를 편성하여(병력 430명 탑승) 1999년 9월 23일 일본 ‘고베’항을 출발, 23일만인 10월 19일에 터키의 이스탄불에 위치한 하이달파샤항에 무사히 입항했다. 중간에 기항한 곳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항에 단1일 뿐 이었다. 평균 속력 18노트로 연속 23일간 이라는 원양 항해를 전후 최초로 달성해 낸 것이다. 그 후 11월 22일 일본에 복귀할 때까지 약 2개월간 총 항해거리 18,000마일(약 33,000Km)의 해외투사 임무를 완수 할 수 있는 놀라운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 이후에도 본격적으로 군사작전에 투입되면서 위용을 발휘하였는데 그 사례가 2003년 동티모르 병력과병, 그리고 2004년 이라크에 대

128) 加藤 武, “海自期待の 新世代戦闘艦,” 『軍事研究』, 1995년 6월호, (동경: 군사연구소, 1995), p.93

129) 김문소, “일본의 방위력 변화”, (연구논문, 국방참모대학, 1993), P.88. 영국 브리티쉬 에어로 스페이스社의 SCAD는 전시 동원되는 컨테이너 선박을 경항모로 긴급 개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구상한 체제로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V/STOL機의 전투 이착륙이 가능한 12° 경사 비행갑판 설치(비행갑판은 조립식으로 전투기의 고열분에도 지탱 가능함)하고 필요한 비행관제 및 유도장비, 대공방어 미사일은 컨테이너 크기로 표준화하여 탑재하는 개념임.

대규모의 병력과병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전투력 해외투사의 진모를 들어냈다.

수송선단의 일부인 보급함도 대형화 되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건조한 8,100톤급의 보급함 3척 등 모두 4척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4년과 2005년에 “마슈”형인 13,500톤급의 대형 보급함을 2척이나 추가로 건조하여 총 6척을 보유하고 있다. “마슈”형 보급함은 만재톤수 25,000톤급으로 “오오스미”형 수송함과 함께 동시에 다량의 전투 장비와 물자를 신속하게 해외로의 投射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같이 일본의 해양전력이 전투함은 대형화, 첨단화 되어가고 있으며, 수송함과 보급함도 더욱 대형화 되어감을 볼 때 2010년대 일본의 해군력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작전무대로 하는 대양해군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 遠距離 空中作戰 및 航空輸送能力

일본은 법적 제약으로 장거리 미사일 보유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이러한 법적 제약을 교묘히 비켜서 공중급유가 가능한 F-2 전폭기를 2006년까지 130기를 보유하기로 하였으며 이들에게 장거리 작전이 가능토록 공중재급유를 해줄 공중급유기를 2009년까지 4기를 보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C-1수송기 도태에 대비하여 현 C-1보다 3배 이상의 성능을 갖춘 대형 전술수송기를 독자적으로 개발중에 있다.

주요사태 발생시 즉응성이 가장 높은 수단은 항공전력이다. 이러한 항공전력의 해외투사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공전력의 체공능력, 요격능력, 조기경계 및 관제능력, 목표 타격능력, 장거리 수송능력 등의 유형적 요소와 조종사의 항법능력 등의 무형적인 요소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유형적 요소중 ①조기경계 및 관제능력과 ②요격 및 목표타격능력, ③체공능력, ④장거리 항공수송능력 중심으로 보유 또는 보유예정인 무기체계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가. 空中早期警戒 및 管制能力

전수방위전략을 채택한 일본은 공중 조기경계 및 관제를 위해 '80년대에는 E-2C기종이면 적당하다고 판단하고 13대를 도입하였으나 '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전투기의 공격능력 및 행동반경의 확장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기술수준의 진보로 인하여 E-2C의 기능만으로 불충분하다고 보고 '92년 말 최신 기종인 E-767 AWACS기(공중조기경계관제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후, '97, '98년도에 각 2대씩 총4대를 도입하여 2년여에 걸쳐 작전운용 시험을 거친 후 '00년 3월부터 작전운용하고 있다.¹³⁰⁾

< 표 4-15 > E-767 과 E-2C의 성능비교

구분	작전 반경	항속 거리	순항시간	레이다 탐색반경	기 타
E-767	1,850 Km	9,260 Km	약12시간	550Km	BADGE시스템,요격기, E-2C와 Data송신 및 음성통신 가능 승무원 20명
E-2C	1,500 Km (최대)		약 6시간 (초계4시간)	500Km	승무원 5명

E-767 AWACS기는 B-767여객기 몸체에 E-3의 경계관제 시스템을 탑재한 최신의 공중조기경계관제기로써 <표4-15>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전 반경은 E-2C에 비해 350Km 정도 넓고, 항속시간도 약 12시간으로 E-2C에 비해 2배나 길어서 원격지까지 진출하여 장시간의 초계가 가능하며, 장차 공중급유를 받을 경우에는 24시간 초계까지도 가능하다.

특히 항속거리가 9,260Km로서 일본의 한쪽 끝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일본 열도(2,000Km)를 4회 이상 선회할 수 있고, 오키나와에서 출발시 말라카해협까지 재급유 없이 왕복이 가능한바 이는 1,000해리 해상교통로를 2배이상 커버함은 물론 동북아와 동남아 지역에 대한 공중조기경계 및 관

130) 朝雲新聞社, 『自衛隊裝備年鑑』 2002-2003, (東京: 朝雲新聞社, 2002), p. 416.

제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또한 탑재된 레이다는 육지와 해면 상공의 비행 표적과 원거리 표적을 800개 이상이나 동시탐지가 가능하며, 아울러 다수의 통신장치에 의거 BADGE시스템¹³¹⁾, 요격기, E-2C등과 복수로 동시에 자동으로 데이터전송 및 음성통신이 가능하다. 이와같은 AWACS기의 체원과 성능으로 보아서도 일본은 전수방위나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개념을 뛰어넘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전력투사능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나. 空中邀撃 및 目標打撃 能力

일본은 전투기를 요격기와 지원기로 구분하고 있다. 요격기로는 주력기가 F-15J/DJ로서 일본이 라이선스 생산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지원기의 주력기는 F-86을 대체하기 위해 일본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2를 모체로 하여 일본이 독자 개발한 F-1 이다. 이 F-1이 지원기의 주력기였으나 후속 모델인 F-2로 전량 교체중에 있는데 F-2는 공중전과 대지.대함지원 등 지원기의 기능 모두를 구비하고 있는 주요 전투기이다.

요격기인 F-15J/DJ는 미국의 현역 주력기인 F-15 계열의 전투기로서 일본은 공중전 전력에서 최첨단 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한편 해상 및 지상목표 공격 임무를 맡는 F-2 지원기는 일본의 방위 전략상 성능이 부족하고 일본이 장차 국제 항공우주산업 시장에 진출해야 하겠다는 계산하에 '80년대초부터 전투기의 독자적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일본 자체기술로 꿈의 전투기를 제작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었다.

핵심 요구성능은 기수방향의 변환 없이 기체를 상하좌우로 기동시키는 것이다. 공상만화에서나 가능한 전투기를 독자기술로 만들겠다는 계획하에

131)三根生 久大, 『軍事用語の 知識』(東京: 陸書房, 1983), pp,171-172. BADGE시스템이란 Base Air Defense Ground Environment의 약어로 기존의 수동적인 방공 시스템과는 달리 컴퓨터등에 의한 자동 시스템으로 변환된 자동방공경계관제 시스템을 말한다. 이에따라 ①요격시간의 단축(기존의 1/10), ②동시에 다수 목표 컨트롤 가능, ③미사일. 전투기등 각종의 요격 가능, ④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가능 등이 이루어 졌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이 맞지시스템을 1969년 3월부터 운용을 개시하였다.

차기지원전투기(FSX)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론적, 기술적 어려움과 미국의 간섭에 의해 기술개발이 부진하다가 1988년부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했다. 개발모델은 미국의 F-16을 기본으로 하되 여기에 일본의 독자기술을 대폭 활용하여 일본 주도로 설계 및 제작을 추진한 결과 2000년7월 1호기가 자위대에 인도되었다. 이후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 이래 2006. 3 현재 6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2009년까지 98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표 4-16 > F-2 전투기의 주요제원 및 성능

◎ 길이 : 15.52 m	폭 : 11.13 m	높이 : 5.41 m
◎ 자체중량 : 12,000 Kg	최대중량 : 22,100 Kg	
◎ 최대속도 : 마하 2.0		
◎ 한계고도 : 15,240 m		
◎ 전투행동반경 : 830 Km	항속거리 : 약 4,000km	
◎ 탑승인원 : 1명(F-2B는 2명)		
◎ 엔진 : F110 - GE - 129 x 1		
◎ 제작 : Mitsubishi		

일본의 해외 전력투사능력에서 F-2 전투기를 주목하는 것은 동 전투기가 재급유 없이 북한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를 파괴할 수 있는 체공 및 무장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점과 우수한 비행성능 때문이다.

F-2에 투입된 기술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일 양국의 최첨단 항공기술이 적용되었으며 개발비만 하더라도 3,281억엔으로 우리나라 국방비의 약 1/4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이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우수한 성능으로 F-2는 F-15 나 F-16이 최고 속도에서 선회하기 위하여 반경 5,000m가 필요하나 F-2의 경우는 1,600m이기 때문에 F-15와 F-16의 1/3 정도도 안 된다. 따라서 선회속도가 굉장히 빨라 적기의 후미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여 파괴하는 열추적 미사일을 쏘아 적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F-15와 F-16은 F-2에 대항하기 어렵게 된다고 평가받고 있다. 최대항속거리

4,000Km, 전투행동 반경도 약 830Km로서 F-1 지원전투기의 550Km 보다 280Km 정도 넓어 일본 서부지역에서 이륙하여 임무를 수행할 경우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기지까지 재급유 없이 작전활동이 가능하다.¹³²⁾ 또한 동 전투기에는 공중급유가 가능하도록 공중급유구를 장착하였으므로 기결정된 공중급유기가 도입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 전 지역과 서태평양 전 해역에 대한 해상교통로 방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다. 航空機 滯空能力 強化

일본 정부는 2000년 12월 15일 모리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한 안전보장회의 및 내각을 열고, 「중기방위력정비 계획 (2001년 ~ 2005년도)」을 결정했다. 기간중 방위 관계비의 한도액을 2000년도 가격으로 대강 25조 1,600억엔으로 한 이 계획은, 엄격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기간부대와 주요장비 등은 前期計劃에 뒤이어 방위력의 合理化 · 効率化 · 컴팩트化를 추진하고, 1995년에 결정된 방위계획의 大綱에 의한 체제로 이행하는 것과 함께 필요한 기능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으로 방위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질적인 향상을 목적으로 책정된 01-05 중기방의 핵심중 핵심이 바로 공중급유기이다. 이 장비의 채택은 일본이 국방정책 전면에서 내 세웠던 전수방위 전략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음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는 자위대의 활동영역이 지리적으로 전수방위의 틀 내가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지역 나아가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에서도 01-05 중기방을 편성할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항공자위대의 ‘공중 급유 · 수송기’의 도입였다..

공중급유기의 도입에 관해서는 1996년도부터 시작한 전 중기방계획 (1996년 ~ 2000년도) 중에, 「성능, 운용 구상등 공중급유 기능에 관한 검토를 행하고, 결론을 얻어 대처한다. 」고 기술되어 있었다. 前計劃의 심의에 이르러 결정에 관한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일보 후퇴하여

132) 인터넷 검색. <http://ja.wikipedia.org/wiki/>, 검색어: "F-2 戦闘機"에서 발췌

검토하고 실행한다고 하는 기술이 되었던 것이다. 방위청은 전 계획의 최종 년도에 해당하는 2000년도 예산의 편성 무렵에 검토를 행한 결과, 전투기 등 비행중 항공기에 연료를 보급할 공중급유기는 항속시간을 연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공능력의 향상에 도움이 되고, 훈련을 위해서는 이착륙 횟수가 줄고, 연료의 절약과 소음의 경감에 도움이 된다. 또 물자와 인원을 수송할 수송기로서 사용도 가능하고 UN 평화유지 활동(PKO)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여 구입을 안정보장회의에 요구했다.

<표 4-17> 공중급유기 주요 성능 및 제원

성능	
- 재급유 가능 연료량 :	130,000-160,000 LBS
- 행동반경 :	5,400NM(약 10,000Km)
제원	
- 길이/폭 :	48.5m / 47.67m
- 속도 :	450Kt
* 가격 :	약 3.3억불

당초 정부의 결정은 이러한 방향이었지만, 자민, 보수, 공명 여당 3당의 협의 속에서 공명당이 반대 의향을 보였기 때문에 2000년도 예산에 구입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다만 운용 연구비 (360만엔)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에 만족한 채, 2001년도부터 시작되는 01-05 중기방에는 이것을 도입장비로서 포함하기로 했다. 그리고 계획대로 01-05 중기방에 4기의 장비를 포함하고, 2001년도 예산 중 1기의 구입비로서 238억엔이 예산에 편성되었다. 단 구입기의 명칭은 공중급유·수송기라고, 수송기능도 배려한 것으로 했다.

하지만 결정 직전, 역시 공명당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전년과 똑같은 경향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01-05 중기방중에는 「공중에 있어서 항공기에 대한 급유기능 및 국제 협력 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는 수송기능을 가진 항공기」로서 4대의 장비가 인정되었다. 2001년도 예산에는 이 항공기(KC-X)의 기종 선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약 800만엔을 책

정하였다. 이와 같은 의미가 붙어 우여곡절 끝에 도입하기로 결정한 공중급유기는 결국은 미국 보잉사의 B-767기를 개조한 KC-767기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예산상의 사정으로 01-05 중기방 기간중 도입하지 못하고 차기 중기방인 04-09 중기방으로 넘어왔다.

KC-767은 재급유용 연료를 최대 16,000LBS 까지 탑재할 수 있으며, 행동반경이 5,400NM(약 10,000Km)로서 인도양까지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일본의 항공기 체공능력은 조종사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어 최소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내륙 일부까지를 작전반경에 두게 되었다고 평가된다.

라. 長距離 航空輸送能力

일본이 필요시 즉각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해외로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본격적으로 확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대변해 주는 것이 바로 대형수송기의 확보이다. 현재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군용 수송기는 C-1과 C-130H 2개 기종을 들 수 있다. 2006년 3월 31일 기준 보유수는 C-1이 26대, C-130H가 16대 이다.¹³³⁾

이 중에서 C-130H 기종은 세계 60여개 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중거리 전술 수송기로서 최대적재량은 19톤이고, 연료 만충 상태에서 항속거리는 적재량 9톤시 약 4,000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방위청은 이 C-130H 군용수송기가 캄보디아 PKO 공수지원시에도 연료 재보급을 위해 오끼나와, 필리핀을 경유해야 하는 등 항속력과 탑재력에 있어서 장거리 수송 능력상의 문제점을 노정시키고 있다고 판단하여 수명도래로 도태되는 C-1 후속기로는 C-130H 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대형수송기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대체 기종을 검토하면서 한때 미국의 C-17 전술 수송기를 구매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는데 이 C-17 수송기는 미국이 긴급전개군 지원용으로 개발한 미공군의 최신형 장거리 전술 수송기로서 항속거리는 최대적재 72톤으로 5,000킬로미터, 56톤으로 5,200킬로미터나 된다. 이러한

133)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자료 18에서 발췌.

최첨단 전술수송기를 제쳐두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성능면에서 C-17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 중에 있는 C-1후속기의 비행속도는 890Km/H이고, 항속거리는 6,500Km이며, 최대적재량은 26톤 이라고 한다. 이대로 제작될 경우 <표 4-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속거리 면에서 C-1후속기는 C-1의 3배, C-130H보다도 1.5배 이상의 장거리 공중수송 능력을 구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능력은 필요시 일본이 긴급전개군을 동남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전역과 남서 태평양 해역 어디에나 8시간 이내에 전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됨을 의미 하는 것이다.

<표 4-18> C-1 후속기와 기존 수송기와 비교

구분	C-1후속기		C-130H	C-1	C-17
비행속도	890Km/H			650Km/H	
항속거리	6,500Km	8,900Km	4,000Km (9톤적재시)	2,200Km	5,000Km
최대적재량	26톤	12톤	19톤	8톤	72톤

이 계획은 2001년부터 개발을 시작하여 내년 초에는 시제품이 완성될 예정이며 2008년부터는 자위대에 인도될 예정이다. 최근의 국제정세의 변화와 일본의 군사역할 강화동향으로 보아 새로 개발하는 전술수송기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의 군용수송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전술공수능력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이러한 능력은 일본으로 하여금 PKO활동 등 국제적 재난구호와 분쟁조정 활동에 신속히 참여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해상교통로 보호범위 확장 및 외국거주 자국민 구출 등 일본의 국가이익 확장을 위해 군사력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결과도 초래할 것이다.

제 V 장 日本의 軍事力 強化와 韓國安保

제 1 절 한·일간의 안보환경

역사적으로 일본은 한국을 침략 및 강점했던 국가로서 한국의 안보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국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든든한 후방기지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왔고, 산업기반 조성에 참여하는 등 안보, 경제면에서 크게 기여한 주요 우방국인 점 또한 틀림없다. 이와 같이 한·일간에는 정치, 경제, 안보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경쟁과 대립의 갈등 요소와 선린우호 및 협력의 요소가 병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한·일간 안보분야에서의 우호 및 협력요소와 대립 및 갈등요소를 논하고자 한다.

1. 우호 및 협력 요소

첫째, 주한유엔군 사령부의 안전한 후방기지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유엔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유엔군을 결성하여 한국에 파견하였고, 이 때 일본에는 한반도에서 작전하는 유엔군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 후방기지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체제하에 있으며 북한이 다시 남침할 경우 정전체제는 파괴되고, 유엔군 활동은 재개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다. 이 전쟁의 핵심 당사자였던 유엔사도 아직 서울에 건재하고 있듯이 이를 지원하는 유엔사 후방사령부도 일본에 건재하고 있다. 유엔사 후방사령부는 일본의 요코스카, 사세보, 오키나와 등의 주요항구와 군사시설을 추가 조약 체결 없이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요구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한국전쟁 발발 이후 60여년간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유엔사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후방기지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둘째, 일본은 한국과 동해와 남해에 인접해 있는 국가로 동해는 북한의 해상을 통한 우회침투 및 공격에 대하여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고, 남해는

해상교통로의 주요 목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의 해외무역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우리와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방과 해외무역을 위해 긴밀한 협력과 협조가 요구되는 나라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항공로는 일본의 영토와 주변해역의 상공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일본의 협력이 중요하다. 국제화시대에 인적, 물적 이동로인 항공로의 자유를 확보하는 것은 국익과 직결되는 요소이다.

넷째, 일본은 우리와 민주주의 이념과 자유 시장경제 체제를 공유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공조와 협조에 의해 국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륙으로는 냉전종식 이후에도 살아있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 및 중국과 접해있고, 해양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인 일본과 인접해 있다. 정치적 이념과 자유 시장 경제체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국제화시대에 국가의 커다란 자산이므로 이를 국익증대에 연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군의 해외활동간 일본의 자위대와 정보공유와 협력을 통하여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현대 사회는 다자간 안보협력에 의하여 국가의 안보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일본도 자위대의 국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므로 국제활동간 우리군과의 경쟁과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2. 대립 및 갈등 요소

첫째, 영토문제인 독도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영토문제는 정치적 해결이 어렵다. 결국은 군사적 충돌을 양국 모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일본 방위청이 매년 각의에 보고 후 국민에게 선전하는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음을 볼 때, 일본은 하더라도 독도를 군사문제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³⁴⁾

둘째, 배타적 경제수역(EEZ) 문제이다. 독도주변 해역과 제주도 남동해역에서의 EEZ 문제가 상호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 이 주변해역에서의 어로활동을 포함한 경제 및 외교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셋째, 대륙붕 문제이다 한·일간 문제가 되고 있는 대륙붕은 제주도 남

134)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P.56

방의 제7관광구로서 이곳 남쪽은 최근 중국이 탐사를 위한 시추를 하고 있어 일본과 외교적인 마찰을 빚고 있는 곳이다. 7광구는 1974년 일본과 대륙붕협정 체결시 중간선이 아닌 자연 연장선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일본측에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 협정은 2028년까지만 유효한 한시범이기 때문에 향후 대립이 예상된다.¹³⁵⁾

넷째, 동해의 국제적인 표기문제로 국제사회에서 대립하고 있다. 우리의 동해를 일본은 일본해로 표기할 것을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어 외교문제화 되고 있다.

다섯째, 역사인식의 문제로서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문제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에 대한 핵심쟁점은 그곳에 동경전범재판에서 A급 전범으로 판결 받은 전범의 명부를 봉안해 두고 그들의 혼을 위로하는 행위를 국가차원에서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 행위는 태평양 전쟁을 범죄시 않는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역사인식의 중요한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역사교과서 문제이다. 이것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대한 사실을 왜곡되거나 미화하는 내용으로 기술하여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데 있다.

제 2 절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군사력 수준은 자국방위수준을 넘어 동아시아는 물론 인도양까지 군사력을 단기간에 투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성장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수준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지역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간의 군사적 균형유지와 대북 전쟁 억지,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등 동북아 지역 및 한국의 안보정세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역내 국가간 군비경쟁 유발로 인한 정세불안 요인이 될 수 있고,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국에게 정치·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한국의 안보에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된다.

135)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서울 : 한스미디어, 2006)에서 발췌

1. 지역 및 한반도 안보정세 안정화에 기여

한·일간에는 안보 및 방위와 관련한 상호지원의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한·일 간 수교시 체결한 기본조약의 정신에 입각할 때 안보분야에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협력관계 조성이 가능할 것이다. 한·일 기본조약은 전문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어 양국이 긴밀히 협조함이 중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비군사적 노력에 의한 안보협력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일 기본조약은 비군사적이기는 하지만 안보적 의미를 지닌 점이 특징이다.¹³⁶⁾ 또한 일본이 한국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은 미·일 안보조약상의 규정 때문이다. 동 조약 제4조는 일본 또는 극동에 있어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이 발생한 경우 체결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은 물론 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도 중요하다」¹³⁷⁾라고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국익에 합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안보지원 여건을 배경으로 역내 안보정세 안정화에 기여하는 요소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균형자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주변 강국인 미·일·중·러의 군사력 중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일본의 군사력이 증강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종래보다 군사적 균형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임으로 한반도 주변의 안보 및 군사정세 안정화에 긍정적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은 일본의 군사력이 적정 수준일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이를 통제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군비경쟁을 초래할 수 있어 안보부담요인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군사력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대북억지력으로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일간의 정치 외교적 공조체제 존속 조건하에서 일본

136) 민병찬, 『한국방위론』 (서울 : 고려원, 1996), P. 84.

137)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정보본부, 2005), p.49.

의 막강한 군사능력과 정보능력은 한국에게는 대북 조기경보 능력 강화 및 대북 전쟁억지력 강화의 기능을 줄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게는 대남 무력도발의 욕구를 자제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므로 남북간의 전쟁을 억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주한 미군 및 한반도 전개 미군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고 후방지원 기지 및 병참 기지로서의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후방지원 및 병참기지로서의 기능만이 아니라 해상구난, 기뢰제거, 공중 및 해상급유 등 적극적인 군사작전 지원도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은 ‘주변사태안전법’에 의하여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데, 이 때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군의 후방지원 및 작전지원 기능을 수행하느냐의 여부가 한반도 유사시 미군이 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느냐의 관건이 될 것이다.

넷째, 일본의 대공, 대해상 작전능력이 향상되어 서태평양에서의 해상교통로 확보에 노력한다면 이는 한국의 해상교통로 안전유지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즉, 일본이 1,000해리 해상교통로의 방어시 한국의 원유 및 자원 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도 포함 또는 접속되는 관계로 한국선단이 일본 해상자위대의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다섯째, 한국군이 PKO 등 국제활동시 동일 활동에 일본이 참여할 경우 일본 자위대와 정보교환 및 업무협조를 통하여 한국군의 국제활동의 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동티모르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했을 때 우리는 작전부대로 참여했고 일본은 후방지원 및 건설부대로 활동하였다. 이 때 한국군은 일본자위대에게 경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일본은 우리에게 공병지원을 해줌으로서 상호보완적 지원을 통하여 성과 거양에 기여한 바 있다.

여섯째, 한·일 군사협력관계가 일본의 방위산업분야와의 협력관계로 발전된다면 일본의 군사과학기술 및 자재를 획득할 수 있어 한국의 방위산업을 향상,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군사과학기술은 세계첨단 수준이므로 이 분야에서 한·일간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안보역량을 일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 군비경쟁 유발 및 한국의 안보부담 가중

일본은 역사속에서 주변국가들에 대하여 약탈, 노략, 침략, 학살 등을 수 없이 자행한 나라이다. 이러한 행위는 모두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행된 만행들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은 패전과 함께 군사적 거세를 당했으나 반세기가 지난 지금 군사적 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어 역내의 많은 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특히 식민지 경험을 했던 한국에게는 국가 존망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게 한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이를 배경으로 하는 군사력의 역할 확대는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일본에 대해 민감한 경계심을 나타내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역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동북아의 군비경쟁 유발 및 한국의 안보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중·러 등의 주변 강대국을 자극하여 동북아지역에서 군비증강 경쟁을 불러와 지역 안보정세를 불안하게 할 것이다. 또한 한국도 군비경쟁에 휘말려 과다한 군사비 투입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냉전 종식 이후 러시아는 시베리아 주둔 극동군을 감축하였고, 중국 또한 경제 우선 정책에 의해 군사력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막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군사력의 증강을 도모한다면 이는 주변 강대국의 군축의도를 위축시킬지도 모른다.¹³⁸⁾ 이러한 현상은 2005년 8월 중국에서 중·러간 공정부대, 해군부대, 후방지원부대 등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되고 있다. ¹³⁹⁾

둘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저하시킴으로서 한국의 독자적 안보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과신하여 한반도 유사시 일본에게 군사적 역할을 강화시키고¹⁴⁰⁾ 이로 인하여 절약되

138) 김성룡, ‘일본의 군사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발전문제연구소편, 『일본의 군사력』 (서울: 다사로, 1996. 4). pp. 23 - 24.

139)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정보본부, 2005), p.76.

140) 기소르망, ‘한국에서 반미는 일본입지만 강화할 뿐’(중앙일보, 2007.1.2.신년특집)

는 주한 미군전력을 감축하거나 타 지역에 전용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 경우 미군의 대북 억제역할은 크게 감소되고,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곤란해지며, 증원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6년 5월 미·일 안보협의회의에서 유사시 아시아 전개군단인 제1군단 사령부의 캠프자마 기지로의 이전과 미·일 공군사령부의 통합화를 합의한 것에서 이미 확인되고 있다.¹⁴¹⁾ 이럴 경우 주일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으로 격상될 것이고 그 직위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채울 것이므로 결국은 주한미군은 주일미군의 지휘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군의 강대화와 미·일동맹의 강화는 결국 한국방위 임무를 일정부분 일본에게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종속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비한 한국의 독자적 안보역량 구비를 위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셋째, 북한에게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도록 명분을 제공할 것이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강화 및 확대하여 한반도의 안보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개발을 명분으로 군사대국을 시도하고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군사적 모험을 강행하는 등 양국간 군사적 대결로 상승작용할 경우 결국 우리의 안보부담으로 돌아 올 것이다.

넷째, 일본이 한반도를 중국의 해양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완충지대로 하기 위하여 한국에 대한 정치적 예측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이 현재와 같은 산업발전의 속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면 2030년대에는 일본의 경제력을 앞질러 지역패권국가로 등장할 것이다. 이 때 중국은 태평양으로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본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 때 일본은 중국과 직접적인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한국을 완충지대화 하려 할 것이고, 이 때 한국에게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적인 예측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6.25때 중국이 항미원조(降美援朝)라는 명분으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한 배경에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우려한 장기적인 전략임을 고려할 때 이런 분석이 가능하다.

141)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자료 38에서 발췌.

3. 군사력에 의한 한·일 현안문제 해결 시도

한·일간에는 지정학 이론이나 구성주의 이론에서 보았듯이 인접국가로서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누적되어 온 많은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국가이익을 위한 국제관계의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유사동맹의 형태를 유지한 채 양국간의 주요 현안문제를 사안 별로 대처해 오고 있다. 한·일간에는 정치·외교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군사적으로 대처하게 될 현안문제들도 존재하고 있어 항상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중 영토문제는 군사적인 방법 외에는 달리 해결 방법이 없음을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한·일간에는 독도문제 뿐만 아니라 대륙붕과 EEZ와 같은 해양주권 문제도 영토문제의 일부로서 첨예하게 대립할 소지를 갖고 있어 언제라도 군사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¹⁴²⁾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아래와 같은 군사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독도의 영유권 문제 등 한·일간의 현안 문제에 대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아갈 가능성이 크다. 즉 일본의 군사력이 국가방위 이상의 능력을 갖게 되고 군사력의 해외투사능력을 확충한 후, 자국방위 중심의 전수방위정책을 파기하고 지역방위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한국을 직접 침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치·외교적인 간섭이나 강압을 가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2006년에 들어와 독도 부근 해저측량을 두고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였던 사실로도 그 가능성을 예측하게 한다.¹⁴³⁾

둘째, 일본이 동해와 남해에서 EEZ와 대륙붕에서 자국에 유리하게 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일본이 EEZ와 대륙붕에 대한 협상이 한국과 원만한 타결을 이루지 못할 경우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자국에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획정하고 우리어선의 나포와 일방적으로 대륙붕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006년 일본의 방위백서에서 최초로 한·일간에 EEZ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한 것은 동 문제를 군사적

142)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p.56.

143) 일 방위청 홈페이지(<http://www.jda.go.jp/>), “平成18年版防衛白書”에서 발췌.

관점에서 취급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7광구 남쪽의 대륙붕에서 중국과 일본이 대륙붕 협상에 타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2005년 중국이 일방적으로 대륙붕개발에 나서고 있는 데서 확인되고 있다.

제3절 한국의 대비방향

역사적으로 경제대국은 예외 없이 군사대국이 되었고, 군사대국은 그들의 힘을 공격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과시했었다. 그러므로 경제대국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 속에 이미 예정된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우리는 이를 너무 과대평가 하거나 과소평가함이 없이 초연하게 대처하여야 하겠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우리나라의 안보 역량을 증진하는 효과를 주기도 하지만 역으로 우리나라의 안보에 부담을 주는 요인이 보다 심각하게 작용하므로 이 점에 더 치중하여 대비하여야 하겠다.

1. 자주적 국방역량 확충

군사력의 불균형은 국가안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한국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 동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주적인 국방역량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일본과 대등한 수준으로 국방역량을 확충하는 것은 경제력 규모나 군사과학기술로 보아 불가능하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에게 군사적 모험을 결정하지 못할 정도의 응징 보복력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군사장비의 현대화, 고도화를 달성해야 하며, 첨단 군사과학기술의 발전 및 방위산업의 육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핵무장을 시도하고 있고, 일본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TMD 개발 및 배치를 추진하는 등 군사적으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이와 같이 주변국

가들이 군사적 능력을 강화하는 것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자주적인 군사적 역지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국방역량 확충을 위해서는 무기체계 등에 의한 군사적인 전력의 확충과 더불어 무형의 전력인 **국민의 호국 안보의식의 고양**이 중요하다. 최소한 국가안보에 관한 것에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이익에 초점을 두고 국가정책의 최상위의 수준에서 일관되게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권의 사상, 자유와 인권, 국가의 자존심과 자주성 등 많은 분야에서 국가안보와 상충되는 사안들이 많을 경우라도 국가의 존립에 우선할 수는 없다. 한·미동맹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병역 거부자에 대한 관용, 주적개념에 대한 모호성 등은 국민들에게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험난했던 과거의 역사를 교훈으로 하여 외세의 위협을 극복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국론을 미래지향적으로 통합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안정 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여 국가안보태세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한·미동맹 강화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지역에 대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⁴⁴⁾ 일본의 방위는 미일안보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탄생과 성장, 확대가 모두 미국의 대일 안보정책에 의하여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한국의 안보역량을 증진하는 틀 내에 두기 위해서는 **한·미 안보협력 체제의 강화**를 통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현재의 한·미 방위조약을 더욱 공고하게 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철수를 억제하고, 일본의 군사력이 강대화 된다 해도 이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역할을 대신하는 일이 없도록 한·미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하겠다. 현재와

144) 이서향, 『일본의 방위태세 강화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 외교안보연구원, 2003). p. 43.

같이 작통권 환수 등으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한·미관계가 소원할 때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음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한미 안보협력체제가 건실하게 유지되고 미일 안보동맹 관계가 공고하다면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의 안보역량을 증진시켜 주는 범위내로 국한시킬 것이다. 즉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 주한미군 및 한반도 전개 외국군의 충실한 후방지원기지 및 병참기지 역할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나아가 일본이 공중 및 해상급유 등의 방법으로 군사작전 면에서도 지원할 수가 있을 것이다. 반대로 한미 안보협력체제가 이완될수록 한국은 독자성을 띠거나 대륙세력으로 경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완된 만큼 일본이 그 자리를 메우려 할 것이다. 이럴 경우 한·일간에는 현안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어려워지고 결국은 군사적인 긴장상태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최근 불거진 작전통제권 환수를 둘러싸고 연합사 해체 등 한미 안보체제의 이완현상을 기하여 미일 안보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있고 한반도 영역에 일본의 군사활동은 일층 강화되고 있음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2006년 여름 작통권 환수에 대하여 야당과 우익단체들의 반대 활동이 성행하던 시기에 미1군단 사령부의 일본 배치와 주일 미공군사령부로 일 공군 작전사령부의 이전 결정 등 미일 안보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했을 때 일본은 이지스함과 군사정찰위성을 한반도 영역에 보내어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했으며, 독도 근해에서도 해저 탐사의 시도와 무장 순시선의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점은 한미 안보체제 이완이 가져올 한국의 안보환경 악화를 시사하는 점이라 하겠다.

따라서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안보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하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미 안보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소부터 한·미·일간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신뢰관계를 축적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전담관을 임명하여 국익에 손상되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일관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한·일 안보협력체제 공고화

우리나라는 과거에 집착하여 일본의 군사력 강화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거나 적대시하기보다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최소한 일본을 적으로서는 만들지는 않아야 한다는 상황인식이 요구된다. 따라서 한·일 군사협력 체제를 보다 공고화 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일 군사협력관계는 다방면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사관생도에서 장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과 직급에 걸쳐서 상호 교환방문과 교육, 정보교환, 정책 협의 및 회의, 공동훈련 등 연간 70여회 이상의 교류 및 접촉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형식과 양적인 면에서는 매우 활발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외교 및 통상 등 다른 분야 이상으로 군사부문에서 유대관계가 밀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내용과 질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일간에는 아직 비밀교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기술교환은 목록 교환 수준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하여 핵심정보에는 이르지 못하며, 중요 군사기술에의 접근이나 방산업체 등에의 접촉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한 차원 높은 한·일간의 군사협력 체제 구축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관계의 최상의 방법은 인적유대를 통한 상호의 신뢰관계 구축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요결이다. 안보적 차원에서 한·일간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군 고위 인사의 교류나 군사정보교류, 사관생도 상호 교환 교육 및 방문, 군사관련 기관에 수·위탁교육 및 상호 친선방문 등을 통하여 인적 신뢰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 그런 후에 이를 바탕으로 공동훈련, 공동작전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사관생도의 수·위탁교육은 그 들이 30년 후에 양국의 각 군 참모총장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착안해야 한다. 사관학교의 동기생이 양국군의 총사령관이 되었을 때 양국의 군수뇌간 인적 신뢰는 높아질 것이고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그 만큼 줄어들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고급 군사정보나 기술정보와 같은 국익과 관련한 정보교환은 원천적으로 군사협력 범위를 초과할 수 있어 사실상 교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인적인 신뢰여하에 따라서 국익에 결정적이지 않다면 제공의 범위는 매우 유동적이며 융통성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므로 예산이나 타 정책으로 인하여 인적유대관계를 위한 계획들이 후 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사례로 2001년 교과서 문제로 한·일간 외교문제가 불거지자 다른 분야는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애꿎은 군사교류를 1년간 중단한 것은 양국간의 군사적인 유대관계가 그 만큼 취약하며 한국의 안보감각이 취약하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다.

둘째,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모이다. 군사과학기술의 협력확대와 방위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정보교환과 장차 고도화된 군사장비 및 부품의 교역과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은 2차대전시 항모와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생산한 국가로서 오늘날에도 군사과학기술은 세계의 최상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반도체를 이용한 미사일 부품과 잠수함의 소나 등에 관한 기술은 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상전력의 핵심인 전차는 일본이 자체개발한 90식 전차가 미국이나 유럽의 전차에 비하여 가격면에서 2배 이상으로 고가이지만 자체개발 장비를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잠수함은 매년 1척씩 건조하며 20년이 안되어 도태시키는 비경제적인 전력운용을 하고 있다.

안보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생존과 국가 독립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즉 군사과학 기술의 독립 없이는 국가의 독립은 보장할 수 없다는 확고한 안보논리에 의하여 일본자위대는 성능은 다소 뒤떨어지더라도 무기체계의 자주화라는 신념으로 군사력을 자주적으로 증강해 가고 있다.

이러한 일본과 군사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관계 구축은 우리의 안보 역량을 일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무기체계 도입선의 다양화와 무기수주의 경쟁으로 비용절감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2004년 12월 미국에 대하여 무기금수 3원칙의 빚장을 풀었음을¹⁴⁵⁾ 고려하여 중·

145) 국방정보본부,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p.150.

장기적으로 일본과의 군사과학기술과 무기체계의 협력관계 구축을 모색할 때이다.

4. 지역안보협력기구 구축 도모

냉전 이후 국제적으로 군축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에서는 군사비 투입규모가 확대되고 있고, 군사력도 과학화, 첨단화, 대형화되고 있어 군사정세가 여전히 긴장상태에 있다. 또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군사적 대화기구나 협의체가 부재함으로 인하여 향후의 지역 안보정세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인접 국가인 중국이나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국력이 열세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

따라서 한국은 확대일로에 있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견제하고 동시에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기구의 구축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러의 대륙세력과 미·일 해양세력의 중간지대에 위치하여 4강 모두에게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역안정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정적 위치에 있다. 이를 감안하여 미국이나 일본과의 안보협력 관계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들과 지역안보 협력기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사전협조 및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국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4강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한국은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다. TMD 체계 구축시와 PSI 참여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애매성은 결국 국은 4강 모두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따라 국익에 합치하게 분명한 결정을 해야만 할 것이다.

제 7 장 結 論

태평양전쟁의 패전으로 군사적인 去勢를 당했던 일본이 반세기가 지난 21세기에 와서는 첨단무기로 무장된 군사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에 대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국의 안보에 긍정적, 부정적인 양면의 영향을 주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의 실체를 분석해 보았다.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 패전과 함께 무장해제를 당했으나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주일미군이 한국전에 참전함으로써 발생한 일본의 치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창설한 경찰예비대가 오늘날의 막강한 자위대로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재무장에는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장 시도를 명분으로 군사정찰위성과 TMD 체계구축, 공중급유기 도입 등 최첨단 군사력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I장 이론적 고찰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군사력은 정치적 목적을 완성하거나 국가이익의 국제적 마찰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수단으로서 전시에는 물리적 위협을 강압적으로 제거하고, 평시에는 국가이익을 증진하며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이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속성 때문에 인접국가의 군사력 강화는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한시도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정학적으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가장자리에 인접하고 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많은 갈등이 누적되어 있다. 냉전시기에는 공동의 위협세력으로 미국을 축으로 유사동맹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냉전종식으로 공동의 위협이 희박해짐에 따라 국익이 대치될 때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 향후의 관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은 9.11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일층 강화하여 미국과 더불어 세계 평화와 안정에 공헌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종래의 일본 “국내 위주”에서 “국내외 모두”로 확장하였다. 지금까지 자위대의 본래 임무에는 침략에 대응하는 방위출동과 재해 및 치안 출동

하는 것이었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의 참여는 부수적인 임무였다. 부수적 임무가 주 임무로 격상되면 군사력의 海外投射가 국가방위의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自衛와 專守防衛의 금기를 깨고 본격적으로 세계무대에서 군사력을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이 군사력을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방지하는 수단에 국한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국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 확장한 것을 의미한다. 세계 평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는 명분이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명분보다는 실리가 우선임을 고려할 때, 일본은 군사력으로 세계무대에서 실리를 찾겠다는 전략의 변화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 동안 자위대의 지휘체계는 방위청 장관에 대하여 육·해·공 3자위대 상호연계가 가능한 병립체계였다. 제국군대가 군권을 전횡함으로서 국가가 전쟁에 깊이 빠져들었다는 반성과 장관인 문민이 각 자위대를 직접 지휘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던 것이다. 이런 취지의 병립형 분권화 지휘·명령 체계를 2006년 초부터 수직형 통합지휘체계로 변경하여 장관-통막장-작전부대로 이어지는 일사분란한 군사대비태세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육·해·공 3자위대 간의 통합작전 수행능력과 효율을 높이고 국제분쟁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은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그 만큼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일본은 군사비를 미국, 중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4위 수준으로 지출하면서 최첨단 무기체제로 무장되어 있다. 냉전 종식 이후 G-8 참가국 모두가 군사비를 감축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만이 군사비를 증가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일본은 비록 병력은 24만 여명 이지만 전력면에서는 탄도미사일 방어망을 비롯하여 고기동화, 첨단화, 대형화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작지만 강한 군대를 구축하였다.

특히 전략적 감시능력, 遠洋作戰 및 해상수송 능력, 원거리 공중수송 및 체공능력 등 군사력의 海外投射能力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군사정찰위성과 정보본부 등 독자적인 전략적 감시능력을 확보함으로서 자주적인 군사작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13,500톤급의 호위함과 8,900톤급의 수송함, 그리고 7,500톤급의 이지스함으로 구성되는 遠洋艦隊는 세계 어디에서라도 원양작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중급유기와 9,000Km의 항속거리를

갖는 대형 수송기 등으로 구성된 장거리 항공수송 및 체공능력은 세계 어디라도 신속하게 군사력의 전개가 가능하다. 이러한 해외투사능력의 강화는 일본이 군사력으로 국제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안보환경이 군사력의 활용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군사대비태세와 군사력의 해외투사능력의 강화가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본의 군사력이 한국의 안보역량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면은 첫째,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간접적인 영향력 내지 억지력으로서 지역 내 군사력 균형유지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군사력은 주한미군과 더불어 대북 억지력으로서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셋째, 일본의 1,000해리 해상교통로 안전확보 능력 강화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한 한국의 해상수송로 안전확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안보환경을 저해시키는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첫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이를 우려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여 군비경쟁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다. 둘째, 미국이 일본의 군사력을 과신하여 한국 방위의 일부를 일본에게 전가시킨다면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예측을 불러올 수 있다. 셋째,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 등 한·일간 현안문제 처리와 관련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정치·외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영향들은 결국은 한국의 안보에 커다란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 강화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안보역량을 증진시켜 주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군비경쟁 유발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등 대체적으로 안보환경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이 취할 대비책으로는 첫째, 일본이 한국에게 군사적 모험을 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자주적인 국방역량을 확충하는 것이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고정밀 전략무기를 구비하는 것이다. 심해 잠수함정이나 첨단 크루즈 미사일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역할 확대는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미 안보체제를 보다 강화하여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한국의 안보역량을 증진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셋째, 한·일간 군사적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일간 군사교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적유대관계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간단없이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고급군사정보 교환을 위한 환경 조성과 군사과학기술 및 방산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요망된다. 넷째,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유발할 수 있는 역내 군비경쟁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동북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의 구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교차지점에 위치해 있으므로 국력을 결집하여 총력을 기우린다면 두 세력의 중심적 위치에 설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이 때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충분한 교감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은 인접한 일본의 군사력증강과 더불어, 예상되는 동북아 군사정세의 변화에 따른 21세기의 도전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한국은 전통적으로 경계와 협력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관계로 유지되어 온 일본과의 애매한 관계를 뛰어 넘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V장 3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본의 군사력을 경계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자로 보고 우리의 국익증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일본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적 통일의 지원자 또는 조력자로서의 역할과 동북아의 군사적 세력균형자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100년 전 우리조상들이 국제안보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서 겪었던 국권상실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이웃나라 일본의 군사적 능력과 의지를 예의주시하여 우리의 안보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해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하여 새로 규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한국과 일본은 상호 국력이 팽창되는 과정에서 갈등이 불가피한 숙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II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2004년을 기하여 일본은 군사력의 역할을 국제무대로 확장하기로 정책적인 전환을 하였다는 것은 III장 1절에서 규명된 바와 같다. 따라서 향후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로 지향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IV장에서 규명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이 패전 후 재무장 과정 중에서 자위대 창설과 냉전 후 전력 감축의 기로에 있을 때 자위대 재도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였다는 사실이다. 김일성은 '50년 한국전쟁을 일으켜 자위대 창설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김정일은 국제적으로 군축분위기가 한창이던 '98년 8월 대포동 미사일을 일본 상공으로 발사하여 군축의 기로에 있던 자위대의 재도약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것이다. 둘째, 냉전 이후 국제적인 군축분위기 가운데 G-8 국가 중 일본만이 유일하게 군사비를 증가시켰으며, 군사비 산정기준을 한국이나 NATO 국가의 기준으로 할 경우 그 규모는 발표액 보다 20% 이상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전력증강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면서 군사적으로도 강대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셋째, 2006년을 기점으로 일본은 군사지휘·명령 체제를 3군 병립형, 분권화 체제에서 수직형, 통합지휘체제로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군사대비태세 강화는 일본이 군사력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전력구조는 작지만 강한 군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지상군은 경량화·고기동화 중심으로 재편되며, 해·공군은 첨단화·대형화·장거리화 중심으로 재편하여 지구적인 戰力投射能力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군사력의 역할을 국제무대로 확장한다는 정책 전환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표면화되지 않은 일본의 안보전략과 방위정책들을 발굴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물론 신뢰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일본의 방위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자료를 참고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정책홍보 성격이 많은 것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사력의 내용면에서 작전계획과 같은 군사태세나 전술 그리고 첨단 군사과학기술 등 무형의 군사력 요소를 제시하지 못함으로서 정확한 군사능력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구나 미·일관계는 일본방위의 양대축 중 하나일 만큼 비중이 막대하여 제외시켰다. 향후 일본의 군사분야 연구시에는 미·일 동맹관계의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參考文獻

1. 국내자료

가. 단행본(서적 및 정부문서)

-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일본의 안보정책변화동향과 우리의 대처방안”, 『안보 정책 논총(2)』,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2002.
- 국방군사편찬연구소, 『일본연구』, 제2집, 서울: 군사편찬연구소, 1994.
- 국방관리 연구소, 『일본의 신방위계획』 제 86 - 125호, 서울 : 국방관리연구소, 1986.
- 국방대학교, 『안보관계용어집』, 서울: 국방대학교, 2001.
- 국방부, 『 200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4
- 국방정보본부, 『세계 군사동향(』 2005 - 2006),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 국방정보본부, 『2005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5.
- 국방정보본부, 『2000년 일본 방위백서』, 서울: 국방정보본부, 2000.
- 권영식 외, 『국방지리』, 서울 : 박영사, 1980.
- 민병천, 『한국 방위론』, 서울: 고려원, 1996.
- 박병구, 『한중일 석유전쟁』, 서울 : 한스미디어, 2006.
- 빅터차, 『적대적 제휴』, 서울: 문학과 지성, 2004.
- 배정호, 『일본의 국가전략과 한반도』, 서울 : 통일연구원, 2001.
- 신학용 외, 『일본의 대외위기론과 팽창의역사적 구조』, 신학용의원실, 2005.
- 세종연구소, 『국가전략』 1권 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 윤덕민, 『일본의 군사력동향과 동아시아』, 서울: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1.
- 이석수 외, 『안보정책 수립 교육 모델』, 서울: 국방대학원, 1998.
- 이서항, 『일본의 방위태세강화와 중국의 군사력강화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03.
- 임덕순, 『정치지리학 원론』, 서울 : 일지사, 1978.
- 외교통상부, 『일본개황』, 서울 ; 외교통상부, 2004.
- 예관수 편, 『군사학대사전』, 서울: 세문사, 1964.
- 장문석, 『현대 일본 군사론』, 서울: 국방대학원, 1997.

정영수, 『일본의 방위정책과 전략』, 서울: 국방참모대학, 1998.

차영구 외, 『국방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오름, 2002.

최경락·정준호·황병무 공저, 『국가안전보장 서설』, 서울: 법문사, 1989.

최종기, 『국제관계론』, 서울: 박영사, 1970.

한국발전문제연구소, 『일본의 군사력』, 서울: 한국발전문제 연구소, 1996

E.O.라이샤워, 『일본은 어디로 갈 것인가?』 김기실 譯, (서울: 기문사, 1982)

Knorr, Klaus, 『군사력과 군사잠재력』 국방대학교 譯, (서울: 국방대학교, 1976)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국방대학교 譯 『군사이론』 (서울: 국방대학교, 1985)

나. 논문, 연구문(학위 및 학술지)

김국현, “국방정책” 『국방연구』 41권 1호, 서울: 국방대학원, 1998.

김년수, “미일동맹과 일본의 군사력강화”, 『군사논단』, 통권46호, 한국군사학회, 2006.

김문소, “일본의 방위력 변화”, 서울: 국방참모대학, 1993.

김부배,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와 외교안보 대응전략”,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6

김성룡, ‘일본의 군사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발전문제연구소편, 『일본의 군사력』, 서울: 다사로, 1996.

김진동,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국방대학교, 1999.

박기련, “미국의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의 변화”, 대전: 충남대, 2004.

박정규, “한반도 해양전략발전에 관한 연구”, 대전: 충남대학교, 2004.

박홍석, “일본과 한반도 안전보장의 지정학 담론”, 『국제정치논총』 39집1호(서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서형덕, “일본의 안보전략과 군사강대화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1997.

손열, “역사 속에서의 21세기 일본: 미국의 패권과 한일관계”, 『日本研究論叢』 14권, 서울: 현대일본학회, 2001.

안병한, “21C 한반도 안보전략 방향에 관한 연구”(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양택남, “일본의 안보, 군사역할 확대가 동북아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방대학교, 2000.

윤공용,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이강녕, “일본의 방위정책과 전력증강” 『통일로』 통권176, 안보문제연구원, 2003.

이근석,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국가안보정책의 발전방향”, 인천: 인하대학교, 2004.

이민룡, “한국의 국가군사전략”,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 1997.

이영식, “일본의 해상자위대 전력증강이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종연구소, 1997.

이장규, “미일안보협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향에 관한연구”, 경희대학교, 2005.

이창우, “일본의 군사강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1999

이 황, “일본의 군사능력증대와 한국의 안보”, 서울: 경희대학교행정대학원, 2004.

임동원, “한국의 국가전략” 『국가전략』 1권 1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5

장문석, “일본의 안보·군사역할 확대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 『국방연구』, 제40권 제2호, 국방대학원, 1997

장윤구, “일본의 보통국가론 분석”, 서울: 한남대학교, 2006

전성훈, “한국의 국가이익과 국가전략” 『국가전략』 5권 2호, 서울: 세종연구소, 1999

전재성, “구성주의 국제정치이론과 남북관계” 『교수논총』 24집, 국방대학교, 2002.

정준호, “국가안보의 개념과 전개” 『안전보장 이론』, 국방대학교, 2002

정창식, “일본의 SLOC 방위와 한국안보”, 『호국』, 서울: 국방부, 1997

진창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과 한국의 대응” 『정세와 정책』 통권 107호, 서울 : 세종연구소, 2005.

최병갑, “비교국방정책론” 『국방연구』 제26권 1호, 서울: 안보문제연구소, 1995.

홍규덕, “적대적 제휴: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체제”, 동아일보, 2004. 10. 08

홍광남, “일본의 군사력 운용의 이중적 접근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 국방대학교, 2000

황일형, “일본의 군비증강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 국방대학교, 1995

다. 기타

인터넷. <http://www.yahoo.co.jp/>

인터넷. <http://ja.wikipedia.org/wiki/>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http://www.mlit.go.jp/>

일본 방위청 정보본부 홈페이지. <http://www.jda.go.jp/join/dih/>

일본 방위청 홈페이지. <http://www.jda.go.jp/>

일본 통합막료감부 홈페이지. <http://www.jda.go.jp/join/>

2. 외국자료

- 加藤 武, “海自期待の 新世代戦闘艦,” 『軍事研究』, 1995年 6月号, (東京: 軍事研究社, 1995),
- 驚見友好, 『日本の 軍事費』, 東京, 學習の 友社, 1984
- 防衛年鑑刊行會, 『防衛年鑑』, 東京: 株)防衛年鑑刊行會, 1982
- 防衛日報, 『自衛隊年鑑』, 東京: 防衛日報社, 2006
- 防衛廳, 『日本の 防衛』, 東京: 防衛廳, 2006
- 三根生 久大, 『軍事用語の 知識』, 東京: 陸書房, 1983
- 石田貫太郎, 『國際關係論のフロンティア』, 東京: ミネルヴァ 書房, 2003
- 日本防衛年鑑刊行會, 『防衛年鑑』, 東京: 防衛年鑑刊行會, 1994
- 財務省, 「平成18年度 豫算 吳 財政投融资 計劃説明」, 第164回 國會報告, 東京: 財務省, 2006
- 株)軍事研究, 『軍事研究』, 1995年 6月號, 東京: 軍事研究社, 1995
- 朝雲新聞社, 『防衛ハンドブック』, 平成16年版, 東京: 朝雲新聞社, 2004
- 朝雲新聞社, 『自衛隊裝備年鑑』, 2002-2003, 東京: 朝雲新聞社, 2002
- Art, Robert J. “The Role of Military Powers in International Relation”. in Thomas Trout and James E. Harf(eds.) *National Security Affairs*, New Brunswick and London: Transaction Books, 1982
 - Hartland-Thunberg, Penelope. “National Economic Security : interdependence and vulnerability”, in Frans A. M. Alting von Geusau, Jacques Pelkmans(eds.), *National Economic Security*, Tilberg: John F. Kennedy Institute, 1982
 - Joint Chief of Staff Pub. No.1,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Superintendent of Documents (Washington D.C: US Gov. Printing Office, 1972)
 - Jordan, Amos A. & Taylor, Jr, William J. *American National Security : Policy and Process*, Baltimore :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81
 - Knorr, Klaus *The War Potential of N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 Lider, Julian *Military Theory*, England: Gower Publishing Company Limited, 1983
- Lippmann, Walter *U.S. Foreign Policy; Shield of the Republic*,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43.
- Osgood, Robert E. *Limited Wa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3.
- Wright, Quincy *The Study of International Relation*, New York: Appleton Century Crofts, 1955

ABSTRACT

A Study concerning the influence to which military reinforcement of Japan effects R.O.K security

Seo, Jeong-Woong

Major in East Asia Region Information

Dept. of Int'l Area and Information Stud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Hansung University

Following their defeat in WWII, Japan was in a state of military zero-base. However, North Korea's invasion of the South made Japan begin rearmament. As a result of the continuous reinforcement of their military power, they now have capabilities which exceed defense requirements. The bolstering of Japan's military will affect the balance of power, and threaten the stability of Northeast Asia and will also have a major influence to the Korean peninsula.

The roll of military power is to function not only as the last bulwark of protection for national interest but also as a means of influencing international politics. Japan and Republic of Korea have a history of clashes due to their strategic locations at an intersection of ocean and land power. Korea must consider this latest power trend in Japan, in light of Japan's historical inclination to use military force rather than political negotiations.

In the year of 2004, Japan Self-Defense Force system's policy has expanded from emphasizing defensive strategics to incorporating international activities. This new system does not limit military power to defending against external invasion, and allows Japan to favorably influence on international politics. Participating in positive world-peace making activities is just a means to further their military power, and increase their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two years Self-Defense Force command system shared equal

power between the three military branches. In the beginning of 2006 they changed from a command order system to an integrated operation system. They insist this allows for greater flexibility to conduct multiple operations as well as faster reaction to international conflict. However, this also increases their military threat to neighboring countries.

Japan has the third highest military budget, behind the United States and China, and they are equipped with the most high-tech weapon systems available. Though their small military has only 240,000 soldiers, they are highly mobile and technologically advanced.

Japan is intensively upgrading its long-range transportation capability by both air and sea, as well as integrating strategic surveillance systems. They are increasing their importance and influence through the current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which requires use of military power.

Japan's level of military readiness and projection capability is having an indirect influence on the stability and peace of Northeast Asia,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is could have the effect of increasing Korea's security. However, it also has the potential to create an arms-race in the region. Korea's security would be heavily burdened if disagreements, such as the ownership of Dok-Do Island, were to become problematic.

Therefore, the Korean government must be aware of the heightened readiness and preparations Japan has made. First, Korea must have adequate self-defense capabilities to deter Japan military aggression. Secondly, Korea must build and maintain goo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bolster security. Thirdly, Korea and Japan must have military communications: The purpose should be to cultivate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high-level military intelligence and facilitate exchange of technology. Finally, Korea must try to create a security cooperation organization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an arms-race with Japan. This can be accomplished with the encouragement and backing of the United States.